

시 보

선	기관의 장
람	

all ways INCHEON

제2026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2년 4월 21일 목요일

조 례

○ 인천광역시조례 제6818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4
○ 인천광역시조례 제6819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	8
○ 인천광역시조례 제6820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 인천광역시조례 제6821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7
○ 인천광역시조례 제6822호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24
○ 인천광역시조례 제6823호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 인천광역시조례 제6824호 상위법 제정 및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61
○ 인천광역시조례 제6825호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	69
○ 인천광역시조례 제6826호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	74
○ 인천광역시조례 제6827호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8
○ 인천광역시조례 제6828호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82
○ 인천광역시조례 제6829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87
○ 인천광역시조례 제6830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92
○ 인천광역시조례 제6831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96
○ 인천광역시조례 제6832호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99
○ 인천광역시조례 제6833호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106
○ 인천광역시조례 제6834호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8
○ 인천광역시조례 제6835호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111
○ 인천광역시조례 제6836호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114
○ 인천광역시조례 제6837호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20
○ 인천광역시조례 제6838호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6
○ 인천광역시조례 제6839호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9
○ 인천광역시조례 제6840호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132

회
람

 인천광역시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조 례

○ 인천광역시조례 제6841호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139
○ 인천광역시조례 제6842호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3
○ 인천광역시조례 제6843호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149
○ 인천광역시조례 제6844호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51
○ 인천광역시조례 제6845호 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156
○ 인천광역시조례 제6846호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160
○ 인천광역시조례 제6847호 인천광역시 약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64
○ 인천광역시조례 제6848호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	166
○ 인천광역시조례 제6849호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175
○ 인천광역시조례 제6850호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80
○ 인천광역시조례 제6851호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82
○ 인천광역시조례 제6852호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86
○ 인천광역시조례 제6853호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3
○ 인천광역시조례 제6854호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197
○ 인천광역시조례 제6855호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199
○ 인천광역시조례 제6856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207
○ 인천광역시조례 제6857호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9
○ 인천광역시조례 제6858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211
○ 인천광역시조례 제6859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25
○ 인천광역시조례 제6860호 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28

규 칙

○ 인천광역시규칙 제3245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33
○ 인천광역시규칙 제3246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246
○ 인천광역시규칙 제3247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73
○ 인천광역시규칙 제3248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276
○ 인천광역시규칙 제3249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20
○ 인천광역시규칙 제3250호 인천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344
○ 인천광역시규칙 제3251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364
○ 인천광역시규칙 제3252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	417
○ 인천광역시규칙 제3253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20
○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21호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개정규칙	426
○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22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442
○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23호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453

훈 령

- 인천광역시훈령 제1239호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 477
- 인천광역시훈령 제1240호 인천광역시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 498
- 인천광역시훈령 제1241호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515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06호 일반수도사업인가[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1단계)] 고시 520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072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글로벌아시아상호문화센터) 52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103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공고(㈜엘리비전) 52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118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공고(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 524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37호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525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38호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안 입법예고 528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39호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39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48호 인천광역시 119특수구조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45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49호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57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50호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65

기 타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2-119호 관인등록 공고(징계심의위원회) 582

조 례

인천광역시 조례 제6818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장 우 삼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6818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이란 지적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있는 인지능력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경계선지능으로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파악하여 각종 학습프로그램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경계선지능 학생 실태파악 및 필요한 검사 시행
2. 교재개발 및 학습프로그램 지원
3.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4. 교원 연수 및 학부모 교육
5.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판별하기 위해 진단검사를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이 의심되거나 경계선지능으로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결과를 통보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통한 전문검사 및 지원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2.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심층 전문검사 실시
3. 경계선지능 학생 전문상담 및 교재 개발
4. 인지·학습능력 발달과 정서·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5.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기관과 연계
6.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사항

1. 제정이유

경계선지능으로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능력 향상과 학교생활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제1조~제3조)
- 나.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4조)
- 다. 진단검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제5조, 제6조)
- 라. 관계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제7조)

인천광역시 조례 제6819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장 우 삼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6819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생태·환경 보전을 실천하는 식습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교급식”이란 학교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4. “채식급식”이란 식물성 식재료를 사용하여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학교급식으로 수산물, 유제품 및 난제품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식생활의 다양성과 식습관의 개선 등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과 식품 선택에 대한 가치관 등의 사유로 채식을 원하는 학생에게 채식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채식급식 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의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건강과 식품 선택에 대한 가치관 등의 사유로 채식급식이 필요한 학생 현황, 채식급식 만족도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선도학교) ① 교육감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선도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등을 대상으로 채식 영양 및 식습관 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부모와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채식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채식 생활 권장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교육감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 및 건강과 식품 선택에 대한 가치관 등의 사유로 채식급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교육감은 학교의 채식급식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사항

1. 제정이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생태·환경 보전을 실천하는 식습관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제1조~제3조)
- 나.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제4조)
- 다. 채식급식 수요 등 실태조사 및 선도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제5조, 제6조)
- 라.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제7조, 제8조)
- 마.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 관련 포상과 협력체계 구축(제9조, 제10조)

인천광역시 조례 제6820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장 우 삼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6820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다문화가정 학생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p><u>제4조의2(사업) 교육감은 다문화 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u> <u>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u> <u>3.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

개정 사항

1. 개정이유

다문화가정 학생이 교육현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의2)

인천광역시 조례 제6821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장 우 삼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6821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교육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물”이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건축물과 인천광역시 내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건축물을 말하며, 부속건축물(창고, 사택, 숙직실, 조립식건물 등)은 제외한다.
2.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개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D(미흡) 또는 E(불량)인 교육시설물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C(보통)인 교육시설물로 보수·보강 및 노후 건물개선에 필요한 비용이 개

축사업비의 100분의 70 이상 소요되는 경우

3. 교사 적정배치 계획에 장애가 되고 부지활용도에 지장을 초래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시설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교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하게 개축이 필요한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 등으로 개축사업비가 확보되었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

4. 국가시책으로 개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예산복지담당서기관, 안전총괄과장, 학교설립과장, 교육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교육시설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나. 건축사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그 밖에 교육 또는 교육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회의) ①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계 직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촉위원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사항

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교육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개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3조)

나.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제4조~제8조)

다. 위원회 회의 및 의견 청취,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제9조~제13조)

인천광역시 조례 제6822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장 우 삼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6822호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교육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 지방교육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

다.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 사실, 이송 기관 및 이송 사유를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처리)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를 해당 교육규칙의 소관 부서 또는 업무 담당 부서(이하 “담당 부서”라 한다)에서 검토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7조(의견의 반영) 교육감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교육감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3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 표 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해당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검토결과서

의견제출인	성명 제출일자		
제출의견			
소관부서 및 검토자	부서명 담당자성명 담당자연락처	검토일자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내용	수용여부/사유 등 작성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교육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정 사항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제20조에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이 부여되고 그 방법과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주민의 교육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2조)

나. 주민의 교육규칙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 방법과 교육감의 의견제출서 검토 및 처리, 의견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제7조)

다. 의견제출에 따른 차별대우 금지에 관한 사항 규정함(제8조)

인천광역시 조례 제6823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장 우 삼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6823호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본청 :”을 “본청:”으로, “의하여”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관서 :”를 “제1관서:”로, “같다)중”을 “같다)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교육지원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교육지원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관서 :”를 “제2관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장:”을 “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당해”를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를 “제2항에 따른 위임사무 처리를”로, “지정함으로써 이에”를 “지정하는 것으로 이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물품관리”를 “물품 관리”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를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같은 호 중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를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관한 처리절차는”을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으로 한다.

제5조 중 “별표 1에 의한다”를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 구분) 물품의 정리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의 제목 “(물품매입 등의 요구)”를 “(물품 매입 등의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때”로,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를 “물품 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물품매입요구의 심사)”를 “(물품 매입 요구의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을 “제8조”로, “때에는”을 “때”로,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하”를 “않”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분임물품출납원”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기증사실”을 “기증 사실”로, “취득여부”를 “취득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교부함과 동시에 수령사실”을 “교부하고 수령 사실”로,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물품 분류의 전환) 물품관리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0조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 분류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 중 “비품”을 “비소모품”으로, “수입한 물품 및 공급하는”을 “구입한”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구입물품”을 “구입 물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해당 제작품의 완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를 “계약자에게 지급한 물품 금액과 인수할 때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관리전환에 의한”을 “관리전환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물품의 이월) 물품출납공무원은 연도 내에 출납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물품을 동일한 분류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용의 결정”을 “불용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일정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 중

“수리하여도”를 각각 “수리해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수선함”을 “수선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이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물품에 대하여는”을 “물품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긴급처분을 요하는”을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수리하여도”를 각각 “수리해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선을 요하는”을 “수선이 필요한”으로, “수선함”을 “수선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그 밖에 내용연수”를 “내용연수”로, “재활용”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조직 개편, 업무 이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리전환하기 위해 불용결정한 경우로서 받는 기관이 정해진 물품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매각대금이 매각”을 “매각”으로, “남음”을 “남는 매각대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제1항에 따라 매각 처분”으로,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를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처분하는”을 “처분할”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물품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를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를 “재무관이 물품을

매각할 때”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매각처분한다”를 “매각 처분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등에 의한”을 “등”으로, “하여도 처분되지 아니하는”을 “해도 처분되지 않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변질·부패 기타”를 “변질·부패, 그 밖”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폐기처분”을 “따른 폐기 처분”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대해서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물품출납원은”을 “물품출납공무원이”로, “때 에”를 “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물품출납원은”을 “물품출납공무원이”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을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전용자가”로, “물품출납원에게”를 “물품출납공무원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전용품의 경우에는 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중 “물품출납원은”을 “물품출납공무원이”로, “조사하여”를 “조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물품출납원은”을 “물품출납공무원이”로, “때 에”를 “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때에 제1관서에 있어서는 교육감에게, 제2관서에 있어서는”을 “때에는 제1관서의 장은 교육감에게, 제2관서의 장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교육장은”을 “교육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상명령은 그 후의”를 “변상명령이 있는 후에”로, “그에”를 “변상판정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물품출납원의 장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을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장부 이외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전산입력 처리하는”을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는”으로, “장부비치”를 “장부 비치”로 한다.

제25조 본문 중 “비품관계”를 “비소모품 관련”으로, “매년도”를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연도구분을 명백히”를 “연도 구분을 명확히”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은 소관 사무에 대한 증명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중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를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그 검사원은 소속”을 “소속”으로, “지정한 자로 하여금”을 “검사원이 지정한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분임물품출납원”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

며, 같은 항 단서 중 “검사 또는”을 “검사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분임물품출납원”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검사원은”을 “검사원이”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8조제1항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당해 물품출납원”을 각각 “해당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31조 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에 따라”로,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마감하여 인계연원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를 “마감하고 인계한 연원일을 기입하여 인계자와 인수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 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사유로의 사고로 말미암아”를 “사유로”로, “사람으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람이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34조 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제36조 및 제37조로 하고,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중요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교육감은 법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매 회계연도 1회 이상 인천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5조 앞에 “제6절 보칙”을 삭제한다.

제36조 앞에 “제6절 보칙”을 삽입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개정규정에 따른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여 구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개정 20 . . . >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1. 물품의 분류

가. 비소모품: 품질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나. 소모품: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및 그 밖에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물품구분 기준

가. 비소모품

- 1)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않는 물품
- 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의 물품
-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한 물품

나. 소모품

-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 2)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 3)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사용 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 4)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

3. 물품상태 분류기준

가. 신품: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나. 중고품: 사용한 물품으로서 수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

다. 정비필요품: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물품

라. 폐품: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별표 2] <개정 20 . . . >

물품출납 이동부의 정리구분

구 분		구 분 내 역
구	입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양	수	물품을 받는 경우
차	용	물품을 빌리는 경우
생	산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편	입	공유재산을 물품에 편입하는 경우
부	생	없어졌던 물품이 다시 생겨난 경우
양	도	물품을 주는 경우
대	여	물품을 빌려주는 경우
공유재산편입		물품을 공유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매	각	물품을 파는 경우
해	체	물품을 해체하는 경우
폐	기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망	실	잃어버린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반	납	사용 중이거나 빌린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관	급	물품을 공사·시설용 관급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자	연	자연 손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관	리	물품 관리권을 이동하는 경우
분	류	물품의 분류번호, 물품명 등을 바꾸는 경우
사	용	동일 물품관리관 산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상호 간의 물품 이동의 경우
공	차	물품을 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빌리는 경우
무	상	무상으로 물품을 넘겨주는 경우
기	증	물품을 기증받는 경우
잡	건	위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이동의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u>본청</u>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u>의하여</u>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1. <u>본청</u> : ----- ----- <u>따른</u> ----- ----- --.
2. <u>제1관서</u> : 본청의 소속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원·학생 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2. <u>제1관서</u> : ----- ----- ----- ----- ----- ----- ----- <u>같</u> <u>다) 중</u> ----- -----.
3. <u>교육지원청</u>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	3. <u>교육지원청</u>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4. 제2관서 : 교육지원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
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
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
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
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관서의 장 : 제1관서와 제2관
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
감”이라 한다)은 당해 교육비특
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물품
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교육
지원청과 제1관서 및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각
각 당해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
게 위임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4. 제2관서: -----

-----.

5. ---- 장: -----

-----.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 (이하 “교
육감”이라 한다)은 해당 -----

-.

② -----

해당 -----

-----.

③ ----- 제2항에 따른 위임

사무 처리를 -----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물품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생략)

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다. 당해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

2.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당해 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지
정하는 것으로 이를 -----
-.

제4조(위임사무) ① -----
----- 제3항에 따라 -----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 물품 관리-----

다. 해당 -----
-----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에 -

2. -----
-

해당 -----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에 -----
--

② 제1항에 따른 -----
-----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
-----.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
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
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
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
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
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
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
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
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수급관
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
부와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
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
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
다.

제5조(물품의 분류) -----
----- 별표 1과 같다.

제6조(물품의 정리 구분) 물품의
정리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물품 매입 등의 요구) ----

-- 때 ----- 물품출납
공무원-----
----- 물품 매입·수리·제
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
-----.

제9조(물품 매입 요구의 심사) ①
----- 제8조-----
----- 때

----- 제58조
에 따라 -----

-----.

② -----
--- 않-----

--.

제10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취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수령사실을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물품의 분류 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기증품의 취득) ① -----

-----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기증사실-----

----- 취득 여부-----
-----.

② 제1항에 따라 -----

-- 해당 -----

- 교부하고 수령 사실-----
물품출납공무원-----.

제12조(물품 분류의 전환) 물품관리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0조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 분류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이하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공급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해당 제작품의 완성
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
3. 4. (생략)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
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생략)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
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
여는 이월의 출납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결정과 불용품의 소요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
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소모품

구입한 -----

-----.

제14조(물품의 가격) -----
----- 따른다.

1. 구입 물품-----
2. ----- 계약자에게 지급한
물품 금액과 인수할 때까지 -

3. 4. (현행과 같음)
5. 관리전환한 -----

6. -----
- 않는 -----

7. (현행과 같음)

제15조(물품의 이월) 물품출납공
무원은 연도 내에 출납되지 않
은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로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
으로 보고 해당 물품을 동일한
분류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결정과 불용품의 소요

조회)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후, 교육감 소속기관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생략)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생략)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합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생략)

② 제1항이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

조회) ① -----

----- 불용결정-----

-----.

1. (현행과 같음)
2. ----- 일정 기간-----

3. (현행과 같음)
4. -----
수리해도 -----

5. (현행과 같음)
6. ----- 수리해도-----

7. -----
수선하여 사용하는 것-----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물품은 -----

-----.

1. ----- 긴급하게 처분

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합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신 설>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납금이 없을 경우

할 필요가 있는 -----

2. ----- 수리해도 -----
3. ----- 수리해도 -----
4. 수선이 필요한 ----- 수선하여 사용하는 것--
5. 내용연수----- 재활용하는 것-----

6. 조직 개편, 업무 이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리전환하기 위해 불용결정한 경우로서 받는 기관이 정해진 물품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라 -----

-----.

1. 매각----- 납는 매각대금-----

2.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 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에게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생략)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

2.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매각 처분-----
-----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

-----.

③ (현행과 같음)

④ ----- 처분할 -----

-----.

----- 물품은 감정평가법인
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

----- 따라 ---
-----.

⑥ (현행과 같음)

⑦ 재무관이 물품을 매각할 때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불용품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매각처분한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1. 관리전환·양여·매각 등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여도 처분되지 아니하는 물품
2. 변질·부패 기타의 사유로 매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0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용품에 대하여는

경우-----
-----.

⑧ -----
--- 매각 처분한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

-----.

1. ----- 등 -----
----- 해도 처분되지 않는 -----
2. 변질·부패, 그 밖-----

-

② ----- 따른 폐기 처분-----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보관책임) ① ----- 물품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

② ----- 대해서 물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자로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공차증을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 관서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금고에 보관하거나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의 망실 훼손 보고) ①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

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공무원이 -----
----- 때에-----

-----.

② 물품출납공무원이 -----

-----.

제22조(물품의 망실 훼손 보고)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전용자가 -----

----- 물품출납공무원에게 -----
다만,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전용품의 경우에는 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이 -----
----- 조사하

하여 의견을 붙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관서의 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 물품
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 에는 사
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관서의 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④ 관서의 장이 물품출납원으로
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 제1관서에 있어서
는 교육감에게, 제2관서에 있어
서는 교육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야 한다.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22조
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공유재
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8조 및 영 제87조
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
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

고 -----

-----.

③ 물품출납공무원이 -----
----- 때에 -----

-----.

④ ----- 물품출납공무원-

--- 때에는 제1관서의 장은 교
육감에게, 제2관서의 장은 ----

--.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 교육장이 -----

-----.

② ----- 변상명령이 있을 후
에 -----
-- 변상판정에 ---.

제24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

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은 영 제66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제25조(장부의 작성)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

①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③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장부 이외의 -----
-----.

④ 제1항에 따라 -----
-----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는 -----

장부 비치-----.

제25조(장부의 작성) 비소모품 관련 ----- 매년 -----

----- 연도 구분을 명확히 -----
-----.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은 소관 사무에 대한 증명서류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 관리---

이,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
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
육감 또는 교육장,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
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
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
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
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
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
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
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
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하
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
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
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 공사감
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

-----.

② 제1항에도 -----

----- 인정할 때에는 -----

-----.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

물품출납공무원-----
----- 소
속 ----- 검사
원이 지정한 사람이 -----
-----.

② -----
----- 물품출
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 검사하거나 -----
-----.

③ -----

----- 분임물품출

출납원이 검수한다.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
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
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
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 관서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
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
자가 각각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
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
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
계하여야 한다.

제32조(인계의 절차)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물품출납원의 장
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원일을 기
입하고 인계인수자가 각각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인
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사무인

납공무원-----.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이
----- 제28조제1항에 따라 -

----- 따른 -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

-----.

② -----
--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

--.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
품출납공무원-----

-----.

제32조(인계의 절차) ① 제31조에
따라 -----
----- 물품출납공무원--
-- 마감하고 인계한 연원일을
기입하여 인계자와 인수자----
-----.

② 제1항에 따른 -----

제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
출납원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의 사고로 말미
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
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 관서
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
정한 사람으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
야 한다.

제34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
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 개
편으로 인하여 그에 속하는 사
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
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
계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절 보칙

<신 설>

-----.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
출납공무원-----
----- 사유로 -----

-----.

제34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
무인계) 물품출납공무원-----

-----.

제35조(중요 물품 운영상황의 공
개) 교육감은 법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매 회계연도 1회 이상 인천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야 한다.

① <삭 제>

제6절 보칙

제35조 · 제36조 (생략)

[별표 1]

물품의 품종 · 상태 구분

1. 물품의 분류

가. 비품 - 비품이라 함은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나. 소모품 - 소모품이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
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
물 및 그 밖에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물품구분 기준

가. 비품 - (1)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
품

(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
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한 물품

나. 소모품 -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
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
운 물품

(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3)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
설공사에 투입사용 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
실하는 물품

(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4)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미
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3. 물품상태 분류기준

가. 신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나. 중고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
니하는 물품

다.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라. 폐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별표 2]

물품출납, 이동부의 정리 구분

제36조 · 제37조 (현행 제35조 및
제36조와 같음)

[별표 1]

물품의 품종 · 상태 구분

1. 물품의 분류

가. 비소모품: 품질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
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나. 소모품: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및 그 밖에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물품구분 기준

가. 비소모품

1)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
에 속하지 않는 물품

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
원 이상의 물품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한 물품

나. 소모품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2)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
품

(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3)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
사에 투입사용 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
품

(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4)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

3. 물품상태 분류기준

가. 신품: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나. 중고품: 사용한 물품으로서 수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

다. 정비필요품: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물
품

라. 폐품: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별표 2]

물품출납, 이동부의 정리 구분

구 분	구 분 내 역	구 분	구 분 내 역
구 입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구 입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양 수	물품을 <u>양수</u> 하는 경우	양 수	물품을 <u>받는</u> 경우
차 용	물품을 <u>차용</u> 하는 경우	차 용	물품을 <u>빌리는</u> 경우
생 산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생 산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편 입	공유재산을 물품에 편입하는 경우	편 입	공유재산을 물품에 편입하는 경우
부 생	<u>물품을 부생</u> 하는 경우	부 생	<u>없어졌던 물품이 다시 생겨난</u> 경우
양 도	물품을 <u>양도</u> 하는 경우	양 도	물품을 <u>주는</u> 경우
대 여	물품을 <u>대여</u> 하는 경우	대 여	물품을 <u>빌려주는</u> 받는 경우
공유재산편입	물품을 공유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공유재산편입	물품을 공유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매 각	물품을 <u>매각</u> 하는 경우	매 각	물품을 <u>파는</u> 경우
해 체	물품을 해제하는 경우	해 체	물품을 해제하는 경우
폐 기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폐 기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망 실	<u>망실된</u>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망 실	<u>잃어버린</u>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반 납	<u>사용중인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와 대여한 물품 또는 임차한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u>	반 납	<u>사용 중이거나 빌린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u> <u>물품을 공사시설용 관급자재로 사용하는 경우</u>
관 급	물품을 <u>관급</u> 하는 경우	관 급	자연 <u>손실된</u>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자연감 모	자연 <u>감모된</u>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자연감 모	<u>물품 관리권을</u> 이동하는 경우
관리 전환	<u>물품관리권을</u> 이동하는 경우	관리 전환	물품의 <u>분류번호, 물품명</u> 등을 바꾸는 경우
분류 전환	물품을 <u>분류 전환</u> 하는 경우	분류 전환	동일 물품관리관 산하 <u>분임물품출납공무원 상호 간의</u>
사용 전환	동일물품관리관 산하 <u>분임물품출납공무원 상호 간의</u> 이동	사용 전환	<u>물품 이동의 경우</u>
공 차	물품을 <u>일시적으로 공용 차용</u> 하는 경우	공 차	물품을 <u>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빌리는</u> 경우
무상 양여	무상으로 <u>양여</u> 하는 경우	무상 양여	무상으로 <u>물품을 넘겨주는</u> 경우
기 증	물품을 <u>기증 받는</u> 경우	기 증	물품을 <u>기증받는</u> 경우
잡 건	위의 구분에 해당되지 <u>아니하는</u> 물품이동의 경우	잡 건	위의 구분에 해당하지 <u>않는</u> 물품 이동의 경우

개정 사항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고려하여 비소모품과 소모품의 구분 기준을 정비하고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물품을 불용결정한 경우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조직개편, 업무 이관 등의 사유로 불용결정한 경우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 나. 물품 분류기준 구체화 및 비소모품 취득단가 상향(별표 1)
 - 비소모품 취득단가: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상’
-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인천광역시 조례 제6824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의회에서 의결된 「상위법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장 우 삼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6824호

상위법 제정 및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한다”를 “한다)이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위원회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감”을 “교육감 및 의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등의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등이 작성하거나 의원등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다.

제6조제2항 중 “소관 부서에서”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붙여야”를 “붙이고 의원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

안에 붙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조(「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지방자치법」 제148조”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및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 한다)이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위원회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원등”이라 한다)-----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교육감 및 의원등----- ----- -----

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②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③ (생략)

제6조(비용추계서 작성 부서 등)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 부서에서 작성 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소관 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교육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비용추계서 작성 부서 등)

① -----

----- 다만, 의원등의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등이 작성하거나 의원등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

③ -----

----- 불
이고 의원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 부서에서 시의회에 부의할 때 붙여야 한다.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붙여야 ---. <삭 제>
---	----------------------------------

2.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2. (생략)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 4. ~ 7. (생략) ② (생략)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 ----- 「지방자치법」 제148조----- ----- 4.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

주차장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4.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제1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그 소속 기관에서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와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 ----- ----- ----- -----.

개정 사항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사항 반영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개정하고 의안의 비용추계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비용추계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개정(제1조)

나.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제1조~제4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825호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하구 공동이용 촉진 및 민간선박 자유항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평화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강하구”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제1조제5항에 따라 민간선박의 항행에 개방된 인천광역시 내 수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4.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강하구 평화정착을 위한 관련 정책 연구 및 사업 발굴
2. 한강하구와 관련한 평화 교육 및 시민실천 프로그램 운영
3. 한강하구 평화정착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
4. 한강하구 평화정착을 위한 국·내외 홍보
5.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협회의 설치) 시장은 한강하구 평화정착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협회의 기능)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협회의 구성) ① 협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업무 소관 부시장, 남북업무·해양수산업무 담당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

다. 한강하구 인접 지역 주민

라. 그 밖에 한강하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회의 위원장은 남북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⑤ 협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공동이용 촉진 및 민간선박 자유항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평화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다.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사업,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라.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826호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 및 그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공존 가치를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인천광역시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와 인근 수역(이하 “서해5도 접경수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적 범위는 서해 북방한계선 이남과 「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업한계선 이북에 위치한 인천광역시의 관할 도서 및 수역으로 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

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에 관한 사항
2. 서해5도 접경수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포럼, 세미나 및 국제회의 등 국내·외 교류
2. 시민 대상 교육 및 홍보, 참여 활성화 행사
3. 자료 수집 및 보존, 실태조사 등 연구사업
4. 그 밖에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탁 등) 시장은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인천광역시 소속기관, 출연·출자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시 예산의 범위에

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관리)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협력) 시장은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과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접경지역 관련 시·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 및 지원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서해5도 접경수역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다. 서해5도 접경수역 지원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라. 예산지원, 보조금관리, 협력,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부터 제11조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827호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등에 있어서”를 “등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2조”를 “「지방공무원법」 제2조”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의회사무처”를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비정규직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용역·도급

근로자를 말한다.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3항 중 “청취하여”를 “들어”로 한다.

제5조 중 “다른 법령이나”를 “다른”으로, “없는 한 이 조례가”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로,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부계획 추진실적 및 성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 중 “동종”을 “같은 종류”로, “하여서는”을 “해서는”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대해서는”을 “대하여는”으로, “등에 있어”를 “등에서”로 한다.

제15조 중 “준수하고”를 “지키고”로,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모성권·부성권이 보장될”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을 각각 제3항부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및 제5항(중전의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필요할 경우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개정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와 통합운영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규정 신설(제2조제5호 신설)
- 나.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 통합·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제7조제2항 신설 및 부칙 제2조)
- 다.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반영(제15조)
-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16조제2항 신설)
- 마.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제16조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828호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인천광역시 관내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말한다.
2. “가사근로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사근로자를 말한다.
3.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가사서비스 제공 온라인 플랫폼 이용 등을 통해 계약의 형식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

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사근로자 등”이란 가사근로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쾌적한 노동환경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관내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

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3. 그 밖에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일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2.6.16. 시행)에서 가사근로자뿐만 아니라 같은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직업소개소, 온라인 플랫폼 등 비공식 영역을 매개로 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다.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라. 가사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제7조)
- 마.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 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829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
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소관 분야 전문가
2.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의정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연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서기관이 되며,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의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실질적 위원회 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보완하여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에 포함되어 있는 설치규정을 분리하여 기능에 포함함(제1조 및 제2조)

나. 종전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등 타 조례와 중복되는 위원회 기능을 삭제하여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으로 변경하고 현행화하여 자문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함.(제2조)

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신설하고 각 상임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함.(제3조)

라. 위촉직 위원 위촉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개정함.(제3조)

마. 위원의 임기와 위원의 해촉을 분리하여 용어를 정리함.(제4조 및 제5조)

바. 위원장(부위원장) 신설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 등을 신설함.(제6조)

사. 회의 의결정족수를 신설함.(제7조)

아. 종전 각 상임위원회 직무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현행화하고 분과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운영세칙으로 정하게 하여 분과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제8조)

자. 위원회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서기관으로 하고, 분과위원회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하여 분과위원회를 탄력적 운영하고자 함.(제9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830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 중 “119종합상황실 및 소방항공대”를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제26조 중 “소방파출소, 구조대, 소방정대”를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소방정대, 119지역대”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법 제113조”를 “법 제126조”로 한다.

제3장제4절의3(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의3 119특수대응단

제26조의5(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이하 이 절에서 “특수대응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특수대응단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1204번길 195(운북동)에 둔다.

제26조의6(업무) 특수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특수재난 및 대형 재난사고의 구조·구난 활동
2. 헬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
3. 직할구조대, 119항공대 운영·관리
4. 특수구조기술 개발·보급 및 매뉴얼 작성

제26조의7(하부조직 등) 특수대응단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제4절의4(제26조의8부터 제26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의4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제26조의8(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하 이 절에서 “체험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체험관은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1로 120(가정동)에 둔다.

제26조의9(업무) 체험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대처·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의 제공
2.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전시
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4. 그 밖에 체험교육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6조의10(하부조직 등) 체험관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를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인천국민안전체험관”으로 한다.

◇개정이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장 사무분장 사항인 소방항공대를 삭제(제17조제4호)

나. 소방서 하부조직의 명칭 변경 및 추가(제26조)

다. 소방학교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직속기관)로 변경
(제26조의2)

라. 119특수대응단의 설치·업무·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신설(제26
의5부터 제26조의7까지 신설)

마.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설치, 업무,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신설
(제26조의8부터 제26조의10까지 신설)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831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381명”을 “7,50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948명”을 “3,958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소방본부·소방서·소방학교”를 “소방본부·소방서·소방학교·119특수대응단·인천국민안전체험관”으로, “3,291명”을 “3,40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7,505						
정무직 계	3						
정무직	3	1 (시장)					2 (위원장, 상임위원)
일반직 계	3,853						
1급	1				1		
2급	1				1		
23급	3	2	1				
3급	20	12		1	4	3	
34급	2	2					
4급	158	97	3	4	16	37	1
5급 이하 소계	3,661						
전문경력관 소계	7						
별정직 계	18						
1급 상당	1	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8	2	6				
5급 상당 이하 소계	9						
연구직 계	197						
연구관	33			25		8	
연구사	164						
지도직 계	29						
지도관	5			5			
지도사	24						
소방직 계	3,405						
소방정	20	8		12			
소방령 이하 소계	3,385						

◇개정이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2022.1.27.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확보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2022.4.15.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와 소방 조직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반직 및 소방직 정원 124명 증원(제2조)

- 총 정원 : 7,381명 → 7,505명(124명 증)
- 집행기관의 정원 : 3,948명 → 3,958명(10명 증)
- 소방본부 · 소방서 · 소방학교 · 119특수대응단 · 인천국민안전
체험관의 정원 : 3,291명 → 3,405명(114명 증)

나. 일반직 및 소방직 정원 증원(별표 3)

- 일반직 정원 : 3,843명 → 3,853명(10명 증)
- 일반직 5급 이하 정원 : 3,651명 → 3,661명 (10명 증)
- 소방직 정원 : 3,291명 → 3,405명(114명 증)
- 소방령 이하 정원 : 3,271명 → 3,385명(114명 증)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832호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분야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시 본청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실·국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다만, 시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영 제5조의3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고, 부의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2. 시 공사·공단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3.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제5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협회의 운영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

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는 출석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⑦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⑧ 회의록은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외에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⑨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9조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의장은 시 본청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의 부서장급 담당자로 구성한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시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의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등)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의 요구,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및 우체국 우편요금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제12조(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 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21.2.5.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 나.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9조까지)
- 다. 개인정보취급자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 라.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 마. 보험 또는 공제 등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833호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150원”을 “8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00원”을 “1,6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2.1.1.시행)됨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여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납세 편의증진 및 과세행정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800원”으로 정함.(제13조제1항)
- 나.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고지서 1장당 “500원”에서 “1,600원”으로 정함.(제13조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834호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법 제12조의3”을 “법 제12조의7”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법제4조”를 “「소상공인기본법」 제6조”로 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소상공인 기본법」 등 관련법 제·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재난 발생 피해 소상공인 지원시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연 및 사회재난 등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제6조의2)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835호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등) ①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른 갱신은 5년 단위로 3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갱신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법 제17조의2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조건은 당초의 사용·수익

허가조건으로 하고, 대부계약의 갱신 조건은 시장과 대부를 받은 사람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와 기간 등 조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 등을 규정함.(제9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836호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 또는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인천광역시 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공예문화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공예기술 발전과 공예인의 지위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명장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진흥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예문화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공예문화산업과 공예품 육성에 관한 사항
3. 공예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예문화산업의 창업과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5. 명장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공예품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예문화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공예문화산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진흥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명장의 선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5. 우수공예품 선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인천광역시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명장의 선정 등) ①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명장의 선정인원·선정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20년 이상 공예문화산업 분야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0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이 조례에 의한 동일 분야의 명장 또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4.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③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의 칭호를 부여하고 명장 인증서

를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장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3조제2항의 책무를 다하지 않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제8조(우수공예품 선정 등) ① 시장은 개발·보존 가치가 있는 공예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공예품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선정된 우수공예품에는 시장이 정하는 표시를 해당 공예품,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붙일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공예품에 대하여 공동 홍보물 제작 또는 공예품 판매장 입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우수공예품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1. 우수공예품으로서의 지정 가치를 잃었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공예품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⑤ 우수공예품 선정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예문화산업 관련 창업과 공예품 제작 지원

2. 공예문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
3. 공예품 유통활성화,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4.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과 정보교류
5.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한 생산과 개발
6. 공예품 전시와 거래 공간 조성
7.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인천광역시공예문화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4조(명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명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제2조)

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다. 진흥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라. 공예문화산업육성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마. 공예명장과 우수공예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바.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837호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과계약) 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당사자는 인천광역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성과계약서에 각각 서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② 시장과 원장이 체결하는 성과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경영 목표
3. 원장의 권한과 책임
4. 보수
5. 보수책정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방식 및 배점기준
6. 겸직제한 및 퇴직 후 취업제한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시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2. 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3.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서비스원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사회서비스원에 관리 위탁하거나 사용·대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내용

가. 성과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나.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다. 공무원의 파견 및 공유재산의 사용 등을 규정함.(제11조 및 제12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838호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호국봉안담”이란 장사시설 중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이하 “희생·공헌자”라고 한다)가 사망한 후 그 충의와 위훈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인천가족공원 내 조성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호국봉안담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호국봉안담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호국봉안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안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의3(호국봉안담 사용자의 자격 등) 호국봉안담의 안치 대상자는 관내 주민 중 희생·공헌자로 한정한다. 다만, 제2조제1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희생·공헌자를 포함한다.

별표 1 중 봉안 시설의 명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인천가족공원 추모의 집
- 인천가족공원 금마총
-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부속 봉안당
- 인천가족공원 만월당
- 인천가족공원 가족봉안묘
- 인천가족공원 평온당
- 인천가족공원 별빛당
- 인천가족공원 봉안담
- 인천가족공원 가족봉안담
- 인천가족공원 호국봉안담

별표 3 제3호 중 100분의 50의 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다만,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는 전액 감면한다.)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의 충의와 위훈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인천가족공원 내 호국봉안담이 조성된 바, 호국봉안담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치 대상자 선정 등 호국봉안담 운영주체의 명시화하고 희생·공헌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료 등 전액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호국봉안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제11항)
- 나. 호국봉안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의2 및 별표 1)
- 다. 호국봉안담 사용자의 자격을 규정함.(제6조의3)
- 라. 호국봉안담 사용료 등 전액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별표 3)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839호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출산대책”이란 임신·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의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같은 조례 제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인구정책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회 보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이에 대한 평가 등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 하여야”를 “실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 할”을 “위탁할”로 한다.

제16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제정(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인구정책 정의를 삭제함.(제2조제2호)
- 나. 중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5조)
- 다.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할 사항을 추가함.(제6조)
- 라. 의회 보고 사항을 정비함.(제7조)
- 마. 저출산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840호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채무를 상속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아동·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 대리 및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사람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범위)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시까지

②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법률지원시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구, 교육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1.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대리인 신청시 인적사항

- 성 명 (관계)
- 생년월일
- 주 소

2. 법률지원 요청내용

3. 재산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확인 동의 여부

동의() 부동의()

20 . . .

신청인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관리대장

1. 지원대상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법률지원 요청내용(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2. 지원내용, 진행사항 및 결과

3. 기타 참고사항

◇제정이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다. 지원 대상, 범위, 방법,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업무의 위탁 사항을 규정함.(제9조)

마. 법률지원 업무 담당자의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함.(제10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841호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 대상) 인천광역시 내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생활환경 및 가정상황 등으로 지역사회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 사업
7. 그 밖에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지원단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역 아동센터인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컨설팅 등 지원
2. 지역아동센터 외부 결연·협약을 위한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지원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운영·지원
4. 지역특성에 따른 아동복지 관련 조사·연구사업 지원
5. 특성화 시책 사업 및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추진업무 지원
6. 지역아동센터 평가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지원단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아동복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아동’, ‘지역아동센터’의 용어를 정의함.(제2조)

다.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 노력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제3조)

라.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을 관내 모든 아동을 규정하고, 단서 규정으로 우선 돌봄아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마. 센터의 사업으로 아동의 보호와 교육, 문화활동 지원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사업 등을 규정함.(제5조)

바.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및 급식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6조)

사. 센터의 사업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인천지원단의 설치 및 업무에 대한 사항, 지원단 위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842호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10. 기후변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 조사
· 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1. 해외 신종감염병의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2.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보수집, 특성분석, 연구 등을 통한 예방 및
대응 체계(매뉴얼을 포함한다) 마련

13. 감염병 진단, 치료 등에 필요한 의료용품의 조달, 비축을 위한 기관, 단
체 등과의 협력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시민이 성별, 장애, 나이,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정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
다.

⑦ 시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감염병”을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시행과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감염병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2. 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홍보
3.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5.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6. 감염병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7. 의료기관 의료감염관리 활동 전략 수립
8. 감염병 취약 집단별 맞춤형 교육·훈련
9.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를 “종합병원 중에서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0조 및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2.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3. 감염병관리지원단 위·수탁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의2(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인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의3(위원의 임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감염병 업무 담당국장
2. 인천광역시의회 감염병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
4.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장
5. 감염병 또는 감염병 관리를 전공한 의료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의4(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감염병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확대 수행하고,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 나.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7조)
- 다. 감염병의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9조의2)
- 라.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20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843호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학교예술강사의 지원) 시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학교예술강사를 두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교예술강사를 두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의2 규정에 따른 학교예술강사를 두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9조의2)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844호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부호·문자·음성·음향”을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로, “등의”를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을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를 “4년마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 제목 “(제작지원)”을 “(제작 및 사업화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생산활동”을 “제작 및 사업화 활동”으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투자조합 운영 지원)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 기업 투자 활성화 및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하여 출연기관 등을 통하여 전문투자조합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경과 및 결과를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국제교류 및 국외진출 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의 국제교류 및 국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 국외마케팅 사업

2. 문화콘텐츠 관련 국제행사 개최

3. 문화콘텐츠 관련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콘텐츠 국외진출 및 국제교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심의하기”를 “심의·자문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한다”를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항 중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을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인 되고”를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1명이 공동으로 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산업소관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하되”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위원장의 직무)”를 “(공동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를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을 보조하고,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투자조합 운영 지원과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현 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정비함.(제1조 및 제2조)
- 나.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확히 함.(제3조)
- 다. 투자조합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제6조의2)
- 라. 국제교류·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제8조의2)
- 마.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구성, 기능, 위촉위원 임기, 공동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규정 등을 정비함.(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845호

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인천광역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선수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6.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이나 이스포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성장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문화사업인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여가 활동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이스포츠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제4조)

다.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제5조 및 제6조)

라. 이스포츠 발전 공로에 대한 포상 규정(제7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846호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멸종위기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의 보호 및 교육·홍보를 위하여 건립된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이하 “생태학습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11-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업무) 생태학습관의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생태학습관 시설 관리 및 운영
2.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3. 저어새 체험·교육·홍보 등 시민인식 증진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 보호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생태학습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교육장
2. 홍보실
3. 사무실
4.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생태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그 밖에 시설의 보수·점검 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미리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제6조(이용시간) ① 생태학습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미리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생태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 범위, 절차 등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생태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국제 멸종위기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에 대한 보호 및 교육·홍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목적 및 위치(제1조 및 제2조)

나.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업무 및 시설(제3조 및 제4조)

다.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개관 및 휴관,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제5조 및 제6조)

라.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관리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제7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847호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으로, “: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서구 일원”을 “: 서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의 재원의 명칭과 사용 대상(대상지역)을 명확히 규정함.

◇주요내용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사용범위를 확대함.(제6조제2항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848호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배출기준”을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총유기탄소량(TOC)

제11조의 제목 “(배출기준)”을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을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32조제9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5조의 제목 “(배출 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를 “(배출허용

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제13조제3항 관련)

1. 산출공식

$$AS = (P \times R) \times \frac{BLi}{BLs}$$

- AS : 업소별 시설설치비 부담금
- P : 처리시설 소요비용
- R : 물가상승률
- BLs : 시설 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
- BLi :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2. 적용기준 및 산출방법

- 물가상승률(R) = 해당 연월의 물가지수 ÷ 준공 연월의 물가지수
 - 해당 연월 : 유입처리 승인 연월
 - 준공 연월 : 처리시설 준공 연월
 -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 월보의 생산물가지수 중 총 지수
- 시설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BLs) = 처리용량(m³/일)×[BOD+TOC+SS농도(mg/ℓ)]/1,000
-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BLi) = 배출량(m³/일)×[BOD+TOC+SS농도(mg/ℓ)]/1,000
 - 유량 및 오염농도 산정방법

구 분	대 상	산정방법
오염농도	폐 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받은 폐수 배출농도
	사업장의 오수	(BOD + TOC + SS) = 285mg/ℓ
	사업장 중 기숙사의 오수	(BOD + TOC + SS) = 570mg/ℓ
	주거지역 생활하수	(BOD + TOC + SS) = 570mg/ℓ
유 량	폐수 및 사업장의 오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받은 오수·폐수량
	주거지역 생활하수	입주예상 가구수×4인×0.2m ³ /인.일

[별표 2]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제14조제2항 관련)

1. 산출공식

배출사업자별 월간 비용부담금 (BS)

가. BS : 처리대상 오염물질 중 BOD, TOC, SS, T-N, T-P의 처리에 소요되는 월간비용

$$BS = M \times \left\{ 0.3 \frac{\sum_{i=1}^n BL_i}{\sum_{i=1}^n BL_i} + 0.7 \frac{\sum_{i=1}^n F(L_i)}{\sum_{i=1}^n F(L_i)} \right\}$$

(1) M : 월간 유지관리비 = 운영관리비 + 시설재투자적립금

(가) 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나) 시설재투자적립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처리시설 공사금액에 일정 적립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 시설재투자적립금 (E) = $E_i \times F_i \times R \times C_i$

1) E_i : 산출 시 현재 투자된 공사비용

- 처리장 준공 이후 증가된 재산가액은 익년도 총공사 금액에 포함
- 처리장 증설 공사비용은 하자책임기간(상하수도 기기설치 기준)까지 미포함

2) F_i : 처리시설별 시설재투자적립금 적립률 = 2/1,000

※ 시설용량 2,000m³/일 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1/1,000 적립률을 적용한다.

3) R : 물가상승률(전년도 생산자물가지수 ÷ 준공년도 생산자물가지수)

4) C_i :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

- 처리시설 가동률(%) = $\frac{\text{전월평균오·폐수발생량}}{\text{적립금 적용 처리시설 용량}} \times 100$
- 적립금 적용 요율

구 분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					
처리시설 가동률(%)	0 ~ 20 이하	20초과~ 40이하	40초과~ 60이하	60초과~ 80이하	80초과~ 90이하	90 초과
적립금 적용 요율	0	0.2	0.4	0.6	0.8	1.0

※ 최초 준공 후 처리시설 가동률이 50%이하인 경우 시장은 운영 여건에 따라 적용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2) BLi : 비용부담 대상자중 배출 사업자의 유입승인 오염부하량. 다만, 해당 월의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이 유입승인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 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유입승인 오염부하량(kg)

$$= \{ \text{유량} \times (\text{BOD} + \text{TOC} + \text{SS} + \text{T-N} + \text{T-P}) \} \times 1/1000$$

※ 오수 배출사업자의 경우 유량은 실제배출량으로 한다.

(3) F(Li) : 비용부담 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a \cdot Qi \times \left(\frac{b \cdot BODi + c \cdot TOCi}{2} + d \cdot SSi + e \cdot T-Ni + f \cdot T-Pi \right)$$

(가) Qi : 비용부담대상자의 오수·폐수 등의 배출량

(나) a, b, c, d, e, f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종별 계수

구 분	a	비 고
폐 수	1.5	
오 수	1.0	

2) BOD 계수

BOD 값 (mg/ℓ)	b	비 고
BOD ≤ 200	1.0	
200 < BOD ≤ 300	1.1	
300 < BOD ≤ 400	1.2	
400 < BOD ≤ 500	1.4	
500 < BOD ≤ 600	1.6	
600 < BOD	2.0	

3) TOC 계수

TOC 값 (mg/ℓ)	c	비 고
TOC ≤ 180	1.0	
180 < TOC ≤ 270	1.1	
270 < TOC ≤ 360	1.3	
360 < TOC ≤ 450	1.6	
450 < TOC ≤ 540	2.0	
540 < TOC ≤ 630	2.5	
630 < TOC	3.0	

4) SS 계수

SS 값 (mg/ℓ)	d	비 고
SS ≤ 200	1.0	
200 < SS ≤ 300	1.1	
300 < SS ≤ 400	1.2	
400 < SS ≤ 500	1.4	
500 < SS ≤ 600	1.6	
600 < SS	2.0	

5) T-N, T-P 계수

T-N 값 (mg/ℓ)	T-P 값 (mg/ℓ)	e, f	비 고
T-N ≤ 40	T-P ≤ 4	1.0	
40 < T-N ≤ 100	4 < T-P ≤ 8	1.1	
100 < T-N ≤ 200	8 < T-P ≤ 16	1.2	
200 < T-N ≤ 300	16 < T-P ≤ 32	1.4	
300 < T-N	32 < T-P	1.6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수·폐수 등의 유량산정

① 폐수, 침출수 등 배출사업자

○ 유량계를 설치한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배출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 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 미설치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사업자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② 오수 배출사업자

○ 유량계를 설치한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배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소장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times 0.9(오수전환율)

○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수 \times 100ℓ (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나. 오수·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①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 등)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 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사업자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이 경우 채수횟수는 배출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 배출사업자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사업자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사업자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 사업소장은 배출사업자가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오수의 경우

○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100 mg/ℓ (기숙사 200 mg/ℓ)
- TOC 85 mg/ℓ (기숙사 170 mg/ℓ)
- SS 100 mg/ℓ (기숙사 200 mg/ℓ)
- T-N 35 mg/ℓ (기숙사 40 mg/ℓ)
- T-P 4 mg/ℓ (기숙사 4 mg/ℓ)

○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사용기준 적용

◇개정이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오염물질 지표 변경 등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불필요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조항 삭제, 소규모 공공폐수처리시설 입주 사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시설재투자 적립률 조정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함.

◇주요내용

- 가. 오염물질 항목변경(COD→TOC)(제10조)
- 나. 상위법 조항 변경(법 제32조제8항→법 제32조제9항)(제11조)
- 다. 시설설치비산출지표 및 기준 변경[제13조]
- 라. 유지관리비 지원조항 삭제(제14조)
- 마. 유지관리비 산출지표 및 기준변경(제14조)
- 바. 소규모 공공폐수처리시설 대상 시설재투자적립금 적용요율 적용 단서 신설(제14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849호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수익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공유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충전시설 설치대상)”을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을 “시설로서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8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을 “제18조의5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행령 제18조의5제2호 시설

3. 시행령 제18조의5제3호 시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를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시행령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충전시설 설치비용)”을 “(충전시설 설치수량)”으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하고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한다.

②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은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축시설은 제외한다.

③ 제8조제1항제3호의 기축시설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며, 총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총주차대수 50개 이상인 기축 외의 시설은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2021.7.27.일자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확대 및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 축조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과 충전시설의 설치수량의 기준 등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충전의 용어 정의를 현 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 정비함.(제2조)
- 나.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확대 및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근거 신설함.(제7조)
- 다.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신설함.(제8조 및 제8조의2)
- 라. 충전시설(급속 충전시설 등)의 설치수량 신설함.(제10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850호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다만,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가.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직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이동편의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생활을 돕고자 함

나. 노인에 대한 배려와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따른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정책 방안 및 보편적 복지를 지향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65세 이상의 자에게 주차요금 감면 내용 신설(제4조의2)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851호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제12호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차양·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의 점

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를 “법 제61조”로 한다.

제5조 중 “80퍼센트로”를 “100분의 80으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 단위	기간 단위	을지	병지
전통시장의 차양·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개정이유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정비함.(제3조 및 별표)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852호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지원단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구성되는 실무반 중 자원봉사지원과 관련한 실무반 소속으로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소관 군·구 지원단의 위치
2. 소관 군·구 자원봉사자의 규모
3.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4.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④ 지원단의 운영여부는 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서 재난 피해상황의 심각성, 이재민 발생 여부, 재난의 지속기간 및 확대 가능성, 자원봉사활동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1명을 단독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을 조정·지원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대외협력팀

3. 현장과견팀

4. 자원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구성·업무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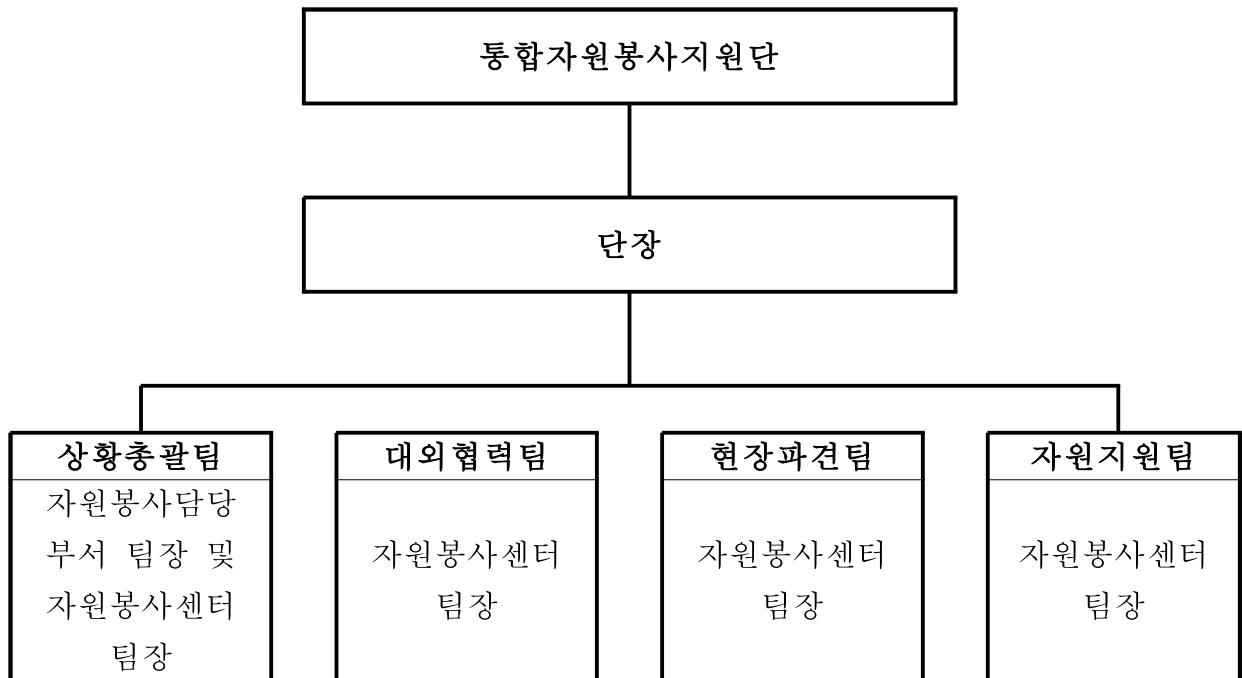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군·구 지원단 인력·자원 지원 현황, 군·구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천광역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인천광역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의 구성 및 업무(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구 성	업 무
상황 총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장: 자원봉사담당 부서 팀장 및 자원봉사센터 팀장 · 팀원: 자원봉사담당 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업무 총괄·조정 · 상황 보고서 작성 및 대책본부 보고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관련 예산 확보 및 행·재정적 지원 · 군구와 중앙기관과의 연계업무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활동 수요 파악
대외 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장: 자원봉사센터 팀장 · 팀원: 자원봉사담당 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 타기관 단체간 협력 지원
현장 파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장: 자원봉사센터 팀장 · 팀원: 자원봉사담당 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구 지원단 파견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현장 파견 상황 관리·보고 및 기타 현장 지원업무 추진
자원 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장: 자원봉사센터 팀장 · 팀원: 자원봉사담당 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원 가능한 보유 자원 재난 현장 배분 및 관리 · 자원봉사자 관리·지원 및 안전조치 · 타시도 재난자원 요청 및 관리

◇제정이유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라.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마.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853호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법 제13조제6호”를 “법 제13조제7호”로 한다.

제5절(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제22조의2(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① 법 제43조의5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5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거점사업 통합 시행방법 및 절차)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서로 연결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 구청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구역을 통합할 경우에 통합하는 사업시행 구역 사이에 서로 접하는 도로 등에 관한 처리계획을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2. 법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5까지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등) ① 법 제49조제1항 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만,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산식을 말한다. 다만,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text{용적률의 상한} = a + (b - a) \times c / 20$$

a: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5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c: 해당 임대주택 비율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등) ① 영 제41조의 2제1항제1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법 제49조의2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 또는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신청(사업시행계획변경에 따른 변경심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추가되는 용적률의 일부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신설.(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 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법과 절차를 신설.(제24조의2)
- 다.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최소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함.(제26조제1항 및 제2항)
- 라. 역세권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 적용 할 수 있는 변경되는 용도지역과 법적상한 용적률 적용에 따른 초과 용적률 중에서 시장 등에게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공동이용시설 등 건축물 면적 비율을 신설.(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854호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6814호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유지·관리하는 공원시설에 한정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군·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사용을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조례 제6814호와 같이 시행한다.

◇개정이유

군수·구청장이 유지·관리하는 공원시설에 한정하여 해당 군·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우선사용 허가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 이용 편
의 제고 및 건전한 여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군수·구청장이 유지·관리하는 공원시설에 한정하여 해당 군·구 주
민 우선사용 허가 근거를 신설함.(제7조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855호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놀 권리, 쉼 권리 및 놀이문화의 주체인 어린이들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도시공원의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이환경”이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 기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제반 환경을 말한다.
3. “놀 권리”란 어린이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

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5. “어린이놀이기구”이란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안전한 가운데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규모, 이용자 수요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층적인 놀이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놀이정책의 수립·집행의 전 과정에서 어린이의 놀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어린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놀이환경과 연계된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건전한 놀이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어린이놀이기구(이하 “놀이기구”이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 및 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도시공원에 적용한다.

제5조(기본방향) 놀이환경 및 놀이기구 구성에 관한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만든다.
2.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와 부모,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야 하며,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
3. 놀이시설은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을 경험하고 모험과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4.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용수요, 이용행태, 놀이시설 상호 간 기능 보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5. 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과 환경 및 안전을 고려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놀이환경 조성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과 놀이 문화 확산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놀이환경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2. 놀이환경 조성의 목표 및 시행 전략
3.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4. 대상지 선정 계획
5. 주민참여 방안 및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6.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관리·운영 계획
7. 놀이환경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8. 놀이환경 조성과 관련한 조례 및 제도의 개선
9. 그 밖에 시장이 놀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시민·관계 전문가 또는 군수·구청장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14조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한 경우 그 평가결과도 조성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놀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이나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사업) ① 시장은 어린이 중심의 놀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시설의 신규 조성 및 정비
2. 놀이시설 이용 및 놀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3. 놀이문화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및 교육
4. 놀이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놀이환경 조성 관련 정책·제도에 대한 연구회 및 토론회 등 개최
6. 그 밖에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군수·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의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제6조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놀이환경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놀이환경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어린이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분야 관계 공무원
3. 놀이시설 관련 조경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
4. 놀이시설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
5.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
6. 도시계획 및 어린이공원 설계·유지·관리분야 전문가

7. 관할 동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8. 그 밖에 어린이 및 어린이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놀이환경 조성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주민협의체) ① 어린이, 학부모, 주민단체 등 지역주민은 놀이시설의 설계·조성·관리 전 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의 활발한 운영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놀이활동가)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놀이활동가의 활동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운영

2. 놀이공간의 안전관리 및 놀이환경 개선

3. 놀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제13조(총괄기획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총괄기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놀이환경 조성·운영에 필요한 기본 디자인 및 계획 수립

2. 놀이시설 공간 활용을 위한 기획

3. 놀이시설 기본 설계 등에 대한 의견 제시·자문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놀이환경의 조성·운영에 필요하다고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검토

② 시장은 총괄기획가의 배치·자격요건·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기획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놀이환경의 평가) ① 시장은 놀이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놀이환경 평가지표(이하 “평가지표”라 한다)를 개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놀이시설의 관리·운영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지표를 보급·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정보제공) 시장은 제8조의 놀이환경 조성 사업에 따라 설치되거나 정비된 놀이시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능별 특징, 이용방법, 위치, 수량 등의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및 놀이문화 확산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가. 놀이란 어린이의 신체적·정서적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관계의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임.

나. 아동친화도시인증을 위하여 어린이의 놀권리가 중요함에도 어린이들이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는 미흡하고, 놀 권리에 대한 성인의 인식수준 또한 저조한 실정임.

다. 이에 어린이 자신의 연령에 맞는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관련용어 정의(제1조 및 제2조)

나.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 환경 조성과 놀이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제3조)

다. 놀이 환경 조성 시 준수되어야 할 기본방향에 대한 규정(제5조)

라. 놀이 환경 조성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6조 및 제7조)

마. 놀이 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사업과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제8조 및 제9조)

바.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 환경 조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10조)

사. 원활한 놀이 환경 조성과 놀이문화 확산 등을 위한 주민협의체, 놀이 활동가, 총괄기획가에 대한 사항(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놀이 환경 조성 정책 추진과 놀이 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지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제14조 및 제15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856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제3호과목 중 “한함) 및 압축천연가스”를 “한함), 압축천연가스
충전소 및 수소자동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수소자동차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내 수소충전소 건축이 제한되어있는 규정에 대해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수소충전소 구축 활성화 및 수소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58조제2항제3호파목)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857호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중개에 대한 보수(이하 “보수”라 한다)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2021.10.19.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주택 중개 보수의 한도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조례에서 정하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의 한도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에 따르도록 개정함(제2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858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
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
성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일반 공중을 위하여 시,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시 예산이 투입된 군·구 사업, 시로 기부채납 예정 사업, 시에서 관리 예정인 사업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제3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른다.

1. 공공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 구현
2.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 정체성과 독창적 이미지 형성
3. 심미성과 쾌적성, 기능성과 안전성 확보
4. 지속가능성 및 친환경성 추구
5. 창의적인 예술성 추구
6.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7.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이하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 한다)

8.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조성하거나 변경 또는 개선(이하 “범죄예방도시디자인”이라 한다)

9.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시민과 협력하여 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제시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등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
3. 공공디자인에 관한 제도개선과 주요 시책
4.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인천시보

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표준디자인 및 기준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 적용과 시행을 위하여 표준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표준디자인 및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3장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표준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기준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
4. 우수공공디자인의 인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자문대상은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1. 공공공간 조성사업: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2. 공공시설물: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3. 공공시각매체: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4.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군수·구청장이 발주하는 사업 중 국비 또는 시비 지원이 없는 경우
3.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기본적인 외부디자인 변경 없이 공공시설물등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4.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등의 연속성을 위해 추가 설치하는 경우
5.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6.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디자인 심의를 거친 경우
7. 재해·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 및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서 제외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회 심의 결과 시행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받은 사항,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공사, 설계공모 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는 심의·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위원회에 대한 심의·자문 요청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하며, 기본설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 도시·건축·조경·토목·교통·환경·디자인·조명·미술·색채·예술·범죄예방도시디자인·공공조형물·모두를 위한 디자인·영상매체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심의·자문 안건 관련 분야 위원 10~15명 이상을 참석 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담당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관리 및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에 한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실·국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3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의 진흥

제17조(공공디자인업무 협의 등) ①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디자인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 대상 공공시설물등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2.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 외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에 관한 협의 요청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자인 관련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 수립 시
2.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필요할 경우. 다만,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경우 기본설계 완료 전

③ 디자인관련 협의요청을 받은 시 디자인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행사업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2. 사업내용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적정성
3. 기존시설물과의 디자인 통합 및 이미지 연계
4. 진흥계획과의 연계성

④ 디자인전담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디자인자문관) ① 시장은 디자인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를 디자인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디자인자문관의 임기는 해당 사업의 추진 기간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디자인자문관에 대한 위촉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③ 디자인자문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디자인안의 공모)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과 민간참여를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모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자인 심의 시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 또는 취소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디자인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와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며,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별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대상(제8조제4항 관련)

분 류		세 부 항 목
공공공간		공원, 광장(지하광장 포함), 자전거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도로 시설물	도로 시설물	가로등, 펜스, 볼라드, 신호등주, 버스 및 택시쉼터, 지하철·지하보도출입구, 외부 엘리베이터, 자전거보관대, 방음벽, 교량,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편의 시설물	벤치, 파고라, 가로화분대(플랜터), 수목보호덮개, 관광안내소, 음수대, 분수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휴지통, 간이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공급 시설물	맨홀덮개, 지하철 환기구, 배전함, 신호등 및 가로등 제어함, 제설함, 소화전, 전화부스, 전신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도로 시각 매체	교통관련 시각매체	공공 및 사설안내표지, 주차장안내표지 및 주차요금표지, 버스 및 택시 정류장표지, 버스 및 지하철 노선안내도,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보행관련 시각매체	보행자안내표지, 지역안내사인, 관광안내표지, 관광안내도, 문화재설명표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영상정보 시각매체	대기 오염 전광판, 교통 상황 전광판, 버스정보 전광판, 디지털 영상매체,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환경연출 시각매체	벽화·슈퍼그래픽, 공사장가설울타리·가설가림막,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상기 시설물 중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심의(자문)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디자인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법령 취지 및 실정에 맞도록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제명변경: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명)
- 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다.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마. 공공디자인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6조까지)
- 사.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및 디자인자문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7조 및 제18조)
- 아. 공공디자인 공모 및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9조 및 제20조)
- 자. 공공디자인 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1조)
- 차. 법령 용어로 정비함.(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8조)
- 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별표)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859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관리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 및 기본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3.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 제3호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관계 법령 등 제도 보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할 경우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당사자들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주요내용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의2)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860호

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트센터인천 뮤지엄(이하 “뮤지엄”이라고 한다) 건립 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3.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4. 뮤지엄 자료의 수집·제작·보존, 연구와 평가에 관한 사항
5. 뮤지엄의 전시·공간계획과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

6. 뮤지엄의 종합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뮤지엄 건립 업무 소속 본부장

나. 인천시립박물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상당의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뮤지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뮤지엄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원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위촉 일부터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필요한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뮤지엄 건립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뮤지엄 건립업무의 업무담당자이다.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뮤지엄 직제가 확정되어 개관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한다. 다만,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시행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뮤지엄 건립을 차진 없이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8조까지)

다. 전문위원과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및 제10조)

라. 존속기한과 시행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및 제12조)

규 칙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245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2항제10호 중 “산업재해예방”을 “지역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소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종사자 등에 대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제3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 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제14조제3항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시와”를 “시와 시의회, 시와”로 한다.

제16조의3제8항제5호 중 “지도·단속, 범칙어선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지도·단속, 범칙어선 행정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허가”를 “지원 및 관리 등”으로 한다.

6. 근해어업 허가·신고, 연근해어업 허가 제도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항 중 “119종합상황실, 119특수구조단, 119화학대응센터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을 “119종합상황실 및 119화학대응센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행정과장·회계장비과장·예방안전과장·119재난대책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119종합상황실장·119특수구조단장·119화학대응센터장·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을 “소방행정과장·회계장비과장·예방안전과장·119재난대책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119종합상황실장·119화학대응센터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5호를 제3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소관 사업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중대 시민 및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전에 관한 사항

제17조제4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e사람 급여 시스템 운영, 보수공제 등 소방본부 급여업무(연말정산 포함)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0항제14호 중 “지원”을 “지원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 및 제15항을 각각 삭제한다.

31. 빅데이터 및 영상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소방행정서비스 개선방안 발굴에 관한 사항

제24조제3항제36호를 제3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및 소방정대”를 “119안전센터 · 119구조대 · 소방정대 및 119지역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6. 119원의 기적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⑧ 119안전센터 · 119구조대 · 소방정대 및 119지역대에는 각각 119안전센터장 · 119구조대장 · 소방정대장 및 119지역대장을 두며, 119안전센터장 · 119구조대장 · 소방정대장은 소방경으로 119지역대장은 소방위로 보한다. 제24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19안전센터장, 119구조대장 및 소방정대장”을 “119안전센터장 · 119구조대장 · 소방정대장 및 119지역대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119지역대장

가. 소방정보 수집 및 순찰업무

나. 화재의 예방 및 진압과 구급업무

다. 소방대상물 및 위험물제조소 등의 검사

라. 소방용수 시설의 조사

마. 소방서장 및 119안전센터장이 명하는 민원업무처리

바. 기타 소방에 관한 사항

제3장제4절의3(제24조의4 및 제24조의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의3 119특수대응단

제24조의4(특수대응단장) 119특수대응단(이하 “특수대응단”이라 한다)의 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24조의5(하부조직) ① 특수대응단에 운영지원과, 직할구조대 및 119항공대를 둔다.

② 운영지원과장, 직할구조대장 및 119항공대장은 각각 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사무의 종합기획·조정·평가 및 대외 홍보
2. 인사·복무·상훈·교육훈련 및 감사(감찰)
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업무
4. 예산, 회계, 계약, 물품·장비 등 행정재산 관리
5. 특수재난현장의 구조대책수립
6. 대테러 소방안전대책(훈련, 비상근무, 합동점검 등) 추진 및 유관기관(대테러센터, 국가정보원 등) 업무 협의
7. 소방무인비행장치(드론) 총괄 운영 관리
8. 그 밖에 특수대응단 내 다른 과(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직할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재난 시 긴급구조활동 지휘·통제
2. 특수·대형재난 발생시 구조 활동 및 지원
3. 특수구조기술 개발·보급 및 매뉴얼 작성
4. 구조·기동 장비 등 각종 장비 운용·관리
5. 첨단장비를 활용한 인명탐색 구조활동 및 지원, 대테러 대응 업무

⑤ 119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헬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 활동 및 훈련
2. 항공안전, 항공정보 및 시험비행 등
3. 항공기·부대장비 정비 및 유지관리
4. 공중방역과 방제지원에 관한 사항
5. 항공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훈련 등

제3장제4절의4(제24조의6 및 제24조의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의4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제24조의6(체험관장)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24조의7(하부조직) ① 체험관에 체험지원과, 체험기획과 및 체험운영과를 둔다.

② 체험지원과장, 체험기획과장 및 체험운영과장은 각각 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체험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복무·상훈·교육훈련 및 감사(감찰)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업무
3. 예산, 회계, 계약, 물품·장비 등 행정재산 관리
4. 운영보조인력(용역, 사회복무요원) 관리
5. 루원안전공원(서구 봉오재1로 120 일원) 관리
6. 그 밖에 체험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체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사무의 종합기획·조정 및 대외 홍보
2. 체험·전시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3. 대외기관 업무협약 및 교류
4. 체험관 운영 통계 및 성과 분석
5. 체험객 예약 관리 등 홈페이지 유지·관리

⑤ 체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체험 등 체험존 운영
2. 체험객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
3. 교관요원 역량강화 및 능력발전
4. 전시·체험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선

제45조의3에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4. 소관 사업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중대 시민 및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구급상황센터·119특수구조단”을 “구급상황센터·119특수대응단”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소방학교·소방서를”을 “소방서·소방학교·119특수대응단·인천국민안전체험관”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지출원의 제1관서란 중 “소방서는”을 “소방서·소방학교·119특수대응단·인천국민안전체험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에 “소방학교”를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인천국민안전체험관”으로 한다.

[별표 2] 119안전센터 등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제24조 관련)

서별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인천 중부 소방서	중앙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204(항동6가)	중구 : 중앙동, 해안동, 항동1가~6가, 관동, 송학동, 신포동, 도 원동, 북성동, 선린동, 유동, 경동, 을목동, 용동, 사동, 답동, 신생동, 신흥동1가~2가, 선화동, 내 동, 인현동, 항동7가 1~26번지 일원, 신흥동3가 1~35, 36(36-0제외), 39번지 일원 웅진군 : 연평면, 덕적면, 자월면
	연평119 지역대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로 821번길 35	옹진군 : 연평면
	덕적119 지역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덕적북로 113	옹진군 : 덕적면
	자월119 지역대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서로 86	옹진군 : 자월면
	송현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9(송현동)	동구 : 송현동, 송림동 일부(8의10, 8의22, 8의23, 8의2 6~27, 8의78, 8의80, 8의257, 8의26, 2~263, 8의 292, 8의299, 8의301, 8의309, 8의344, 8의3, 67~ 370, 8의386, 8의441, 8의445, 8의490, 8의564~ 568, 10의 6, 11, 12의3, 13의1, 18의1, 19의1, 20 의1~2, 20의4, 20의8, 20의15, 20의31, 264, 266의 1, 294~297, 304, 305, 307, 310, 312, 318~ 320, 322, 324~333번지 일원)
	송림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동구 셋골로 133(송림동)	동구 : 금곡동, 창영동, 송림동 일부(8의10, 8의22, 8의23, 8의 26~27, 8의78, 8의80, 8의257, 8의262~263, 8의292, 8 의299, 8의301, 8의309, 8의344, 8의367~370, 8의386, 8의 441, 8의445, 8의490, 8의564~568, 10의6, 11, 12의3, 13의1, 18의1, 19의1, 20의1~2, 20의4, 20의8, 20의15, 20의31, 264, 266의1, 294~297, 304, 305, 307, 310, 312, 318~320, 322, 324~333번지 제외)
	만석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동구 제물량로 396(만석동)	동구 : 만석동, 화평동, 화수동 중구 : 전동, 송월동
	연안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118번길 114(항동7가)	중구 : 신흥동3가 36의0, 37~38, 40~84번지 일원, 항동7가 27~126번지 일원
	백령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남로 30	옹진군 : 백령면, 대청면
	대청119 지역대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로 244번길 45	옹진군 : 대청면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397(항동7가)	중부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소방정대	인천광역시 중구 연연부두로128번길 16(항동7가)	중구, 동구, 옹진군 지역 항만 일원

서별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인천남동소방서	구월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14(구월동)	남동구 : 구월동
	만수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07(만수동)	남동구 : 만수동(만수2·3·4·5동)
	간석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21(간석동)	남동구 : 간석동
	담방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1044(만수동)	남동구 : 만수동(만수1·6동), 수산동
	서창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70	남동구 : 서창동, 운연동, 장수동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14(구월동)	남동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인천부평소방서	갈산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24(갈산동)	부평구 : 갈산동, 청천동
	부평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8(부평동)	부평구 : 부평1·4·6동, 부평5동 일부(10, 98, 104, 112~113, 115~116, 118~119, 124, 126~127, 132, 134, 136, 143~144, 156~158, 161, 165~167, 169, 171~172, 174~178, 188~191, 208~209, 364~369, 371, 376, 443 ~450, 452, 453~463, 466~510, 512~518, 915~916번지 제외)
	십정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111(십정동)	부평구 : 십정동
	산곡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198(산곡동)	부평구 : 산곡동, 부평동(부평2·3동)
	부개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로 6(부개동)	부평구 : 부개동, 일신동, 구산동, 부평5동 일부(10, 98, 104, 112~113, 115~116, 118~119, 124, 126~127, 132, 134, 136, 143~144, 156~158, 161, 165~167, 169, 171~172, 174~178, 188~191, 208~209, 364~369, 371, 376 44 3~450, 452, 453~463, 466~510, 512~518, 915~916번지 일원)
	삼산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252(삼산동)	부평구 : 삼산동
인천서부소방서	연희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2(심곡동)	서구 : 연희동, 공촌동, 심곡동
	가좌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678번길 17(가좌동)	서구 : 가좌동(가좌2·3·4동)
	신현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333-1(신현동)	서구 : 가정동, 신현동
	석남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 102(석남동)	서구 : 석남동, 가좌동(가좌1동)
	검단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91(왕길동)	서구 : 마전동, 왕길동, 금곡동 일부 (금곡동 31-1~278-1, 640~720, 산17~34)

서별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인천 서부 소방서	오류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대촌로 6(오류동)	서구 : 오류동, 금곡동 일부(금곡동 212-2~237-2, 338-4~590-12)
	검암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74(검암동)	서구 : 백석동, 시천동, 검암동, 경서동
	원당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81(원당동)	서구 : 불로동, 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대곡119 지역대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 129(대곡동)	서구 : 대곡동
	청라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대로 77(청라동)	서구 : 청라동
	원창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123	서구 : 원창동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2(심곡동)	서부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정서진 119수난구조대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623(시천동)	경인아라뱃길(인천터미널 ↔ 별말교)
인천 공단 소방서	고잔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8(고잔동)	남동구 : 논현고잔동 일부(137, 139~150, 165~172, 223~272, 500, 511~515, 975번지)
	옥련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창랑로155번길 7(옥련동)	연수구 : 옥련동, 청학동
	도림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 667(남촌동)	남동구 : 도림동, 남촌동 연수구 : 선학동
	동춘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241(동춘동)	연수구 : 연수동, 동춘동
	논현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109(논현동)	남동구 : 논현1동 일부(1, 66~68, 109~111, 179, 549, 557, 651~682, 775번지 제외), 논현2동
	소래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코중앙로 86 (논현동)	남동구 : 논현1동 일부(1, 66~68, 109~111, 179, 549, 557, 651~682, 775번지), 논현고잔동 일부(137, 139~150, 165~172, 223~272, 500, 511~515, 975번지 제외)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8(고잔동)	공단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인천 계양 소방서	작전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774(계산동)	계양구 : 계산동(계산3·4동), 용종동, 병방동, 서운동, 작전동(작전1동)
	계산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557(계산동)	계양구 : 계산동(계산1·2동), 임학동
	장기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서로 14(장기동)	계양구 : 방축동, 박촌동, 동양동, 굴현동, 상야동, 하야동, 평동, 노오지동, 이화동, 오류동, 갈현동, 독실동, 목상동, 다남동, 선주지동, 장기동 일원
	효성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96-1(효성동)	계양구 : 효성동, 작전동(작전2동)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774(계산동)	계양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서별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인천 미추홀 소방서	신기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주안동)	미추홀구 : 주안동(주안2·3·7동), 용현동(용현1·4동), 학 익동
	주안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	미추홀구 : 주안동(주안1·6동), 도화동(도화1동)
	도화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고개로 85(도화동)	미추홀구 : 도화동(도화2·3동), 주안동(주안5동)
	용현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376(용현동)	미추홀구 : 용현동(용현2·3·5동)
	관교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450(관교동)	미추홀구 : 문학동, 관교동, 주안동(주안4·8동)
	숭의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51 (숭의동)	미추홀구 : 숭의동(숭의1·2·3·4동)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226-1(학익동)	미추홀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인천 강화 소방서	불은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274-1	강화군 : 불은면, 양도면, 선원면
	양도119 지역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 702	강화군 : 양도면
	두운119 지역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562-3	강화군 : 불은면
	강화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문로 23번길 11	강화군 : 강화읍, 송해면
	길상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마니산로 93	강화군 : 길상면, 화도면
	화도119 지역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785-2	강화군 : 화도면
	내가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강화서로 235-1	강화군 : 내가면, 양사면, 삼산면, 교동면, 하점면, 서도면
	양사119 지역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전망대로 1319	강화군 : 양사면
	삼산119 지역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북로 454	강화군 : 삼산면
	교동119 지역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남로 28	강화군 : 교동면
	하점119 지역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1247번길 12	강화군 : 하점면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강화대로 879	강화소방서 북부권역 - 강화읍, 선원면, 송해면, 하점면, 양사면, 내가면, 교동 면
	119산악 구조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785-2	강화소방서 남부권역 - 화도면, 길상면, 양도면, 불은면, 삼산면

서별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인천영종소방서	공항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268 464(운서동)	중구 : 운서동 일부(공항구역 내) 옹진군 : 북도면
	북도119 지역대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로 164	옹진군 : 북도면(모도리, 시도리, 신도리)
	장봉119 지역대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로 566	옹진군 : 북도면(장봉리)
	운서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흰바위로27번길 16 (운서동)	중구 : 운서동 일부(공항구역 제외), 운북동
	운남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116(운남동)	중구 : 중산동, 운남동
	용유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서로128번길 1 (을왕동)	중구 : 남북동, 을왕동, 덕교동, 무의동
	무의119 지역대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 310-11 (무의동)	중구 : 무의동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대교고속도로 3-1(운남동)	영종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인천송도소방서	미래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첨단대로 60번길 15(송도동)	연수구 : 송도3동
	신송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92(송도동)	연수구 : 송도1동, 송도2동
	국제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412(송도동)	연수구 : 송도4동, 송도5동
	영흥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 283-32	옹진군 : 영흥면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첨단대로 60번길 15(송도동)	송도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개정이유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사무를 사업장별로 분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무를 조정하며, 소방본부 조직개편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기능과 소관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노동정책담당관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6조의6제2항제12호 신설)
- 나. 안전정책과에 중대시민재해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7조의2제3항제30호 신설)
- 다. 총무과에서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이관되는 산업안전보건 업무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14조제3항제15호)
- 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와 시의회 간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14조제4항제2호)
- 마. 수산과장의 업무분장 중 타 부서 소관 및 군·구로 위임된 규정을 정비함.(제16조의3제8항제5호, 제6호 및 제18호)
- 바. 소방본부 소관 119특수구조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시 직속 기관화에 따른 직제 규정을 정비함(제17조제1항 및 제2항)
- 사. 소방본부 소관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중대재해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17조제3항제35호 신설)
- 아. 소방본부 소관 119특수구조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직제 규정을 삭제함.(제17조제13항 및 제15항 삭제)
- 자. 소방 하부조직에 119지역대 추가에 따른 직제 규정을 정비함.(제2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별표 2)
- 차. 시 직속기관으로 전환되는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7까지 신설)
- 카. 상수도사업본부의 중대재해 관련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45조의3제44호 신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246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총 계	7,505	2,379	118	3,425	297	1,262	24
정무직 소계	3	1					2
정무	3	1					2
시장	1	1					
위원장	1						1
상임위원	1						1
일반직 소계	3,853	2,126	111	90	297	1,207	22
1급	1				1		
관리관	1				1		
2급	1				1		
이사관	1				1		
2-3급	3	2	1				
이사관·부이사관	3	2	1				
3급	20	12		1	4	3	
부이사관	20	12		1	4	3	
3-4급	2	2					
부이사관·서기관	2	2					
4급	158	97	3	4	16	37	1
서기관	68	44	3	2	7	11	1
기술서기관	29	13			6	10	
서기관·기술서기관	58	40		1	3	14	
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	1			1			
기술서기관·어촌지도관	1					1	
서기관·기술서기관·해양수산연구관	1					1	
5급	631	403	19	10	65	130	4
행정	293	199	15	6	30	39	4
사회복지	2	2					
사서	1					1	
공업	36	10			4	22	
농업	4	4					
녹지	15	6			2	7	
해양수산	4	4					
보건	5	4			1		
간호	1	1					
환경	9	8			1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역 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시설	111	67	2	1	16	25	
방송통신	7	5			1	1	
행정·사회복지	11	9				2	
행정·사서	6	1				5	
행정·숙기	1		1				
행정·공업	11	4				7	
행정·농업	5	1				4	
행정·녹지	2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3	3					
행정·환경	5	5					
행정·시설	30	24			6		
행정·방재안전	2	2					
행정·학예연구	4	1				3	
행정·방송통신	2	2					
행정·운전	1	1					
공업·환경	2	2					
공업·시설	12	4				8	
농업·수의	2	2					
녹지·환경	1	1					
녹지·시설	1	1					
녹지·녹지연구	1					1	
수의·수의연구	4	1		3			
해양수산·어촌지도	1					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1					1	
보건·간호	6	6					
보건·환경	1	1					
환경·시설	2	2					
시설·방송통신	1				1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공업·시설	2	1	1				
행정·공업·방송통신	1	1					
행정·녹지·환경	3	1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해양수산·환경	2	2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공업·보건·식품위생	1	1					
공업·보건·환경	1	1					
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1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행정(임시정원)	1	1					
보건·간호(임시정원)	1	1					
의무(임시정원)	1	1					
행정·보건(임시정원)	1	1					
6급	1,380	881	51	18	111	310	9
행정	527	373	37	8	38	63	8
세무	32	30			1	1	
전산	62	47	2	2	4	6	1
사회복지	12	12					
사서	7	1				6	
공업	114	42			8	64	
농업	15	11				4	
녹지	25	12			4	9	
수의	6	3		3			
해양수산	18	18					
보건	20	18			2		
간호	6	6					
환경	30	25	1		4		
시설	249	157	3		36	53	
방송통신	25	14			5	6	
행정·세무	4	4					
행정·전산	4	4					
행정·사회복지	16	14	1			1	
행정·사서	4	2				2	
행정·공업	5	3			1	1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2	2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행정·간호	1	1					
행정·환경	6	5			1		
행정·시설	21	18			3		
행정·학예연구	1					1	
전산·방송통신	3	3					
공업·시설	22	2	1		1	18	
녹지·환경	3	3					
녹지·시설	1					1	
녹지·녹지연구	2					2	
수의·수의연구	1			1			
해양수산·환경	2	2					
해양수산·어촌지도	6	1				5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2					2	
보건·간호	4	4					
보건·환경	2	2					
보건·보건연구	1	1					
환경·시설	2	2					
시설·방재안전	2	2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보건·간호	1	1					
공업·보건·환경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운전	15	5	2	1	3	4	
간호조무	1			1			
위생	2	1		1			
속기	1		1				
방호	4	3	1				
토목운영	1					1	
통신운영	3	1	1			1	
전기운영	15	1				14	
기계운영	35	1				34	
열관리운영	1					1	
사무운영	17	7	1	1		8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행정(임시정원)	1	1					
보건(임시정원)	2	2					
간호(임시정원)	1	1					
보건·간호(임시정원)	3	3					
의료기술·약무(임시정원)	1	1					
보건·의료기술·간호(임시정원)	1	1					
7급	1,336	664	31	44	87	504	6
행정	436	276	21	12	27	96	4
세무	11	10				1	
전산	39	25		2		12	
사회복지	18	15				3	
사서	13	2	1			10	
공업	168	32		6	4	126	
농업	14	5				9	
녹지	31	12			4	15	
수의	3	1		2			
해양수산	9	9					
보건	13	9		2	2		
간호	4	4					
환경	24	17			3	4	
시설	224	114	1	2	32	75	
방재안전	2	2					
방송통신	25	13	1	1	4	6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7	5	1			1	
행정·사회복지	10	8				2	
행정·사서	4					4	
행정·공업	3	1	1		1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3	2	1				
행정·시설	24	18			6		
행정·방재안전	3	3					
행정·방송통신	2	1			1		
세무·전산	1	1					
전산·방송통신	4	4					
공업·환경	5	5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공업·시설	23	4				19	
공업·방송통신	1					1	
농업·수의	2	1		1			
녹지·환경	1					1	
녹지·시설	3	2				1	
수의·수의연구	7	2		4		1	
해양수산·환경	2	2					
해양수산·시설	1	1					
해양수산·어촌지도	3					3	
보건·간호	6	3			1	2	
보건·환경	1	1					
환경·시설	1	1					
시설·방송통신	1					1	
시설·방재안전	1	1					
보건·약무	1	1					
간호·건축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4	4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운전	34	11	2	7		13	1
위생	1					1	
속기	2		2				
방호	4			1		3	
전기운영	24	2		1		21	
기계운영	43	1				42	
열관리운영	1			1			
화공운영	5					5	
보건운영	1			1			
사무운영	47	19		1	2	24	1
행정(임시정원)	3	3					
전산(임시정원)	1	1					
세무(임시정원)	1	1					
보건(임시정원)	3	3					
간호(임시정원)	1	1					
공업·보건·환경(임시정원)	1	1					
8급	287	61	5	13	12	196	
행정	77	17	1	3	8	48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세무	2	2					
전산	1	1					
사회복지	2	2					
사서	5					5	
공업	76	2		1	3	70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3	3					
보건	5	4		1			
간호	1	1					
환경	5	5					
시설	48	15			1	32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1	1					
행정·사서	5					5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1	1					
공업·시설	1					1	
녹지·시설	1	1					
녹지·녹지연구	1					1	
보건·간호	2	2					
보건·환경	1	1					
운전	8			6		2	
위생	1			1			
속기	4		4				
시설관리	26					26	
농림운영	1					1	
사무운영	4			1		3	
9급	27	2				23	2
행정	4	2					2
사서	1					1	
공업	1					1	
시설	2					2	
시설관리	19					19	
전문경력관 소계	7	2	1			4	
나군	6	1	1			4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사진기사	1		1				
나병관리사	1	1					
무대장치사	2					2	
음향기사	1					1	
조명기사	1					1	
다군	1	1					
사진기사	1	1					
특정직 소계	3,405	232		3,173			
소방직	3,405	232		3,173			
소방정	20	8		12			
소방령	98	29		69			
소방경	251	34		217			
소방위	371	46		325			
소방장	469	53		416			
소방교	823	43		780			
소방사	1,373	19		1,354			
별정직 소계	18	11	7				
1급	1	1					
관리관·별정	1	1					
4급	8	2	6				
별정	2	2					
서기관·별정	5		5				
서기관·기술서기관·별정	1		1				
5급	3	3					
비서관	2	2					
국제관계대사	1	1					
6급	3	3					
비서	3	3					
7급	3	2	1				
비서	3	2	1				
연구직 소계	197	9		134		54	
연구관	33			25		8	
수의연구	2			2			
해양수산연구	1					1	
보건연구	10			10			
환경연구	11			11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학예연구	3					3	
공업연구·환경연구	1					1	
보건연구·환경연구	4			1		3	
보건·환경·수의연구	1			1			
연구사	164	9		109		46	
기록연구	2	2					
녹지연구	1					1	
수의연구	9			9			
해양수산연구	7					7	
보건연구	48			42		6	
공업연구	2					2	
환경연구	61			52		9	
학예연구	23	6				17	
공업연구·환경연구	3					3	
농업연구·수의연구	2			2			
보건연구·환경연구	4			4			
학예연구·편사연구	1	1					
해양수산연구·어촌지도	1					1	
지도직 소계	29			28		1	
지도관	5			5			
농촌지도	5			5			
지도사	24			23		1	
농촌지도	23			23			
어촌지도	1					1	
기능직 소계							
9급							

[별표 2] 시본청에 두는 공무원의 실·국·본부별 직급별 정원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대 변 인	계		22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3	행정3
		6급	5	행정5
		7급	12	행정9, 공업1, 전기운영1, 기계운영1
	전문경력직	다군	1	사진기사1
시민정책 담당관	계		18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4	행정4
		6급	8	행정6, 시설1, 행정·시설1
		7급	5	행정4, 사무운영1
협치인권 담당관	계		19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4	행정4
		6급	6	행정6
		7급	8	행정7, 행정·시설1
소통기획 담당관	계		19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4	행정4
		6급	6	행정5, 사무운영1
		7급	8	행정7, 전산1
남북교류협력 담당관	계		11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3	행정3
		6급	3	행정2, 행정·시설1
		7급	4	행정3, 행정·시설1
노동정책 담당관	계		17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4	행정4
		6급	7	행정6, 행정·공업·시설1
		7급	4	행정3, 간호1
		8급	1	행정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감 사 관	계		51	
	일반직	3-4급	1	부이사관·서기관1
		5급	8	행정6, 시설1, 행정·시설1
		6급	35	행정21, 세무1, 전산1, 공업1, 녹지1,♪ 환경1, 시설7, 행정·사회복지1,♪ 보건·보건연구1
		7급	7	행정6, 행정·사회복지1
기획조정실	계		362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3-4급	1	부이사관·서기관1
		4급	13	서기관8, 서기관·기술서기관5
		5급	58	행정49, 시설2, 방송통신2, 행정·시설2,♪ 행정·방송통신2, 행정·운전1
		6급	172	행정83, 세무28, 전산28, 시설11,♪ 방송통신4, 행정·세무4, 행정·전산3,♪ 행정·시설4, 운전5, 통신운영1, 사무운영1
		7급	113	행정52, 세무10, 전산17, 시설5,♪ 방송통신5, 행정·세무2, 행정·전산3,♪ 행정·보건1, 행정·시설1, 세무·전산1,♪ 전산·방송통신1, 운전11, 사무운영4
		8급	3	행정1, 세무2
	별정직	5급	1	국제관계대사1
시민안전본부	계		125	
	일반직	2-3급	1	이사관·부이사관1
		4급	6	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4
		5급	21	행정10, 공업1, 시설1, 방송통신1,♪ 행정·시설2, 행정·방재안전2, 보건·환경1,♪ 행정·공업·시설1, 행정·시설·방재안전1,♪ 행정·보건(임시정원)1
		6급	49	행정14, 전산5, 공업3, 농업2, 수의1,♪ 해양수산2, 보건2, 환경3, 시설3,♪ 방송통신5, 행정·전산1, 행정·공업1,♪ 행정·환경1, 행정·시설1, 전산·방송통신1,♪ 공업·시설1, 시설·방재안전2,♪ 행정(임시정원)1
		7급	42	행정10, 전산1, 공업1, 보건1, 시설8,♪ 방재안전2, 방송통신3, 행정·방재안전3,♪ 전산·방송통신2, 공업·환경1,♪ 시설·방재안전1, 보건·약무1,♪ 행정·시설·방재안전4, 행정(임시정원)2,♪ 전산(임시정원)1,♪ 공업·보건·환경(임시정원)1
		8급	2	방재안전1, 방송통신1
	특정직		4	소방경1, 소방위1, 소방장2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일자리경제	계		171	
본부	일반직	2-3급	1	이사관·부이사관1
		4급	8	서기관4, 서기관·기술서기관4
		5급	37	행정22, 공업4, 농업4, 행정·공업2, 행정·농업1, 공업·시설1, 농업·수의2, 수의·수의연구1
		6급	72	행정39, 전산4, 공업12, 농업9, 수의2, 시설4, 행정·농업1, 행정·시설1
		7급	50	행정30, 공업6, 농업5, 수의1, 시설2, 행정·시설2, 공업·시설1, 농업·수의1, 수의·수의연구2
		8급	3	행정2, 농업1
복지국	계		86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5	서기관5
		5급	17	행정11, 행정·사회복지6
		6급	37	행정21, 사회복지7, 시설1, 행정·사회복지8
		7급	23	행정10, 사회복지7, 시설2, 행정·사회복지4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여성가족국	계		91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5	서기관5
		5급	19	행정13,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3, 보건·간호1
		6급	37	행정23, 사회복지5, 시설1, 행정·사회복지4, 행정·보건1, 행정·간호1, 보건·간호1, 행정·보건·간호1
		7급	27	행정13, 사회복지7, 보건2, 행정·전산1, 행정·사회복지3, 행정·시설1
		8급	2	사회복지1, 행정·보건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건강체육국	계		123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5	기술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3
		5급	25	행정4, 보건4, 간호1, 시설1, 행정·보건2♪ 보건·간호5, 행정·보건·간호1♪ 공업·보건·식품위생1♪ 행정·보건·약무·간호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1♪ 보건·의무·약무·간호1, 행정(임시정원)1♪ 보건·간호(임시정원)1♪ 의무(임시정원)1
		6급	48	행정9, 보건15, 간호5, 시설2, 행정·보건1♪ 행정·시설2, 보건·간호3♪ 보건·의료기술·간호1, 보건·약무·간호1♪ 보건·의무·약무·간호1, 보건(임시정원)2♪ 간호(임시정원)1♪ 보건·간호(임시정원)3♪ 의료기술·약무(임시정원)1♪ 보건·의료기술·간호(임시정원)1
		7급	36	행정14, 보건6, 간호3, 시설1, 행정·보건1♪ 보건·간호3, 간호·건축1♪ 보건·의료기술·간호1, 행정(임시정원)1♪ 세무(임시정원)1, 보건(임시정원)3♪ 간호(임시정원)1
	8급	7	보건4, 간호1, 보건·간호2	
전문경력직	나군	1	나병관리사1	
문화관광국	계		118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6	서기관5,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24	행정18, 시설1, 행정·사서1, 행정·보건1♪ 행정·시설2, 행정·학예연구1
		6급	44	행정30, 공업1, 녹지1, 보건1, 시설7♪ 행정·사서2, 행정·시설1, 사무운영1
		7급	36	행정26, 전산1, 사서2, 공업1, 시설4♪ 행정·시설2
	연구직	연구사	7	학예연구6, 학예연구·편사연구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환경국	계		125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5	기술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3
		5급	21	행정1, 환경8, 시설2, 행정·환경2♪ 행정·시설1, 공업·환경2, 환경·시설1♪ 행정·공업·환경2, 행정·녹지·환경1♪ 공업·보건·환경1
		6급	44	행정8, 전산1, 공업6, 환경16, 시설5♪ 행정·공업1, 행정·환경1, 녹지·환경1♪ 보건·환경1, 환경·시설1, 공업·보건·환경2♪ 기계운영1
		7급	43	행정9, 공업6, 환경15, 시설5, 공업·환경3♪ 보건·환경1, 사무운영4
자원순환 에너지본부	계		64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기술서기관4
		5급	15	행정3, 공업4, 행정·공업2, 행정·환경3♪ 환경·시설1, 행정·환경·시설1♪ 공업·환경·시설1
		6급	29	행정7, 공업10, 환경4, 시설3, 행정·환경3♪ 보건·환경1, 환경·시설1
		7급	15	행정4, 공업9, 환경2
교통건설국	계		189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8	서기관3, 기술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3
		5급	34	행정14, 공업1, 시설12, 방송통신2♪ 행정·시설3, 공업·시설1♪ 행정·공업·방송통신1
		6급	82	행정33, 세무1, 전산3, 공업5, 시설26♪ 방송통신4, 행정·공업1, 행정·시설4♪ 전산·방송통신2, 공업·시설1♪ 행정·전산·시설1, 전기운영1
		7급	60	행정19, 전산1, 공업5, 시설21, 방송통신5♪ 행정·시설1, 공업·시설2, 전기운영1♪ 사무운영5
		8급	4	행정3, 시설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행정국	계		149	
	정무직	정무	1	시장1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7	서기관5,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23	행정20, 행정·시설2, 공업·시설1
		6급	54	행정35, 전산2, 사서1, 공업1, 간호1, 시설5, 방송통신1, 행정·사회복지1, 위생1, 방호3, 사무운영3
		7급	42	행정28, 전산3, 공업2, 시설1, 행정·전산1, 행정·공업1, 행정·시설1, 행정·방송통신1, 사무운영4
		8급	7	행정5, 전산1, 공업1
		9급	2	행정2
	별정직	1급	1	관리관·별정1
		4급	2	별정2
		5급	2	비서관2
		6급	3	비서3
		7급	2	비서2
	연구직	연구사	2	기록연구2
도시재생 녹지국	계		120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6	기술서기관4,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25	행정1, 녹지6, 시설15, 행정·시설1, 공업·시설1, 녹지·시설1
		6급	39	행정2, 전산1, 공업1, 녹지9, 시설25, 사무운영1
		7급	44	행정5, 녹지12, 시설24, 공업·시설1, 녹지·시설1, 사무운영1
		8급	5	시설4, 녹지·시설1
도시계획국	계		166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7	기술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5
		5급	36	시설29, 행정·시설7
		6급	60	행정5, 전산1, 공업1, 녹지1, 시설48, 행정·시설3, 녹지·환경1
		7급	53	행정7, 전산1, 사회복지1, 공업1, 시설35, 행정·시설5, 공업·환경1, 녹지·시설1, 환경·시설1
		8급	9	시설9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해양항공국	계		103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6	서기관1, 기술서기관1,♪ 서기관·기술서기관4
		5급	18	행정5, 해양수산4, 시설3, 행정·시설3,♪ 녹지·환경1, 행정·해양수산·환경2
		6급	43	행정13, 공업1, 해양수산16, 환경1, 시설8,♪ 녹지·환경1, 해양수산·환경2,♪ 해양수산·어촌지도1
		7급	31	행정10, 해양수산9, 시설6, 행정·시설3,♪ 해양수산·환경2, 해양수산·시설1
		8급	4	행정1, 해양수산3
소방본부	계		230	
	일반직	6급	1	전산1
		7급	1	전산·방송통신1
	특정직		228	소방정8, 소방령29, 소방경33, 소방위45,♪ 소방장51, 소방교43, 소방사19

[별표 4] 직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인재개발원	계		36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3	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6	행정5, 시설1
		6급	8	행정5, 전산1, 간호조무1, 사무운영1
		7급	14	행정6, 전산1, 공업2, 시설1, 운전1, 방호1,♪ 전기운영1, 사무운영1
		8급	4	행정3, 위생1
보건환경 연구원	계		176	
	일반직	4급	1	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1
		5급	4	행정1, 수의·수의연구3
		6급	9	행정2, 전산1, 수의3, 수의·수의연구1,♪ 운전1, 위생1
		7급	25	행정4, 전산1, 공업3, 수의2, 보건2,♪ 방송통신1, 농업·수의1, 수의·수의연구4,♪ 운전5, 열관리운영1, 보건운영1
		8급	3	공업1, 보건1, 사무운영1
	연구직	연구관	25	수의연구2, 보건연구10, 환경연구11,♪ 보건연구·환경연구1, 보건·환경·수의연구1
		연구사	109	수의연구9, 보건연구42, 환경연구52,♪ 농업연구·수의연구2, 보건연구·환경연구4
농업기술센터	계		34	
	일반직	6급	1	행정1
		7급	4	행정2, 공업1, 시설1
		8급	1	운전1
	지도직	지도관	5	농촌지도5
		지도사	23	농촌지도23
중부소방서	계		318	
	일반직	7급	1	운전1
		8급	3	운전3
	특정직		314	소방정1, 소방령6, 소방경21, 소방위34,♪ 소방장37, 소방교87, 소방사128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남동소방서	계		289	
	특정직		289	소방정1, 소방령6, 소방경19, 소방위23,♪ 소방장38, 소방교72, 소방사130
부평소방서	계		336	
	특정직		336	소방정1, 소방령6, 소방경20, 소방위26,♪ 소방장41, 소방교87, 소방사155
서부소방서	계		467	
	특정직		467	소방정1, 소방령6, 소방경25, 소방위43,♪ 소방장66, 소방교114, 소방사212
공단소방서	계		310	
	특정직		310	소방정1, 소방령6, 소방경20, 소방위26,♪ 소방장35, 소방교83, 소방사139
계양소방서	계		247	
	특정직		247	소방정1, 소방령6, 소방경18, 소방위22,♪ 소방장29, 소방교64, 소방사107
미추홀소방서	계		313	
	특정직		313	소방정1, 소방령6, 소방경20, 소방위26,♪ 소방장36, 소방교80, 소방사144
강화소방서	계		285	
	특정직		285	소방정1, 소방령6, 소방경17, 소방위39,♪ 소방장38, 소방교68, 소방사116
영종소방서	계		257	
	일반직	8급	1	운전1
	특정직		256	소방정1, 소방령6, 소방경18, 소방위28,♪ 소방장30, 소방교54, 소방사119
송도소방서	계		232	
	일반직	8급	1	운전1
	특정직		231	소방정1, 소방령6, 소방경18, 소방위29,♪ 소방장39, 소방교49, 소방사89
소방학교	계		31	
	특정직		31	소방령3, 소방경7, 소방위10, 소방장4,♪ 소방교4, 소방사3
119특수 대응단	계		58	
	특정직		58	소방정1, 소방령3, 소방경8, 소방위12,♪ 소방장13, 소방교13, 소방사8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인천국민 안전체험관	계		36	
	특정직		36	소방정1, 소방령3, 소방경6, 소방위7, 소방장10, 소방교5, 소방사4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구 분	직 중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경 제 자 유 구 역 청	계		297	
	일반직	1급	1	관리관1
		2급	1	이사관1
		3급	4	부이사관4
		4급	16	서기관7, 기술서기관6,♪ 서기관·기술서기관3
		5급	65	행정30, 공업4, 녹지2, 보건1, 환경1,♪ 시설16, 방송통신1, 행정·녹지1,♪ 행정·시설6, 시설·방송통신1,♪ 행정·녹지·환경1, 행정·녹지·시설1
		6급	111	행정38, 세무1, 전산4, 공업8, 녹지4,♪ 보건2, 환경4, 시설36, 방송통신5,♪ 행정·공업1, 행정·환경1, 행정·시설3,♪ 공업·시설1, 운전3
		7급	87	행정27, 공업4, 녹지4, 보건2, 환경3,♪ 시설32, 방송통신4, 행정·공업1,♪ 행정·시설6, 행정·방송통신1, 보건·간호1,♪ 사무운영2
		8급	12	행정8, 공업3, 시설1

[별표 6]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상 수 도	계		645	
사 업 본 부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14	서기관1, 기술서기관3,♪ 서기관·기술서기관10
		5급	56	행정19, 공업17, 시설8, 행정·공업5,♪ 공업·시설7
		6급	151	행정27, 세무1, 전산5, 공업39, 시설17,♪ 방송통신1, 행정·공업1, 공업·시설16 ,♪ 운전1, 전기운영11, 기계운영25,♪ 사무운영7
		7급	233	행정38, 세무1, 전산4, 공업56, 환경4,♪ 시설20, 방송통신2, 공업·시설18,♪ 보건·간호1 , 운전8, 방호2, 전기운영19,♪ 기계운영39, 화공운영5, 사무운영16
		8급	145	행정28, 공업66, 시설23, 공업·시설1,♪ 시설관리26, 사무운영1
		9급	21	시설2, 시설관리19
	연구직	연구관	4	공업연구·환경연구1, 보건연구·환경연구3
		연구사	20	보건연구6, 공업연구2, 환경연구9,♪ 공업연구·환경연구3
도 시 철 도	계		94	
건 설 본 부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1, 기술서기관3
		5급	13	행정2, 공업3, 시설6, 방송통신1,♪ 공업·시설1
		6급	38	행정5, 공업13, 시설16, 방송통신3, 운전1
		7급	32	행정6, 공업7, 시설15, 방송통신3,♪ 공업·방송통신1
		8급	6	행정1, 공업1, 시설4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종합건설본부	계		170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1, 기술서기관3
		5급	19	행정4, 공업2, 녹지1, 시설11, 행정·공업1
		6급	50	행정8, 공업8, 녹지1, 시설20, 방송통신1, 운전2, 토목운영1, 기계운영9
		7급	83	행정16, 공업23, 녹지2, 시설29, 방송통신1, 시설·방송통신1, 운전5, 기계운영3, 사무운영3
	8급	13		행정6, 공업1, 시설5, 운전1
여성복지관	계		15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6급	3	행정3
		7급	9	행정3, 전산1, 사회복지2, 공업2, 행정·사회복지1
여성의광장	계		11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7	행정5, 전산1, 공업1
		9급	1	공업1
문화예술회관	계		38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3	행정2, 행정·공업1
		6급	9	행정4, 방송통신1, 공업·시설1, 통신운영1, 전기운영2
		7급	19	행정5, 전산1, 공업9, 시설1, 보건·간호1, 전기운영1, 사무운영1
		8급	2	행정2
	전문경력직	나군	4	무대장치사2, 음향기사1, 조명기사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인천대공원 사 업 소	계		47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6	행정2, 녹지2, 녹지·녹지연구1♪ 행정·녹지·환경1
		6급	12	행정1, 공업2, 녹지3, 행정·녹지1♪ 녹지·시설1, 녹지·녹지연구2, 전기운영1♪ 열관리운영1
		7급	21	행정4, 공업5, 농업1, 녹지4, 시설2♪ 행정·녹지1, 수의·수의연구1, 위생1♪ 전기운영1, 사무운영1
		8급	6	행정3, 공업1, 녹지1, 녹지·녹지연구1
	연구직	연구사	1	녹지연구1
월미공원 사 업 소	계		22	
	일반직	4급	1	기술서기관1
		5급	3	행정1, 녹지1, 행정·녹지1
		6급	3	행정1, 녹지2
		7급	14	행정3, 공업4, 녹지4, 시설2, 녹지·환경1
		8급	1	행정1
계양공원 사 업 소	계		22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4	행정1, 녹지3
		6급	5	녹지3, 행정·녹지1, 공업·시설1
		7급	10	공업1, 녹지5, 시설1, 행정·녹지1♪ 녹지·시설1, 사무운영1
		8급	2	녹지1, 농림운영1
미추홀 도 서 관	계		56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7	행정1, 사서1, 행정·사서5
		6급	13	행정2, 전산1, 사서6, 공업1, 행정·사서2♪ 사무운영1
		7급	21	행정2, 전산2, 사서10, 공업2, 시설1♪ 행정·사서4
		8급	13	사서5, 공업1, 행정·사서5, 운전1♪ 사무운영1
		9급	1	사서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시립박물관	계		41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4	행정1, 행정·학예연구3
		6급	3	행정1, 공업1, 행정·학예연구1
		7급	11	행정4, 전산1, 공업6
		8급	2	행정2
	연구직	연구관	3	학예연구3
		연구사	17	학예연구17
남촌농축산물 도 매 시 장 관리사무소	계		20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2	행정·농업2
		6급	3	행정1, 농업2
		7급	14	행정2, 공업4, 농업5, 시설1, 행정·전산1♪ 공업·시설1
삼산농산물 도 매 시 장 관리사무소	계		15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2	행정·농업2
		6급	3	행정1, 농업2
		7급	8	행정1, 전산1, 공업2, 농업3, 시설1
		8급	1	행정1
수 산 자 원 연 구 소	계		22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해양수산연구관1
		5급	2	행정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1
		6급	3	행정1, 해양수산·어촌지도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1
		7급	5	행정1, 공업2, 시설1, 사무운영1
		8급	2	행정1, 사무운영1
	연구직	연구관	1	해양수산연구1
		연구사	8	해양수산연구7, 해양수산연구·어촌지도1
중앙협력본부	계		8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2	행정2
		6급	3	행정3
		7급	2	행정2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수산물기술지원센터	계		14	
	일반직	4급	1	기술서기관·어촌지도관1
		5급	2	행정·해양수산물1, 해양수산물·어촌지도1
		6급	5	해양수산물·어촌지도4,♪ 해양수산물·해양수산물연구1
		7급	5	공업1, 해양수산물·어촌지도3, 사무운영1
	지도직	지도사	1	어촌지도1
서부여성회관	계		14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2	행정2
		7급	7	행정2, 전산1, 사회복지1, 공업1, 시설1,♪ 방호1
		8급	3	행정3
아동복지관	계		8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개정이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2022.1.27.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확보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2022.4.15.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와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 조직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반직 및 소방직 정원 124명 증원(별표1)

- 총 정원 : 7,381명 → 7,505명(124명 증)
- 집행기관의 정원 : 3,948명 → 3,958명(10명 증)
- 소방본부 · 소방서 · 소방학교 · 119특수대응단 ·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정원 : 3,291명 → 3,405명(114명 증)

나. 일반직 정원 증원(별표 1, 별표 2, 별표 5 및 별표 6)

- 일반직 정원 : 3,843명 → 3,853명(10명 증)
- 일반직 5급 정원 : 630명 → 631명(1명 증)
- 일반직 6급 정원 : 1,374명 → 1,380명(6명 증)
- 일반직 7급 정원 : 1,333명 → 1,336명(3명 증)

다. 소방직 정원 증원(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

- 소방직 정원 : 3,291명 → 3,405명(114명 증)
- 소방령 정원 : 97명 → 98명(1명 증)
- 소방경 정원 : 246명 → 251명(5명 증)
- 소방위 정원 : 351명 → 371명(20명 증)
- 소방장 정원 : 455명 → 469명(14명 증)
- 소방교 정원 : 808명 → 823명(15명 증)
- 소방사 정원 : 1,314명 → 1,373명(59명 증)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247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도시디자인단”을 “도시디자인단, 중대재해관리단”으로 한다.

제5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중대재해관리단) ① 중대재해관리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중대재해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사업장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 총괄
2. 중대 산업 및 시민재해 예방과 대응에 관한 사항
3. 그 외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

제7조제5항제20호 중 “뮤지엄 설립 지원”을 “건립”으로 한다.

제9조제4항제1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의 중대재해 관련 조직 및 사무를 신설하고, 아트센터인천에 관한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보좌기관으로 중대재해관리단을 신설함.

(제4조)

나. 중대재해관리단장의 직렬 및 사무분장 조항을 신설함.(제5조의 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아트센터인천 건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제7조제5항제20호 및 제9조제4항제11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248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남북교류협력담당관	1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거주지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및 거주지 보호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지원에 관한 사항 다.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거주지에서의 자립·정착에 관련된 사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9조제1항	
일자리경제과	1	가격표시제 실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가격표시의무자에 대한 관계자료 제출명령권 나. 가격표시의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서류·기타 물건을 검사할 권한 다. 소매가격표시점포 지정권 라. 가격표시 명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및 제3호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 방지업무 가. 의견청취 나. 부정경쟁행위 등 조사 다.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라. 과태료 부과·징수 마. 고발 등 바. 시정여부 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20조 「부정경쟁행위방지업무 취급 규정」 제13조 같은 규정 제15조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정 책 과		<p>따른 손실보상금의 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사무</p> <p>가. 손실보상금의 신청 및 이의신청 접수</p> <p>나. 신청된 서류의 형식적 요건 검토 (이의신청 서류를 포함한다)</p> <p>다. 손실보상금을 신청한 자 및 이의를 신청한 자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대상 여부, 내용, 이행 기간 및 조치위반 여부 확인</p>	<p>「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1호제가목 및 제2호제가목</p> <p>「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1호제나목 및 제2호제나목</p> <p>「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1호제다목 및 제2호제다목</p>	
산 업 진 흥 과	1	<p>국가공업단지개발 사업 중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업단지조성 사업</p> <p>가. 실시계획 승인</p> <p>나. 실시계획 승인 고시 및 관계서류 사본 송부</p> <p>다.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p> <p>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p> <p>마.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p> <p>바.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 검사의뢰</p> <p>사.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p>	<p>「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p> <p>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p> <p>같은 법 제21조제2항</p> <p>같은 법 제26조제3항</p> <p>같은 법 제27조제2항</p> <p>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p> <p>같은 법 제37조제5항</p>	
	2	<p>「광업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p> <p>가. 채광 재개신고</p> <p>나. 조광권의 휴지 인가</p> <p>다. 광물생산보고서의 접수</p>	<p>「광업법」 제42조의2제3항</p> <p>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제2호</p> <p>같은 법 제42조의2제2항</p> <p>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제2호</p> <p>같은 법 제83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제12호</p>	
농 축 산	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6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농어촌정비법」 제109조제2항 및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유통과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 중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개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가. 「농어촌정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실시 나.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사업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서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다. 법 제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사업시행의 승인·고시 및 변경승인·고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승인 다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은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2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령”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한정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따른 등기·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사.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보증금의 예치 및 이행보증조치 아.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자.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갱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차.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의 통보 카.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타.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파.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 하.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부의 제한, 대부료의 징수,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 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 거.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너.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더.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노인 정책과	1	노인복지시설 검사감독	「노인복지법」 제42조	
가족 다문화과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보건의료 정책과	1	마약류 양도·양수의 승인 (마약류취급자가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류 원소유자인 취급자에게 반품하는 경우에 한정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문화 예술과	1	전통사찰의 다음 각 목의 행위에 대한 권한 가.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나. 경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다. 경내지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위치한 경우 그 경내지에서의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 같은 법 제9조의2제2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p>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마. 「산지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경내지에서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p>	<p>같은 법 제9조의2제2항</p> <p>같은 법 제9조의2제2항</p>	
문 화 콘텐츠과	1	<p>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과 관련된 다음의 권한</p> <p>가.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 교부, 재발급</p> <p>나. 결격사유 조회</p> <p>다. 영업승계 신고의 접수 및 수리</p> <p>라.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의 접수 및 수리</p> <p>마. 등록사항 직권말소</p> <p>바. 등록, 변경등록 수수료 징수 (군·구 세외수입 처리)</p>	<p>「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6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7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8조</p> <p>같은 법 제27조</p> <p>같은 법 제30조제2항</p> <p>같은 법 제31제1항</p> <p>같은 법 시행령 제10조</p> <p>같은 법 제31제2항</p> <p>같은 법 시행령 제11조</p> <p>같은 법 제37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p>	
	2	<p>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등록취소</p> <p>나. 영업정지 처분</p> <p>다. 과징금의 부과·징수(체납처분 포함)</p>	<p>「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3조제1항</p> <p>같은 법 제33조제2항</p> <p>같은 법 시행령 제13조</p> <p>같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p> <p>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p>	
	3	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 실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6조	
	4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제7호, 제9호, 제2항제4호, 제6호 및 제3항	
문 화	1	문화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유산과		가.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미판명시 경찰서장에 대한 통지 나. 발굴 또는 발견된 문화재의 공고 다. 경찰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화재의 처리 결과 통지	법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환경 기 후 정책과	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나. 환경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및 신청 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등 라.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 등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같은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3	
대 기 보 전 과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사용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나. 검정을 받지 아니한 교정용품을 공급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제3호 같은법 제35조제2항제4호	
	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과징금의 부과·징수 나. 불법배출시설의 사용 중지·철거·폐쇄 명령 및 대집행 다. 표지판의 설치 라. 사업장의 출입·검사 등 마. 자료제출의 요구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17조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운행차의 개선명령 나. 자동차의 운행정지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같은법 제70조의2	
	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수검명령 다.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지정 정비사업자의 지정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같은법 제62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같은법 제62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 같은법 제62조의3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및 지정 취소 마.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벌금,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62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제92조제11호 및 제94조제6항	
	5	환경책임보험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제외)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나. 영업정지명령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 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같은 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제49조	
에너지 정책과	1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전력 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술 자격에 한정함)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기술 자격의 취소 및 정지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관리 등 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7조에 따른 국가기술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따른 청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	
	2	일반용 전기공작물 기술수준적합 명령	「전기사업법」 제71조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제78조제4항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자원순환 정책과	1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단,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로써 2이상의 시·도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p>2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구(군)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함.)</p> <p>가.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p> <p>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p> <p>다.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p>	<p>같은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p> <p>같은 법 제32조제3항</p> <p>같은 법 제33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p>	
	2	<p>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제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p> <p>가. 주변지역 영향조사결과와 접수,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 명령 및 결과 공개</p> <p>나. 신고의 수리, 지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 납부, 징수 및 반환 등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 반환, 토지이용 제한</p> <p>다. 사후관리 제외 대상시설 인정,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알림, 비용명세서의 수리, 사후관리 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사후관리 이행보증증서의 접수, 담보물의 접수,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 비용의 충당 및 반환, 사후관리 이행률의 결정, 사후관리 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의 접수, 반환금액의 결정,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접수,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알림</p>	<p>「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p> <p>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4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 제29조제1항, 제2항, 제31조제2호, 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제2항, 제3항, 제35조제2항 및 제3항</p>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3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4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확인 증명 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 나. 보고서의 제출명령 다. 보고명령 및 검사 라. 조치명령 마. 대집행 및 비용징수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9조	
	5	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 실시	「폐기물관리법」 제61조	
	6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관한 사항 가.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내용 통보 나. 사용 권고 및 시정조치명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제39조	
	7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	
수 질 환 경 과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수리, 변경허가· 변경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다. 배출시설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라.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의 수리, 점검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폐수무방류 시설에 대한 조사 마. 수질오염물질의 회석처리에 관한 인정 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과 조업정지명령 및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의 개선계획서 접수·확인 등 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과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제35조제3항 같은 법 제3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3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 항 및 제40조	일 부 제 외 (「 산 업 입 지 및 개 발 에 관 한 법 률」 제 6 조 및 제 7 조 에 따라 지 정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계획서 접수·확인 등 아.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자. 배출부과금 관련 사무 1)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2) 기준이내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 3)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4)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 검사 차.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카.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의 인정 타.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파. 명령이행의 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 검사의 지시·의뢰 하. 그 밖의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및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거. 골프장 농약사용의 확인 너. 사업자 등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 및 오염도검사 의뢰 더.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 러.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호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6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61조제2항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68조제2항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82조	된 국 가 산업 단 지 및 일 반 산업 단 지 안의 사 업 장)
	2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사무(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에 한한다.) 가.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 나. 하천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 다.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 라.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마.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 바. 지하수 채취 관련 사용료 징수	「하천법」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같은 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50조제6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사.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도지사가 부과한 것만 해당) 아.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시·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 자.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 차.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카.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 타. 보고 및 출입 등(시·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 파. 청문(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 하. 과태료의 부과·징수(시·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제98조제3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	
버 스 정 책 과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시내버스, 마을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고보고의 수리 및 처리 나. 사업의 일부 면허취소 및 사업의 정지처분 다. 과징금의 처분 및 징수 라. 과태료 처분 및 징수 마. 청문실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제86조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에 관한 다음의 사업 ○ 시외버스운송사업 영업소, 정류소, 차고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의 인가(고속버스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택 시 물 류 과	1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나. 사업계획변경인가 및 신고 다. 사업의 양도·양수인가 라. 사업의 휴업·폐업의 허가 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신고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연장 (단, 차령연장 등에 관한 고시 제외) 사. 사고보고의 수리 및 처리 아. 면허취소(개인택시운송사업에 한함) 및 사업의 정지 처분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1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자. 과징금의 처분 및 징수 차. 과태료 처분 및 징수 카. 청문실시	한 법률」 제1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고보고의 수리 및 처리 나. 사업의 일부 면허취소 및 사업의 정지처분 다. 과징금의 처분 및 징수 라. 과태료 처분 및 징수 마. 청문실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제86조	
	3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변경허가 나. 허가기준에 관한 신고 다. 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라. 보험회사 통지의 수령 마. 운송가맹점 신고의 접수 바. 개선명령 사.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아. 상속의 신고 자. 운송사업의 허가취소·사업정지 처분 및 감차조치 명령 차. 청문 카. 등록증과 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타. 운송사업영업소의 허가증의 발급, 변경 및 재발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3조제7항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제11조제11항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제5항	
	5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나. 허가기준에 관한 신고 다. 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라. 보험회사 통지의 수령 마. 운송가맹점 신고의 접수 바. 개선명령 사.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아. 상속의 신고 자. 허가취소 및 사업의 정지 차. 청문 카. 운송주선사업영업소의 허가증의 발급, 변경 및 재발급	제24조제1항 같은 법 제24조제5항 같은 법 제28조 및 제6조 같은 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제28조 및 제11조제11항 같은 법 제28조 및 제13조 같은 법 제2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제28조 및 제17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및 제3항	
	6	화물운송종사자자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나. 청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제23조제3항	
	7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의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70조	
	8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의 보고·경영실태조사 및 재무관리 상태진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	
	9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다. 개선명령 라.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제70조	
	10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나. 사업의 승계의 신고수리 다. 사업의 휴업·폐업 및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라.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마.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바. 사업자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사. 청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제21조의7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61조제1항 같은 법 제62조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67조	
교통관리과	1	자동차 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도로과	1	국유재산중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용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관리·처분 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다. 기부채납 라. 등기·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관리전환의 협의 등 바.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사. 협의 및 소관여부 조회 아. 관리의 위탁	「국유재산법」 제2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에 관한 관리사무(동의 등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가목 「국유재산법」 제1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나목 「국유재산법」 제13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다목 「국유재산법」 제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라목 「국유재산법」 제1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마목 「국유재산법」 제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바목 「국유재산법」 제2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사목 「국유재산법」 제29조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자. 사용 허가 및 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아목 「국유재산법」 제3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자목	
		차. 사용료 징수 등	「국유재산법」 제3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차목	
		카. 사용료 면제	「국유재산법」 제3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카목	
		타.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국유재산법」 제3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타목	
		파.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국유재산법」 제3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파목	
		하. 청문	「국유재산법」 제3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하목	
		거.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국유재산법」 제39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거목	
		너.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국유재산법」 제4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너목	
		더. 대부	「국유재산법」 제41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p>러.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p> <p>며. 멸실 또는 철거보고</p> <p>버.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p> <p>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이용·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p> <p>어. 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p> <p>저.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 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p> <p>처. 국유재산 내 매장물 발굴 승인 등</p>	<p>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더목</p> <p>「국유재산법」 제66조</p> <p>「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러목</p> <p>「국유재산법」 제70조</p> <p>「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머목</p> <p>「국유재산법」 제72조 및 제73조</p> <p>「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버목</p> <p>「국유재산법」 제73조의2</p> <p>「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서목</p> <p>「국유재산법」 제74조</p> <p>「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어목</p> <p>「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저목</p> <p>「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p> <p>「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처목</p>	
건설 심사과	1	지하도검 지하상가 유지관리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2	<p>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건설기계검사 및 수시검사 명령과 건설기계 검사증의 교부</p> <p>나. 검사의 최고</p>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다. 정비명령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업의 등록신청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나.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다.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라.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마.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바.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사. 시정명령·지시 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자.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차. 건설업 등록말소등의 공고 및 통지 카. 청문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파.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하. 건설업 등록대장의 작성·보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3호	
자치행정과	1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권한 중 「구 단위 이하의 출력에 관한 승인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녹지정책과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가. 조림비 및 산림기반시설 설치비의 반환조치 나. 산림용 종자묘목의 검사 및 출하금지·소독·폐기 등의 조치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제4호 같은 법 제6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5항 제3호	
	2	「사망사업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사망지의 지정권 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인이 시행하는 사망사업의 승인권 다. 사망지안에서의 제한행위에 대한 허가권 라. 사망지의 지정 해제권	「사망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도시경관 건축과	1	항공장애등 설치검사 및 사후관리 (지상고 60m 이상의 건물 시설물)	「공항시설법」 제36조	
해 양 항 만 과	1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나. 사업의 승계의 신고수리 다. 사업의 휴업·폐업 및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라.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마.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바. 사업자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사. 청문 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제21조의7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61조제1항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제67조	
	2	연안의 오염실태점검(「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 중 무역항의 항만구역 제외)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제1호	
	3	경미한 연안정비사업(구청장의 사업시행, 시행자 지정 등)의 경우 실시 계획수립(변경)에 관한 승인·협의·고시 및 통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지역항만 이외의 지역)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제2호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가. 석축·옹벽 등 기존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 나. 쓰레기 또는 폐선을 제거하는 사업 다. 해안 편의점·휴식용 의자의 설치 등 기술적 검토가 필요 없는 사업		
섬발전 지원과	1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권한 가.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나. 해양생물보호구역에서 해양생물에 대한 제1항제1호의 행위제한 다. 해양보호구역에서 개발행위 등의 제한 및 영어행위의 제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제27조제3항 같은 법 제27조제5항	
	2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등	같은 법 제30조	
	3	해양보호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 권한 가. 해양보호구역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 등의 매수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3조제1항	
	4	해양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 권한 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의 사업 시행(단, 시장이 필요 시 직접사업 시행) 나.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용시설의 지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 증대방안의 강구·시행 다. 해양보호구역에서 및 그 인접지역의 일부를 해양생태계 탐방 또는 휴양 등의 장소로 활용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제34조제2항 같은 법 제34조제3항	
	5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및 실비보상 권한 가.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나.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체결에 따른 실비보상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 제41조제2항	
	6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를 위한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제한, 출입·취사·야영행위 제한 권한	같은 법 제47조	
	7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 가. 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출입·취사·야영행위의 제한을 위	같은 법 제65조 같은 법 제65조제2항제5호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반한 자 나. 법제27조제1항 내지 제8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다. 법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보호 구역에서 개발행위 등이나 영어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같은 법 제65조제3항제3호 같은 법 제65조제3항제4호	
수 산 과	1	국가어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에 관한 허가·신고 및 협의 나.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명령 다. 사용 또는 점용료의 징수 라. 권리·의무의 이전인가 및 이전신고의 수리 (「어촌·어항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에 관한 허가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함) 마. 금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어항시설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 바. 변상금의 징수 사. 청문(같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함)	「어촌·어항법」 제38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54조	
건 축 계 획 과	1	항공장애등 설치검사 및 사후관리 (지상고 60m 이상의 건물 시설물)	「항공법」 제83조	

[별표 2]

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남북교류협력담당관	1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거주지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및 거주지 보호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지원에 관한 사항 다.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거주지에서의 자립·정착에 관련된 사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9조제1항	
일자리경제과	1	「부정경쟁 방지업무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 방지업무 가. 의견청취 나. 부정경쟁행위 등 조사 다. 위반행위에 시정권고 라. 과태료 부과·징수 마. 고발 등 바. 시정여부 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20조 「부정경쟁 행위방지업무 취급규정」 제13조 같은 규정 제15조	
	2	가격표시 실시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가격표시의무자에 대한 관계자료 제출명령권 나. 가격표시의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권한 다. 소매가격표시점포 지정권 라. 가격표시 명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제3호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소상공인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정 책 과		<p>따른 손실보상금의 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사무</p> <p>가. 손실보상금의 신청 및 이의신청 접수</p> <p>나. 신청된 서류의 형식적 요건 검토 (이의신청 서류를 포함한다)</p> <p>다. 손실보상금을 신청한 자 및 이의를 신청한 자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대상 여부, 내용, 이행 기간 및 조치위반 여부 확인</p>	<p>「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1호제가목 및 제2호제가목</p> <p>「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1호제나목 및 제2호제나목</p> <p>「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1호제다목 및 제2호제다목</p>	
산 업 진 흥 과	1	<p>국가공업단지개발 사업 중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업단지조성 사업</p> <p>가. 실시계획 승인</p> <p>나. 실시계획 승인 고시 및 관계서류 사본 송부</p> <p>다.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p> <p>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p> <p>마.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p> <p>바.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 검사외</p> <p>사.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p> <p>아. 준공인가전 사용허가</p> <p>자. 보고지시 및 검사</p> <p>차.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 및 고시</p>	<p>「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제26조제3항 같은 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37조제5항 같은 법 제37조제7항 같은 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제48조</p>	
	2	<p>「광업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p> <p>가. 채광 재개신고</p> <p>나. 조광권의 휴지 인가</p>	<p>「광업법」 제42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42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p>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다. 광물생산보고서의 접수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2호	
농 축 산 유 통 과	1	구 「농경지조성법」(1975.4.11.폐지)(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법 제16조(타인소유지의 개간 후 분배) 나. 법 제17조(허가의 양도·상속자격) 다. 법 제18조(개간 준공인가) 라. 법 제19조(허가의 취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1호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맞게 된 법률 제2767호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부칙 제3항 단서에 따른 권한	
	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6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 중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개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 가. 「농어촌정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실시 나.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사업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서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다. 법 제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사업시행의 승인·고시 및 변경승인·고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승인 다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은 제외한다.	「농어촌정비법」 제10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3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령”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한정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따른 등기·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사.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보증금의 예치 및 이행보증조치 아.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자.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갱신 차.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의 통보 카.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타.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파.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 하.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부의 제한, 대부료의 징수,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 거.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너.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더.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가 족 다문화과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보건의료 정책과	1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 가. 의약품 취급자의 지정 및 취소 나. 동대리인의 신고 다. 취급자 대리인 변경신고	「약사법」 부칙 제6조	
	2	마약류 양도·양수의 승인 (마약류취급자가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류 원소유자인 취급자에게 반품하는 경우에 한정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문 화 예술과	1	전통사찰의 다음 각목의 행위에 대한 권한 가.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나. 경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p>철거하는 행위</p> <p>다. 경내지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위치한 경우 그 경내지에서의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p> <p>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마. 「산지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경내지에서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p>	<p>같은 법 제9조의2제2항</p> <p>같은 법 제9조의2제2항</p> <p>같은 법 제9조의2제2항</p>	
문 화 콘텐츠과	1	<p>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과 관련된 권한</p> <p>가.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 교부, 재발급</p> <p>나. 결격사유 조회</p> <p>다. 영업승계 신고의 접수 및 수리</p> <p>라.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의 접수 및 수리</p> <p>마. 등록사항 직권말소</p> <p>바. 등록, 변경등록 수수료 징수 (군·구 세외수입 처리)</p>	<p>「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6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7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8조</p> <p>같은 법 제27조</p> <p>같은 법 제30조제2항</p> <p>같은 법 제31제1항</p> <p>같은 법 시행령 제10조</p> <p>같은 법 제31제2항</p> <p>같은 법 시행령 제11조</p> <p>같은 법 제37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p>	
	2	<p>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등록취소</p> <p>나. 영업정지 처분</p>	<p>「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3조제1항</p> <p>같은 법 제33조제2항</p> <p>같은 법 시행령 제13조</p>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다. 과징금의 부과·징수(체납처분 포함)	같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	
	3	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 실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6조	
	4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제7호, 제9호, 제2항제4호, 제6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문 화 유 산 과	1	문화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미판명시 경찰서장에 대한 통지 나. 발굴 또는 발견된 문화재의 공고 다. 경찰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화재의 처리 결과 통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환 경 기 후 정 책 과	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나. 환경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및 신청 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등 라.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합납부 등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대 기 보 전 과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사용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나. 검정을 받지 아니한 교정용품을 공급 또 는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4호	
	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과징금의 부과·징수 나. 불법배출시설의 사용 중지·철거·폐쇄 명령 및 대집행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다. 표지판의 설치 라. 사업장의 출입·검사 등 마. 자료제출의 요구	같은 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운행차의 개선명령 나. 자동차의 운행정지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같은 법 제70조의2	
	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수검명령 다.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및 지정 취소 마.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벌금, 과태료 부과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6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6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62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62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제4호 같은 법 제92조제11호 및 제94조제6항	
	5	환경책임보험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제외)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나. 영업정지명령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같은 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제49조	
	1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전력 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술 자격에 한정함)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기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	
에너지 정책과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p>자격의 취소 및 정지</p> <p>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관리 등</p> <p>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7조에 따른 국가기술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따른 청문</p>		
	2	<p>「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p> <p>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p> <p>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p>	<p>「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1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50조</p> <p>같은 법 제78조제4항제11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50조</p>	
자원순환 정책과	1	<p>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p> <p>(단,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써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구(군)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 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함.)</p> <p>가.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연구목적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p> <p>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p> <p>다.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p>	<p>「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p> <p>같은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p> <p>같은 법 제32조제3항</p> <p>같은 법 제33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p>	
	2	<p>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제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 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p>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p>다음 각목의 권한</p> <p>가. 주변지역 영향조사결과와 접수,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 명령 및 결과 공개</p> <p>나.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 납부, 징수 및 반환 등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 반환, 토지이용 제한</p> <p>다. 사후관리 제외 대상시설 인정,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알림, 비용명세서의 수리, 사후관리 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접수, 담보물의 접수,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 비용의 충당 및 반환, 사후관리 이행률의 결정, 사후관리 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의 접수, 반환금액의 결정,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접수,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알림</p>	<p>「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p> <p>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4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 제29조제1항, 제2항, 제31조 제2호, 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제2항, 제3항, 제35조 제2항 및 제3항</p>	
	3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4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확인 증명 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 나. 보고서의 제출명령 다. 보고명령 및 검사 라. 조치명령 마. 대집행 및 비용징수	<p>「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p> <p>같은 법 제38조제2항</p> <p>같은 법 제39조</p> <p>같은 법 제48조</p> <p>같은 법 제49조</p>	
	5	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 실시	「폐기물관리법」 제61조	
	6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관한 사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가.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내용 통보 나. 사용 권고 및 시정조치명령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제39조	
	7	비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	
수 질 환 경 과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수리, 변경허가·변경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다. 배출시설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라.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의 수리, 점검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폐수무방류 시설에 대한 조사 마. 수질오염물질의 회석처리에 관한 인정 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과 조업정지명령 및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의 개선계획서 접수·확인 등 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과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계획서 접수·확인 등 아.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자. 배출부과금 관련 사무 1)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2) 기준이내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 3)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4)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 검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제35조제3항 같은 법 제3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3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제40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일 부 제 외 (「 산 업 입 지 및 개 발 에 관 한 법 률 」 제 6 조 및 제 7 조 에 따 라 지 정 된 국 가 산 업 단 지 및 일 반 산 업 단 지 안 의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차.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카.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의 인정 타.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파. 명령이행의 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 검사의 지시·의뢰 하. 그 밖의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및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거. 골프장 농약사용의 확인 너. 사업자 등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 및 오염도검사 의뢰 더.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 러.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호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6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61조제2항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68조제2항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82조	사 업 장)
버 스 정 책 과	1	시내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면허 나. 운송개시 다. 운임의 신고 라. 운송약관의 신고 마. 사업계획변경인가 바. 공동운수계약협정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사. 준수사항의 위반에 대한 조치 아. 사업개선명령 자. 사업관리의 위탁신고 차.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 카.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타.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허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2	한정면허(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가. 면허(등록) 나. 운임·요금 및 운송약관신고 다. 사업계획 변경 라. 공동운수계약협정신고 및 변경 신고 마. 사업개선명령 바.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14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사. 사업의 상속신고 아. 사업의 휴·폐지인가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3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영업소, 정류소, 차고 및 기타 부대시설의 인가(고속버스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등에 대한 보고·검사 등에 관한 권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시내버스, 마을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고보고의 수리 및 처리 나. 사업의 일부 면허취소 및 사업의 정지처분 다. 과징금의 처분 및 징수 라. 과태료 처분 및 징수 마. 청문 실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제86조	
	택 시 물 류 과	1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운송사업면허 나. 임원 또는 정관변경 신고의 수리 다. 사업상속 신고의 수리 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신고수리 마. 시설확인 및 운송개시일 연기 또는 기간연장의 승인 바. 운임과 요금의 신고 등 사. 운송약관의 신고 아. 사업계획변경 인가 자. 공동운수 협정신고 차. 사업개선명령 카. 사업관리의 위탁신고 타. 사업의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신고 파.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 하. 자동차 사용정지 명령 거. 면허취소 및 사업의 정지 처분 등 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등에 대한 보고검사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8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p>더. 인허가사항의 이행신고 및 그 변경의 인가 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연장 (단, 차령연장 등에 관한 고시 제외) 며. 사고보고의 수리 및 처리 버. <삭 제></p> <p>서. 과징금의 처분 및 징수 어. 과태료 처분 및 징수</p> <p>저. 청문실시</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같은 법 제84조</p> <p>같은 법 제19조 <삭 제></p>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p>	
	2	<p>여객자동차운수사업(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사고보고의 수리 및 처리</p> <p>나. 사업의 일부 면허취소 및 사업정지처분 다. 과징금의 처분 및 징수 라. 과태료 처분 및 징수 마. 청문실시</p>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제86조</p>	
	3	<p>택시운전자격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p>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p>	
	4	<p>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허가, 변경허가</p> <p>나. 허가기준에 관한 신고 다. 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라. 보험회사 통지의 수령 마. 운송가맹점 신고의 접수 바. 개선명령</p>	<p>「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3조제7항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제11조제11항 같은 법 제13조</p>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사.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아. 상속의 신고 자. 운송사업의 허가취소·사업정지 처분 및 감차조치 명령 차. 청문 카. 등록증과 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타. 운송사업영업소의 허가증의 발급, 변경 및 재발급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제5항	
	5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나. 허가기준에 관한 신고 다. 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라. 보험회사 통지의 수령 마. 운송가맹점 신고의 접수 바. 개선명령 사.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아. 상속의 신고 자. 허가취소 및 사업의 정지 차. 청문 카. 운송주선사업영업소의 허가증의 발급, 변경 및 재발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제24조제5항 같은 법 제28조 및 제6조 같은 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제28조 및 제11조제11항 같은 법 제28조 및 제13조 같은 법 제2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제28조 및 제17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및 제3항	
	6	화물운송종사자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나. 청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제23조제3항	
	7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의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70조	
	8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의 보고·경영실태조사 및 재무관리상태진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	
	9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다. 개선명령 라.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제1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70조	
	10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나. 사업의 승계의 신고수리 다. 사업의 휴업·폐업 및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라.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마.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바. 사업자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사. 청문 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제21조의7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61조제1항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제67조	
교 통 관 리 과	1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기계식주차장의 검사 나. 기계식주차장의 검사필증 또는 사용금지 표지의 교부 다. 벌칙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같은 법 제19조의10제1항 같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2	자동차의 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	
	3	택시미터기 수리에 관한 검정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제95조	
도 로 과	1	일반국도의 접도구역내에서의 불법행위 단속	「도로법」 제50조제4항	
	2	일반국도의 접도구역내 다음사항 관리 가. 표주·표찰 및 표지 나. 기존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다. 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도로법」 제5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3	국유재산중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용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관리·처분 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국유재산법」 제2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에 관한 관리사무(동의 등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가목 「국유재산법」 제12조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다. 기부채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나목 「국유재산법」 제13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다목	
		라. 등기·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국유재산법」 제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라목	
		마. 관리전환의 협의 등	「국유재산법」 제1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마목	
		바.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국유재산법」 제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바목	
		사. 협의 및 소관여부 조회	「국유재산법」 제2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사목	
		아. 관리의 위탁	「국유재산법」 제29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아목	
		자. 사용 허가 및 승인	「국유재산법」 제3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자목	
		차. 사용료 징수 등	「국유재산법」 제3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차목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카. 사용료 면제 타.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파.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하. 청문 거.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너.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더. 대부 러.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머. 멸실 또는 철거보고	「국유재산법」 제3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카목 「국유재산법」 제3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타목 「국유재산법」 제3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파목 「국유재산법」 제3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하목 「국유재산법」 제39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거목 「국유재산법」 제4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너목 「국유재산법」 제41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더목 「국유재산법」 제6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러목 「국유재산법」 제7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머목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버.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이용·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어. 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저.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 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처. 국유재산 내 매장물 발굴 승인 등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제73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버목 「국유재산법」 제73조의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서목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어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저목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처목	
건설 심사과	1	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기계검사 및 수시검사 명령과 건설기계 검사 나. 검사의 최고 다. 정비명령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업의 등록신청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나.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다.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라.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호다목 및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호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재교부 마.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바.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사. 시정명령·지시 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자.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차. 건설업 등록말소등의 공고 및 통지 카. 청문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파.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하. 건설업 등록대장의 작성·보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3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0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2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3호	
자 치 행 정 과	1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권한 중 「군 단위 이하의 출력에 관한 승인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녹 지 정 책 과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조림비 및 산림기반시설 설치비의 반환조치 나. 산림용 종자묘목의 검사 및 출하금지·소독·폐기 등 조치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제4호 같은 법 제6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5항 제3호	
	2	임업후계자 등의 선발·지원 및 선발취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3	국유림 경영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중앙관서장 또는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작성한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 또는 동의권 나. 중앙관서장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작성한 국유림 경영계획의 신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6호 같은 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6호	
	4	「사방사업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사방지의 지정권 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인이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승인권 다. 사방지안에서의 제한행위에 대한 허가권 라. 사방지의 해제권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5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조합에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사 및 보고 수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산림조합법」 제1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도시경관 건축과	1	항공장애등 설치검사 및 사후관리 (지상고 60m 이상의 건물 시설물)	「공항시설법」 제36조	
해 양 항 만 과	1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나. 사업의 승계의 신고수리 다. 사업의 휴업·폐업 및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라.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마.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바. 사업자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제21조의7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61조제1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사. 청문 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제67조	
섬발전 지원과	1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권한 가.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나. 해양생물보호구역에서 해양생물에 대한 제1항제1호의 행위제한 다. 해양보호구역에서 개발행위 등의 제한 및 영어행위의 제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제27조제3항 같은 법 제27조제5항	
	2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등	같은 법 제30조	
	3	해양보호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 권한 가. 해양보호구역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 등의 매수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3조제1항	
	4	해양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 권한 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의 사업 시행(단, 시장이 필요 시 직접사업 시행) 나.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용시설의 지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 증대방안의 강구·시행 다. 해양보호구역에서 및 그 인접지역의 일부를 해양생태계 탐방 또는 휴양 등의 장소로 활용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제34조제2항 같은 법 제34조제3항	
	5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및 실비보상 권한 가.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나.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체결에 따른 실비 보상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 제41조제2항	
	6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를 위한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제한, 출입·취사·야영행위 제한 권한	같은 법 제47조	
	7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 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출입·취사·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같은 법 제65조 같은 법 제65조제2항제5호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나. 법제27조제1항 내지 제8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다. 법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보호구역 에서 개발행위 등이나 영어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같은 법 제65조제3항제3호 같은 법 제65조제3항제4호	
수 산 과	1	국가어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에 관한 허가·신고 및 협의 나.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명령 다. 사용 또는 점용료의 징수 라. 권리·의무의 이전인가 및 이전신고의 수리 (「어촌·어항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에 관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함) 마. 금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어항시설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 바. 변상금의 징수 사. 청문(같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취 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함)	「어촌·어항법」 제38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54조	
건 축 계 획 과	1	항공장애등 설치검사 및 사후관리 (지상고 60m 이상의 건물 시설물)	「항공법」 제83조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21.10.8.시행)에 따라 신설된 사무를 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 개별 법령의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손실보상금의 신청 및 이의신청 접수 등에 관한 사무를 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함.(별표 1 및 별표 2)

나. 연안의 오염실태 점검 등에 관한 사무 등 재위임 조항을 삭제함.
(별표 1)

다. 위임사무에 「전기안전관리법」을 추가함.(별표 1 및 별표 2)

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소관 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함.(별표 1 및 별표 2)

○ 소관부서 변경

- 물류창고업 등록 등에 관한 사무 : 해양항만과 ⇒ 택시물류과

○ 직제 순 변경에 따른 순서변경 3건

- 도로과, 건설심사과, 녹지정책과

○ 부서명칭 변경 4건

- 자원순환과 ⇒ 자원순환정책과

- 택시화물과 ⇒ 택시물류과

- 도서지원과 ⇒ 섬발전지원과

- 건축계획과 ⇒ 도시경관건축과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249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본청”을 “본청(합의제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직속기관·사업소(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로, “직속기관·사업소”를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직속기관·사업소”를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등기등록 기타”를 “등기·등록 등”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기타”를 “등 그 밖에”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8항”을 “제4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등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를 “등 사고로 인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을 “기부신청을 받은”으로 한다.

제13조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16조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 중 “아니할”을 “않을”로,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를 “재산을 인도하기 전에 납입하게 하여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으로, “기타”를 “등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를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속기관·사업소”를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사양서”를 “설명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지제5호의9서식까지에 의하여”를 “별지 제5호의9서식까지에 따라”로, “입목죽,”을 “입목죽 및”으로, “작성 관리”를 “작성·관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권리관계증빙서류”를 “권리관계 증명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27조 중 “별지 제9호”를 “별지 제9호서식”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8조 중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의”를 “등에 사용하는”으로,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별지 제16호 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별지 제17호 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별지 제19호 서식”을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한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18호서식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1호 서식”을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8. 그 밖에 대부 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 중 “별지 제22호 서식”을 “별지 제22호서식”으로 한다.

제32조 및 제3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의 서식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의2(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62조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및 변상금 사전통지 의견서, 제63조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 제63조의3에 따른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23호의2(1)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서: 별지 제23호의2(2)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23호의3호서식

4.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별지 제23호의4서식(첨부서류: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제33조 중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5조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제51조 에서”를 “제51조에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별지 제26호 서식)”을 “(별지 제26호서식)”으로, “(별지 제27호 서식)와 서약서 (별지 제28호 서식)”을 “(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서식)”로 한다.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 중 “것을 제외하고”를 “것 외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3호의3서식 및 별지 제23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은닉재산 신고서

1.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종목)	면적 (수량)	현소유자 (점 유)		비고
				주소	성명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시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재산 종류	코드 번호	구분	재 산 소 재 지				지목 및 종목	구조	수량	현장부 가 격	취득 연도	경과 연수	토지 등급	재평가액		차액 (증감)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가	지번								단가	평가액		

- (주) ○ 재 산 종 별: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재산 등으로 구분
-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으로 구분
- 재산 종목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10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
입고지서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인천광역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취
소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령」 제4조에 따라 시에서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계약체결 후 1개
월 이내에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
산의 보존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자
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 제한)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
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기타 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의 의사와 사유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시 직원의 참여하에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는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가 원상 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도·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시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허가조건의 해석) 본 허가조건의 해석에 대하여 서로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시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대부받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부자가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대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대부받는 자는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설치한 대부받는 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대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언제든지 대부받는 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대부받는 자가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대부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대부받는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 대부받는 자가 채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6. 대부받는 자가 대부자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 조항을 불이행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부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배상액 등)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대부자가 결정하고, 대부받는 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대부받는 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대부받는 자가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자가 원상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대부기간의 연장) 대부기간 만료 후에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금의 부담) 대부기간 만료 후에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그 밖의 사항)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에 대부자가 결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부자) 인천광역시장 (인)

(대부받는 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조정하거나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표

☐ 취 득(단위 : m², 천원)

구 분		동 수	필 지 수	면적(수량)	기 준 가 격	비 고
계						
토 지	당 초					
	금 회					
	누 계					
건 물	당 초					
	금 회					
	누 계					
기 타	당 초					
	금 회					
	누 계					

☐ 처 분(단위 : m², 천원)

구 분		동 수	필 지 수	면적(수량)	기 준 가 격	비 고
계						
토 지	당 초					
	금 회					
	누 계					
건 물	당 초					
	금 회					
	누 계					
기 타	당 초					
	금 회					
	누 계					

(단위: m², 천원)

[illegible]

※ 재산구분 : 토지, 건물, 기타

(단위: m^2 , 천원)

[illegible]

※ 재산구분 : 토지, 건물, 기타

[별지 제16호서식]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이하 “매도자”라 한다)와 시 구 동 번지 거주 ○○○ (이하 “매수자”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금 원에 매각한다.

제2조(대금의 납부)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계약보증금으로 금 원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회수	분납금	이 자	납부기일	회수	분납금	이 자	납부기일

② 매수자는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각 재산이 건물,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일 때에는 매도자가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매도자를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 매각 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선납) 매수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4조(권리이전 조치) 매도자는 계약에 따라 매수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매수자가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행위) 매수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이나 그 밖에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6조(계약해제) ①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매도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5조에 위반한 때
3. 본 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거짓 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제2조에 따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하여 공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② 매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7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 매도자는 기 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8조(매매계약서의 해석) 매수자는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에 매도자가 결정한다.

제9조(분할납부) 매수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 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

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 전부를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0조(환지예정지의 저촉대지) 매도자는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매수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매도자에게 제기하지 않는다.

제11조(소송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도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공과금) 매수자는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모든 공과금을 부담하며, 매도자가 본 재산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모든 부담에 대하여 매도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 인천광역시장 (인)

(매수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조정하거나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23호의3서식]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점유 재산의 표시		분납형식		비고		
소 재 지	점유면적(m ²)					
		년 회 분납				
분할납부 신청내역						
변상금 총 액 (원)	회차	납부일	변상금(원)	연부이자(원)	합 계	비고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3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
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23호의4서식]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소 재 지	점유면적(m ²)	부과기간	변상금(원)	유예신청사유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장 귀하

◇개정이유

공유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2021.9.30.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비하며,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본청의 범위에 합의제행정기관을 포함함.(제2조제2항제1호)
- 나. 감수인 지정과 관련한 인용조항을 정비함.(제8조)
- 다. 변상금 사전통지 등 변상금 관련 서식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
(제32조의2)
- 라. 별지 서식을 정비함.(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3호의3서식 및 별지 제23호의4서식)

인천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250호

인천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감찰”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조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개선 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안전감찰관”이란 제1호에 따른 안전감찰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감찰 업무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안전감찰대상기관”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을 위해 예비·실지 등의 형태로 조사·평가하고자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시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감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안전감찰의 유형) 안전감찰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예방 안전감찰: 안전감찰대상기관의 특정한 재난안전 업무 및 정책의 현장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요소와 위험요인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
2. 기획 안전감찰: 계절별·시기별·특성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유형을 고려하거나,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안전업무를 위해 매년 반복하는 사업·교육·훈련에 대한 업무실패를 일정기간 관찰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
3. 특별 안전감찰: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재난관리 이행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재난관리 의무위반이나 소홀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안전감찰
 - 가.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관리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
 - 나.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관리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복무 안전감찰: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재난관리 필요기간 또는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의 재난안전

관련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감찰

제5조(안전감찰반 편성) ① 시장이 안전감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안전감찰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안전감찰반은 안전감찰반장과 안전감찰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안전감찰반장은 안전감찰관 중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안전감찰반원은 안전감찰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감찰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안전감찰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안전감찰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안전감찰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감찰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안전감찰관의 의무) 안전감찰관은 성실한 직무수행, 중립과 공정한 조사활동을 위해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지켜야 한다.

제7조(안전감찰 준비) ① 시장은 안전감찰 계획 수립 전에 안전감찰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관리의 무위반 행위유형을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또는 안전감찰 실시에 앞서 안전감찰 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감찰 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안전감찰 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제8조(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안전감찰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감찰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감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감찰의 목적과 그 우선순위
2. 안전감찰의 유형과 대상, 범위 및 기관
3. 안전감찰 기간과 감찰반 인원
4. 안전감찰의 중점, 예상 문제점 및 착안사항
5. 그 밖에 안전감찰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안전감찰 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안전감찰 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감찰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9조(안전감찰 실시절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안전감찰 실시절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시장은 실지 안전감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에 안전감찰 계획의 개요를 안전감찰대상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감찰 통지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에게 안전감찰을 받는 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감찰 장소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시장은 사실 증명에 필요한 조사를 위해 관계 직원의 출석, 답변요구,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그 밖에 안전감찰을 위해 필요한 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4. 안전감찰관은 제3호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와 질문서, 문답서 등의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5. 안전감찰관은 제4호의 자료를 작성할 때, 안전감찰을 받는 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줄 수 있고, 이를 위해 자료 작성 장소를 별도의 공간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안전감찰대상기관 및 그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안전감찰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0조(보고사항) ① 안전감찰관은 실시 안전감찰 활동이 끝난 뒤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감찰보고서: 안전감찰 결과, 지적사항의 개요와 조치의견 등을 기술하는 내부보고서를 말한다.

2. 안전감찰 결과 처분요구서: 안전감찰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할 사항을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 안전감찰대상기관 또는 관련 공무원 및 직원에게 송부하기 위한 최종보고서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감찰 관련 업무의 추진체계 또는 현황

2. 안전감찰 목적, 범위와 방법

3. 안전감찰을 통해 발견한 불법행위, 중대한 오류와 낭비 등 지적사항

4. 제3호 지적사항에 대한 권고 및 시정요구 사항

5. 안전감찰을 통해 발견한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6. 안전감찰관의 의견에 대한 안전감찰대상자의 변명 또는 반론
7. 안전감찰이 미진하여 추가로 안전감찰을 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

제11조(처분사유) 안전감찰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처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재난응급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이 발하는 재난 및 안전관련 비상근무 지시, 예규, 훈령 그 밖에 특별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3.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거짓 보고, 부당한 지시 또는 부당한 정책결정 등으로 피해가 발생 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자료 제출 및 관련자 면담의 요구, 자료의 작성 등 안전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제12조(처분기준) ① 시장은 안전감찰 결과 제11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요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요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령 또는 소속 법인의

- 등이 정한 문책 사유에 해당하는 등으로 재난안전에 위해를 끼친 경우
3. 시정 요구: 안전감찰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가 징수·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 요구: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주의 요구: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개선 요구: 안전감찰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통보: 안전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현지조치 요구: 안전감찰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안전감찰 기간 중 현지에서 시정 또는 주의 조치가 가능한 경우
 9. 고발: 안전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인천광역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등 범죄 고발 규정」과 「인천광역시 공무

원 행동강령 규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전감찰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제13조(처분심의회)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결과 처분심의회(이하 "처분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처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안전감찰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 처분심의회는 위원은 안전감찰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처분심의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처분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안전감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4조(안전감찰 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시장은 안전감찰의 결과로서 결정한 처분을 별지 제3호서식의 처분요구서에 작성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통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6조제4항을 따른다.

제15조(재심의신청 등)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에 증거자료를 붙여 문서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심의신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문서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안전감찰 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16조(재심의) ①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심리·처리하기 위하여 재심을

실시하여야 한다. 재심의에 대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① 시장은 안전감찰을 실시하기 전에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장 또는 안전감찰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안내서의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의2 및 영 제86조의3 및 제86조의4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자 또는 그 소속기관·단체의 장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붙여 시장에게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③ 안전감찰관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신청을 직접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면책심의회를 거쳐 면책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결정시에는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처분요구서에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불이익 조치) 시장은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를 하는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처분을 받은 횟수를 반영하도록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9조(기록·관리) ①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 장이 그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및 인사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감찰의 독립성) ① 시장은 안전감찰관을 배치하거나 안전감찰 활동을 할 때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찰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전문역량 강화) ① 시장은 새로 임용된 안전감찰관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감찰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감찰관의 능력개발 및 안전감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감찰관 교육훈련, 워크숍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감찰 기구와의 안전감찰 기법 및 수범사례 등 공유를 활성화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안 전 감 찰 통 지 서

감찰명	
감찰기간	
감찰대상	
감찰반	

주요 감찰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에 따라 위 안전감찰에 대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제 목】

【내 용】

【확인자 의견】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기관 부서 직위 직급 ○ ○ ○ (인)

참관자 : 소속기관 부서 직위 직급 ○ ○ ○ (인)

[별지 제3호서식]

처 분 요 구 서

[행정상 : / 신분상 :]

【제 목】

【소 관 청】

【관계기관】

【내 용】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서

[기관명 :]

일련 번호	처분요구종류 (시행일)	제목	처분요구요지	처리결과	완결 여부	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

재 심 의 신 청 서

1.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기 관 명		직 명	
	주 소 (기관의 소재지)			
2. 안전감찰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3. 재심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안전 감찰결과의 내용				
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5. 안전감찰 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및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중

증명자료: 표지 포함 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적극행정 면책 안내서

재난관리책임기관 공무원 또는 직원이 안전감찰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안전감찰을 받은 자 본인
 - ※ 안전감찰을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또는 안전감찰 전담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안전감찰을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안전감찰 결과 처분이전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안전감찰을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행위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재난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및 긴급구조·구호·대피 등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것
- 안전감찰을 받는 공무원 등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안전감찰을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안전감찰을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을 것
 -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보고절차를 거쳤을 것
- 안전감찰을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될 것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재난 및 안전관리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및 회피한 경우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인 경우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인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면책 요건 검토	해당 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보호)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추정)여부		
4) 사적인 이해관계가 존재 여부		
5) 중대한 절차상 하자 여부		
- 자료 및 정보의 충분한 검토 여부		
-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준수 여부		
- 업무처리를 위한 보고 여부		
면책 대상 제외 여부 검토	해당 여부	첨부서류
1)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고의 불이행, 지연 등 여부		
2) 금품수수 또는 편의제공을 받았는지 여부		
3) 자의적인 법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 본질적인 사항 위배 여부		
4) 위법 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여부		
5) 기타 위에 준하는 위법 부당 행위 여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8호서식]

처 분 대 장

일련 번호	처분 일자	처 분 대 상 자				처 분 사 유	비고
		소 속	직 위	직 명	성 명		

210mm×297mm[백상지 80g/㎡]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다. 안전감찰 유형, 안전감찰반 편성, 안전감찰 계획수립·실시절차·보고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마. 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7조)

바. 불이익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8조)

사. 처분사항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9조)

아. 안전감찰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0조)

자. 안전감찰관의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1조)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251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중 “또는”을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로 한다.

제20조제5항 중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 제8호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를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군·구 소속 공무원의 전입”을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 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전입, 군·구 소속 공무원의 전입”으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인사교류) 임용권자는 승진요인이나 사무형편 등으로 소속 공무원의 시의회 또는 군·구로의 전출, 시의회 또는 군·구 소속 공무원의 시로의

전입, 시의회 또는 군·구간 인사교류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 또는 해당 군·구의 결원, 인사운영 사정 등을 고려하고 사전에 전·출입 인력규모를 협의하여 실시하되, 시의회 또는 군·구간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9, 별표 10, 별표 16 및 별표 1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9조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공 업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기계운전	<p>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p> <p>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톨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p>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조 선	<p>기 술 사 : 조선</p> <p>기 사 : 일반기계, 조선</p> <p>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p> <p>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p>	
	일반전기	<p>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p> <p>기 능 장 : 전기</p> <p>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p> <p>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p>	

공 업	전 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리 기 사 :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 산업기사 : 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기능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p>	
	원 자 력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p>	<p>기사자격증 기사비용 적용 : 원자 로조종감독자, 핵 연료물질취급감독 자, 방사성동 위원소취급자(특 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원 자로조종사, 핵연 료물질취급자</p>
	금 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 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 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 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 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p>	
	섬 유	<p>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 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p>	
	일반화공	<p>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p>	
	자 원	<p>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 기 사 : 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 산업기사 : 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기능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p>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 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 사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 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 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 조경, 산림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산물품질관리사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보건교 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 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 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 사2급, 보건교육 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보건교 육사3급

보 건	방 역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p>
식품위생	식품위생	<p>기술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p> <p>기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p> <p>산업기사: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p> <p>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p>
의료기술	의료기술	<p>기술사 방사선관리</p> <p>기사: 의공</p> <p>산업기사: 의공</p> <p>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p>
환 경	일반환경	<p>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p> <p>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p> <p>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p>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대가수질)</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p>

환 경	수 질	<p>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p> <p>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관리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60%만 가산</p> <p>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p>
	대 기	<p>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능장 : 산림</p> <p>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대기)</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폐 기 물	<p>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능장 : 화공, 산림</p> <p>기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시 설	도시계획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p> <p>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측량, 지적, 교통</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p>
	일반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수도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업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시 설	건 축	<p>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 사
	측 지	<p>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p>	
	교통시설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도시교통 설 계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디자인	<p>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p> <p>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p> <p>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p> <p>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p>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 사
방재안전	방재안전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p>	
방송통신	통 신 사	<p>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p> <p>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p>	
	통신기술	<p>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전송기술	<p>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전자통신 기 술	<p>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p>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p>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기계 시설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 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승강기	
	전기 시설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 야 전기, 승강기	
	화공 시설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 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 계	<p>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p> <p>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농촌지도	농업기계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p>	
공업연구	전 기	<p>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p> <p>기 능 장 : 전기</p> <p>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전 자	<p>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p> <p>기 능 장 : 전자기기</p> <p>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p>	

공업연구	금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유	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화학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경영	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리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 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작물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촌지도	농업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원 예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 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 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 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산업곤충	기 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 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 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 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 취 급 자 (일 반), 방사선취급감독 자
	농촌생활	기 술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평생교 육사 1급, 사회조 사분석사 1급
농촌지도	농촌생활	기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 생교육사 2급, 사 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업경영	산업기사 :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농촌지도	농촌사회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평생교 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 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정,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농업연구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농촌지도	축 산	산업기사 : 축산, 식품	
녹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 조정, 종자, 산림, 농화학	
	조 경	기 사 : 조정,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촌지도	임 업	산업기사 : 조정,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수의연구	수 의	기 술 사 : 축산 기 사 :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산업기사 : 축산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수산자원		
어촌지도	어 촌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 연구	수산양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식품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의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 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 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 사 2급
환경연구	환 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 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 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 측정분석사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 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 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 방지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시설연구	토 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농촌지도	농업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시설연구	건 축	<p>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연구	안전 관리	기 사 : 방재	
	재난 관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6]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제21조제1항 관련)

직렬 \ 계급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데 이 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 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 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 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 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 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 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 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안경사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6.2.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7]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9조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7급		8·9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 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 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 안전관리자직업상 담사2급, 사회조사분 석사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 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 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 조사분석사2급, 임상 심리사2급	
가산비율	5%	3%	5%	3%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 2.](#) 기술 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5](#)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

[별표 9]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20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데 이 터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술사: 조선 기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기능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녹 지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해양,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수산양식, 식품가공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전기, 전자기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보 건	보 건	<p>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p> <p>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p> <p>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p> <p>기능사: 식품가공</p>
의료기술	의료기술	<p>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p>
식품위생	식품위생	<p>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p> <p>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p> <p>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p> <p>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환 경	일반환경	<p>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p> <p>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p>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p>
	수 질	<p>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 지</p> <p>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대 기	<p>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폐 기 물	<p>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 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 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항 공	일반항공	<p>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p>
	정 비	<p>기 사 : 항공</p> <p>산업기사 : 항공</p>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수도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급속채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지 적	측 지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 설 계	도시교통 설 계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방재안전	방재안전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p>
방송통신	통신사	<p>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p> <p>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p>
	통신기술	<p>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전송기술	<p>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전자통신기술	<p>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조리	조리	<p>기능장 : 조리</p> <p>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p> <p>기능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p>
위생	사역	<p>기능사 : 환경기능사</p>
시설관리	시설관리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p> <p>산업기사 : 조경</p> <p>기능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p>
	기계시설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p> <p>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p> <p>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승강기</p>
	전기시설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p>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p> <p>기능사 : 전기, 승강기</p>
	화공시설	<p>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능장 : 위험물, 가스</p> <p>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p> <p>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p>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p>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류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감정평가사(3)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 육 행 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데 이 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직류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기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물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물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물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 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직렬	직류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보건정보관리사(12) 안경사(12)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2급(7)	임상병리사(8) 보건정보관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보건정보관리사(8) 안경사(8)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보건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보건정보관리사(5) 안경사(5)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2) 보건정보관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보건정보관리사(2) 안경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보건정보관리사 안경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위생사(7) 환경측정분석사(7) 청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청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청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위생사(2) 청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위생사 청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운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운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속 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운 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 1. (삭제)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9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10]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

(제20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8 및 별표 9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8 및 별표 9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8 및 별표 9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8 및 별표 9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8 및 별표 9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택 제 임 기 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택 제 임 기 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한 시 임 기 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16]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20조제5항 관련)

구분	계급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라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다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연구사 및 지도사
연구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 고 : 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

[별표 1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24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데 이 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 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 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 검사, 초음파비파괴 검사, 자기비파괴 검사, 침투비파괴 검사, 와전류비파괴 검사, 누설비파괴 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 검사, 초음파비파괴 검사, 자기비파괴 검사, 침투비파괴 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종자, 식품)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어 로			
	해양교통 시 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보 건	방 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자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직렬 \ 계급 직류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방재))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수도토목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방재)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계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술			
조리	조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직렬 \ 계급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시공, 건축품질시험)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3**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 시 원 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사 표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출생년도 제외)		/	/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우 수	
			보 통	
			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 5명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 5명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 5명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3호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출생년도 제외)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4호서식]

시 험 요 구 서

접수번호	기 관	개 인					
①	소속		② 시험 구분		③ 임용예정 직 급	직명	
	요구					직류	
④	한글		⑤ 연령	만 세	⑥ 현 직 급	계급	급
	한자					직명	
⑦ 선 택 과 목	가.	⑧ 필기시험 면제사유		⑨ 제 1 차 시험 면제사유	년 월 일 시행 제 회 1차 합격 응시번호	직류	
	나.					계급	급
⑩ 자격·면허 훈련 등			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	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	※ 대장 원본 확인	대장번호	
						확 인 자 성 명	
위와 같이 요구함.						계 인	(사진) (3.5cm×4.5cm)
년 월 일 시 험 요 구 기 관 의 장 (인)							
※ 시 험 시행사항	시 행 차 수	1	2	3			
	시행연월일			
	회 수	제 회	제 회	제 회			
	응 시 번 호						
	결 과						
응시 번호			응 시 표			계 인	(사진)
년 시행 제 회 시험							
임용예정직명 :			(급 류)			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 일한 규격	
성 명 :							
시험요구기관명 :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 (인)							

작 성 요 령

1. ※란과 응시표상의 각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기재한다.
2. ① ~ ⑪란은 시험요구기관의 인사사무담당자가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따른다.
 - ①란의 “소속”란은 응시자가 시험요구기관의 산하기관 소속공무원일 때 그 산하기관명까지 기재한다.
 - ②란은 “전직”, “경력경쟁임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③, ⑥라의 “직류”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직렬표에 의거 해당직류에 한하여 명확히 기재한다.
 - ④란은 정자(正子)로 기재한다.
 - ⑦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 또는 [별표2]를 참조하여 1과목 또는 2과목(서기관이상 전직, 경력경쟁임용의 경우에는 (가)란에 1차 (나)란에 2차시험과목)을 기재하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과목을 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과목명도 모두 명기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 ⑧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규정에 따른 필기시험면제(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대상자에 한하여 그 근거법규와 사유를 명기한다(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증명서류 즉 자격증사본 또는 연구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⑨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면제대상자에 한하여 본인의 제1차시험 합격당시의 시행연월일, 시행회수 및 응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⑩란과 ⑪란은 6급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에 한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중 가점이 높은 어느 하나를 기재하되 반드시 이를 증명할만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사진은 최근에 촬영한 것을 첨부하고 인사사무담당자의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수입증지첨부란)

(절 취 선)

응 시 자 주 의 사 항

1.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신분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필기도구를 지참하여야 한다.
2. 시험 당일은 매 시험 시작 30~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 위 오른쪽에 응시표 및 신분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등록번호	제 회 번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 제 회	
※ 급	직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지구	번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② 희망지역		※ 등록심사
	(한문)		제1지역	시 군	사진대조
	(영문)		제2지역	시 군	서류심사
④ 주 소					(사진부착)
⑤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 대 폰 :				
⑥ 병 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부문·과목	
⑧ 자 격 면 허			⑨ 상 별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⑩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령청	

(※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⑪ 비상연락처

관계	성명	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임용권자) 귀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과 또는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물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된 후보자만 제출
-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 ② 회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 ⑨ 상 별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 ⑪ 비 상 연 락 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임용후보자명부

① 등록 번호	② 등록 연월일	③ 성명	④ 생년 월일	⑤ 성별	⑥ 현주소	⑦ 최종 출신 학교명	⑧ 특기	⑨ 병열필 미필	⑩ 희망 기관	⑪신원조사			⑫추천					⑬임용			비고
										의뢰	회보	송부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연월일	직명	근무 관서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 ⑪ 신원조사 항목은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만 해당함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 명시된 중복 조문을 삭제함.(제4조)
- 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함.(제11조제3항)
- 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을 정비함.(제20조제5항)
- 라. 결원보충 대상을 확대함.(제43조제1항)
- 마. 인사교류 대상을 확대함.(제44조)
- 바. 별표 및 별지 서식 보완·개선함.(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9, 별표 10, 별표 16, 별표 17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252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및 군·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로,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구”를 “시의회 및 군·구”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시”를 각각 “시 및 시의회,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2항 후단 중 “군·구”를 “시의회 및 군·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중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7조의5에 따라 시와 시의회,”로 한다.

제11조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중 “군수·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군·구간”을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군수·구청장은 시와 시의회, 시와 군·구 및 군·구 상호간”으로 한다.

제13조 중 “군수·구청장”을 “의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인사교류 결과보고)”를 “(인사교류 결과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수·구청장”을 “의장·군수·구청장”으로,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5조 중 “군수·구청장은 당해”를 “의장·군수·구청장은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개정(20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되어 시와 시의회 간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사교류 적용범위에 시의회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제2조)

나. 시장 소속으로 두는 인사교류협의회 위원에 시의회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제3조제3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253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를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로 한다.

제3조 중 “조례”를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관할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7조제1항”을 “조례 제7조제1항에서”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급수사용자들”을 “수도사용자들”로, “하며, 시설분담금 및”을 “하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설분담금 및 급수공사비”를 “급수공사비”로 한다.

제8조 중 “사업소장은 급수공사”를 “급수공사”로,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등이”를 “급수공사비가”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냉수와 온수를 분리하는 경우와 사업소장”을 “사업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조건으로 승인하며,업종이 다른 경우에”를 “조건으로”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금액이”를 “급수공사비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조례 제11조제4항제2호의”를 “조례 제11조제4항제2호에서”로, “pH”를 “수소이온농도”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22조제6항에 따라 산출한 누수량을 해당 업종의 효율로 산정한 요금도 시공자가 변상”을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9조제2호에 따라 산정한 요금을 시공자가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제1항 및 제2조”를 “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급수판매승인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사업소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후,”를 “후”로, “승인서”를 “급수판매승인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의”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급수 판매승인”을 “급수판매 승인”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1호 중 “택지조성사업, 구획정리사업”을 “재건축사업, 택지조성사업, 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5항 중 “신청한 사용자의 해당”을 “사용자의 업종변경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사용수량”을 “사용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국

· 내외여행 또는 입원”을 “국·내외여행, 입원 또는 빈집”으로 한다.

제22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4항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접수, 처리”를 “접수”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기산하고”를 “계산하고”로, “기산하며”를 “계산하며”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조례 제43조에 제1항제1호”를 “조례 제4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43조제1항제8호”를 “조례 제43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가목 중 “가정용 :”을 “가정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외 :”를 “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37조제1항제4호의”를 “조례 제37조제1항제4호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설수용가 :”를 “기설수용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건축공사장 :”을 “건축공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경우 :”를 각각 “경우:”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조례 제38조제1항의”를 “조례 제38조제1항에서”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제6호 전단 중 “도서지역”을 “섬지역”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자”를 “신고자를 말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사업소장)에게”를 “사업소장을 말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만원 또는 3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를 “다음 각

호와 같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상품권”을 각각 “상품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기우편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를 “등기우편 또는 모바일로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그”를 “해당 지역 누수탐사 등”으로 하고, “용역업무(누수탐사 등)”를 “용역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46조 중 “대하여”를 “대하여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첨부 제5호 중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처리
기간
20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급수공사비 등의 적용기준(제12조의2제5항)

구분		세부내용			
1. 주 수도계량기 설치 시	구분		적용 대상		정액금 및 적용방법
	일반주택		D15mm~50mm이하 (공동주택 제외)		- 구경 정액금 : 구경 정액급수공사비 + 수수료 - 적용방법 : 해당 구경 정액금
	공동주택, 오피스텔		공동주택(2세대 이상)		- 세대 정액금 : 세대 정액급수공사비 + 수수료
			오피스텔 (50호 미만)		- 적용방법 : 세대정액금 × 세대수
	* 실비가산: 측량비, 점용료(도로제외), 법정수수료 등 정액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 보조계량기 설치비용: 실 공사비				
2.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시	가. 전체 세대 설치 시				
	구분		세대수	설치범위	적용방법
	공동주택	신축	50세대 미만	주 수도계량기 + 세대별 수도계량기	세대 정액금 × 전체 세대수
		기존	”	세대별 수도계량기	세대정액금 면제 (제12조의2 제2항)
	오피스텔, 일반주택	신축	50세대 미만	주 수도계량기 + 세대별 수도계량기	세대 정액금 × 전체 세대수
		기존	”	세대별 수도계량기	
	*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 세대가 “나” 항에 따라 일부만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후 나머지 전체 세대가 세대별을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세대정액금 면제) * 실비가산 : 측량비, 점용료(도로제외), 법정수수료 등 정액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나. 일부 세대 설치 시(기존주택)				
	구분		세대수	설치범위	적용방법
	공동주택, 오피스텔, 일반주택	세대별 계량기	전체 50세대 미만 중 2세대 이상	주 수도계량기 + 세대별 수도계량기	세대 정액금 × 해당 세대수
		주 계량기	1세대	주 수도계량기	해당 구경 정액금
	* 실비가산 : 측량비, 점용료(도로제외), 법정수수료 등 정액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21.12.30. 시행) 및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21.12.30. 시행)에 따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와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용어를 통일함.(제3조, 제11조 및 별지 제8호의2서식)

나.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에 따라 시설분담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함.(제7조제2항, 제8조, 제12조의3, 제13조제2항, 제19조제5항, 제22조제6항, 별표 3 및 별지 제5호서식)

다. 「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도서지역”을 “섬지역”으로 정비함.
(제32조의3제1항제6호)

라. 누수 포상금 지급조항을 정비하고, 지급 방법을 확대함.(제34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4항)

마. 근거법령 인용조문과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함.(제9조제1항, 제14조제4항, 제19조제4항, 제21조제6항 및 제30조제4항)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제721호

공 포

인천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장 우 삼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제721호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비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 공무원의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를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할 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라 함은 다음에 계기한”을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출원과 출납원”을 “지출원, 출납원,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출납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계기한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직급”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회계관계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자 또는 전조 제2조에 계기한자(분임자를 포함한다)중”을 “사람 또는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 중”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본청의 분임재무관 및 (통합)기금출납원 직인은 별도 비치하지 않고 일상경비출납원의 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직인의 자체와 규격)”을 “(직인의 글자와 규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직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직인)”을 “(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수개”를 “여러 개”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 규정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학교회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한 물품출납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6조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의 제목 “(교부 및 등록)”을 “(직인의 교부 및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청, 사업소”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직인”을 “직인”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기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인등록조서에 인영 및

그 밖에”로, “기재하고”를 “적고”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대장(이하 “직인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1. 본청(교육재정과)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직인대장
2. 교육지원청(복지재정과)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직인대장(단, 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

제8조의 제목 “(재교부 및 폐기)”를 “(직인의 재교부 및 폐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직인의”를 “직인이”로, “마멸되거나 경신”을 “마멸되어 갱신”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이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관인”을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인”으로, “이를 교부기관에 보고 또는 통보”를 “교부기관에 보고”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인을 재교부 및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소속관서의 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신조, 개각 또는”을 “등록하거나”로, “공고”를 “시보에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직인조각(폐기)보고서를 3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직인조각(폐기)보고서를”로, “제6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직인 등록조서 또는 직인폐기 신고서와 함께”를 “제7조에 따른 직인등록조서 또는 제8조에 따른 직인폐기신고서와 함께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중인 직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직인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새로운 직인을 등록할 때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직인 구분 및 인영 규격

직인 구분	인영 규격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통합)기금운용관 및 그 분임자의 직인	2센티미터의 정방형
출납원, 물품출납공무원, (통합)기금출납원 및 그 분임자,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의 직인	1.8센티미터의 정방형

[별지 제1호서식]

표면
직인등록조서

회 계 명 :		(인영)
관 서 명 :		
직 명 :		
사용개시일		

규격: 세로 5cm 가로 16cm

이 면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관서의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표면
직인폐기신고서

직인폐기신고서

회 계 명 :		(폐기당시인영)
관 서 명 :		
직 명 :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규격: 세로 5cm 가로 16cm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당시인영”란에 “망실”이라 적고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적고 날인한다.

이 면

(폐기사유)

표기와 위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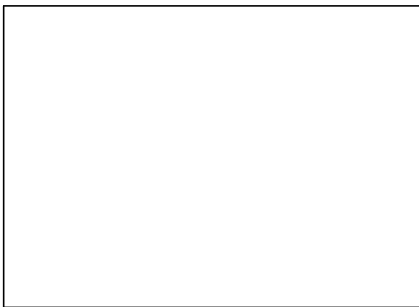
(관서의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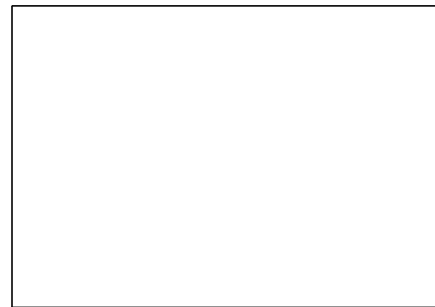
직인조각(폐기)보고서

직 인 명 :

신조
년 월 일 개각
폐기



(신)



(구)

규격: 세로 9cm 가로 16cm

위와 같이 조각(폐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관서의 장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u>교육비특별회계</u>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의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교육비특별회계</u>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할 때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에 <u>게기한</u> 공무원을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u>지출원과 출납원</u> 2. 물품관리관과 <u>물품출납원</u> 3. (생략) 4. 제1호와 제2호에 <u>게기한</u> 자의 분임자	제2조(정의) ----- ----- <u>이란</u>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1. ----- ----- <u>지출원, 출납원,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출납원</u> 2. ----- <u>물품출납공무원</u> 3. (현행과 같음) 4. ----- 해당하는 사람---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u>그 직급이</u>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u>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거나 임명된 자 또는 전조 제2조에 게기한자(분임자를 포함한다)</u> 중 교육감이	제3조(직인의 비치) ① ----- --- <u>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u> -----. ----- <u>회계관계공무원</u> ----- <u>사람 또는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u> 중 -----

현행	개정안
<p>그 직인의 비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u>자</u>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p><신 설></p>	<p>-----</p> <p>----- <u>사람은</u> -----</p> <p>--.</p>
<p>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 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로 새겨야 한다.</p>	<p>제4조(직인의 글자와 규격) ① 직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의한다.</p>	<p>② ----- 따른다.</p>
<p>제5조(직인) ①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u>수</u>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u>기</u>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p>	<p>제5조(각인) ① -----</p> <p>-----.</p> <p>----- 여러 개</p> <p>----- 그 밖에 -----</p> <p>-----.</p>
<p>② 전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재회계규칙 제3조 및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p>	<p>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 규정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학교회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인천광</p>

현행	개정안
<p><u>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u></p> <p>제6조(교부 및 등록) ① 본청, <u>교육청, 사업소,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교육감이 새겨 이를 교부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소속된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교육장이 새겨 이를 교부한다.</u></p> <p>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u>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u>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p> <p>③ 회계관계공무원이 <u>그 직인을</u>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u>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u> 소속관서의 장의 인증을 받아 <u>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직인대장</u>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직인대장의 비치) 본청, 교</p>	<p><u>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u> 규정한 <u>물품출납공무원으로</u>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p> <p>제7조(직인의 교부 및 등록) ① - - <u>교육지원청, 직속기관</u>----- ----- ----- ----- <u>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u> ----- ----- ----- -----.</p> <p>② ----- <u>제6조에 따라</u> ----- ----- -----.</p> <p>③ ----- <u>직인</u>----- ----- <u>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인등록조서에 인영 및 그 밖에</u> ----- <u>적고</u> ----- ----- --- <u>제6조에 따른</u> ----- ----- --.</p> <p>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회계관계</p>

현행	개정안
<p>육청, 사업소,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소속된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대장은 본청 교육재정과에 비치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소속된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대장은 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에 비치한다.</p>	<p>공무원의 직인대장(이하 “직인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p> <p>1. 본청(교육재정과)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직인대장</p> <p>2. 교육지원청(복지재정과)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직인대장(단, 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p>
<p>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직인의 분실 또는 <u>마멸되거나</u> 경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당초에 교부 받은 기관에 직인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전항이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u>관인</u>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u>이를 교부기관에 보고 또는 통보</u>하여야 한다.</p> <p>③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 또는 폐기한 경우에 있어서는 종전의 관인대장은 이를</p>	<p>제8조(직인의 재교부 및 폐기) ① 직인이----- <u>마멸되어</u> 갱신----- ----- ----- ----- --.</p> <p>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u>직인</u>----- ----- <u>교부기관에 보고</u>----- -----.</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인을 재교부 및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폐기신고</p>

현행	개정안												
<p><u>따로 비치하여야 한다.</u></p> <p>제9조(공고) ① 직인을 <u>신조, 개각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공고</u> 하여야 한다.</p> <p>② 회계관계공무원은 <u>전항의 규정에 의하여</u> 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u>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직인조각(폐기)보고서를 3부 작성하여 소속관서의 장의 명의로 제6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직인 등록조서 또는 직인폐기 신고서와 함께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u></p>	<p><u>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소속관서의 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9조(공고) ① ----- <u>등록하거나</u> ----- <u>시보</u> <u>에 공고</u>-----.</p> <p>② ----- <u>제1항에 따라</u> ----- ----- <u>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직인조각(폐기)보고서를</u> ----- ----- <u>제7조에 따른 직인등록조서 또는 제8조에 따른 직인폐기신고서와 함께 제6조에 따른</u> ----- -----.</p>												
<p>[별표]</p> <table border="1"> <tr> <th>직 인 구 분</th><th>인 영 규 격</th></tr> <tr> <td>징수관, 경리관 및 그 분임자,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물품관리관 및 그 분임자, 지출원의 직인</td><td>2센치의 정방형</td></tr> <tr> <td>출납원 및 분임자의 직인</td><td>1.8센치의 정방형</td></tr> </table>	직 인 구 분	인 영 규 격	징수관, 경리관 및 그 분임자,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물품관리관 및 그 분임자, 지출원의 직인	2센치의 정방형	출납원 및 분임자의 직인	1.8센치의 정방형	<p>[별표] 직인 구분 및 인영 규격</p> <table border="1"> <tr> <th>직 인 구 분</th><th>인 영 규 격</th></tr> <tr> <td>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통합) 기금운용관 및 그 분임자의 직인</td><td>2센티미터의 정방형</td></tr> <tr> <td>출납원, 물품출납공무원, (통합)기금출납원 및 그 분임자,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의 직인</td><td>1.8센티미터의 정방형</td></tr> </table>	직 인 구 분	인 영 규 격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통합) 기금운용관 및 그 분임자의 직인	2센티미터의 정방형	출납원, 물품출납공무원, (통합)기금출납원 및 그 분임자,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의 직인	1.8센티미터의 정방형
직 인 구 분	인 영 규 격												
징수관, 경리관 및 그 분임자,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물품관리관 및 그 분임자, 지출원의 직인	2센치의 정방형												
출납원 및 분임자의 직인	1.8센치의 정방형												
직 인 구 분	인 영 규 격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통합) 기금운용관 및 그 분임자의 직인	2센티미터의 정방형												
출납원, 물품출납공무원, (통합)기금출납원 및 그 분임자,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의 직인	1.8센티미터의 정방형												
<p>[별지 제1호서식]</p> <p>앞 면</p>	<p>[별지 제1호서식]</p>												

현행	개정안																
<p><u>직인등록조서</u></p> <table border="1"> <tr> <td>회 계 명 :</td><td>인 영</td></tr> <tr> <td>관 서 명 :</td><td></td></tr> <tr> <td>직 명 :</td><td></td></tr> <tr> <td>사용개시일 :</td><td></td></tr> </table> <p>(규격 : 세로5센치×가로16센치 <모조100그램>)</p> <p>뒷면</p> <p>앞면의 사항을 인증함.</p> <p>년 월 일 (관서의장) 인</p>	회 계 명 :	인 영	관 서 명 :		직 명 :		사용개시일 :		<p>표면</p> <p>직인등록조서</p> <table border="1"> <tr> <td>회 계 명 :</td><td>(인영)</td></tr> <tr> <td>관 서 명 :</td><td></td></tr> <tr> <td>직 명 :</td><td></td></tr> <tr> <td>사용개시일 :</td><td></td></tr> </table> <p>규격 : 세로 5cm 가로 16cm</p> <p>이면</p> <p>표기의 사항을 인증함</p> <p>년 월 일 (관서의 장) 인</p>	회 계 명 :	(인영)	관 서 명 :		직 명 :		사용개시일 :	
회 계 명 :	인 영																
관 서 명 :																	
직 명 :																	
사용개시일 :																	
회 계 명 :	(인영)																
관 서 명 :																	
직 명 :																	
사용개시일 :																	
<p>[별지 제2호서식]</p> <p>앞면</p> <p><u>폐기신고서</u></p> <table border="1"> <tr> <td>회 계 명 :</td><td>폐기당시인영</td></tr> <tr> <td>관 서 명 :</td><td></td></tr> <tr> <td>직 명 :</td><td></td></tr> <tr> <td>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td></td></tr> </table> <p>(규격 : 세로5센치×가로16센치 <모조100그램>) ※ 비고 :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당시인영”란에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 뒷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p> <p>뒷면</p> <p>(폐기사유)</p> <p>앞면 기재사항과 위의 사항을 인증 함.</p> <p>년 월 일 (관서의장) 인</p>	회 계 명 :	폐기당시인영	관 서 명 :		직 명 :		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별지 제2호서식]</p> <p>표면</p> <p>직인폐기신고서</p> <table border="1"> <tr> <td>회 계 명 :</td><td>(폐기당시인영)</td></tr> <tr> <td>관 서 명 :</td><td></td></tr> <tr> <td>직 명 :</td><td></td></tr> <tr> <td>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td></td></tr> </table> <p>규격 : 세로 5cm 가로 16cm</p> <p>(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당시인영”란에 “망실”이라 적고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적고 날인한다.</p> <p>이면</p> <p>표기의 사항을 인증함</p> <p>년 월 일 (관서의 장) 인</p>	회 계 명 :	(폐기당시인영)	관 서 명 :		직 명 :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회 계 명 :	폐기당시인영																
관 서 명 :																	
직 명 :																	
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회 계 명 :	(폐기당시인영)																
관 서 명 :																	
직 명 :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별지 제3호서식]</p> <p>직인조각(폐기)보고서</p>	<p>[별지 제3호서식]</p>																

현	행	개	정	안
<div> <div>직인명 :</div> <div> <div>신조</div> <div>년 월 일 개각</div> <div>폐기</div> </div> <div> <div></div> <div></div> </div> <div> <div>(신)</div> <div>(구)</div> </div> </div> <div> <div>(규격 : 세로9센치×가로16센치)</div> <div>위와 같이 조각(폐기)하였음을 보고합니다.</div> <div> <div>(관서의 장)</div> <div>인</div> </div> <div> <div>귀하</div> <div>(규격 : 세로 26.8센치 × 가로 19센치)</div> <div>* 이 보고서는 3부를 제출한다.</div> </div> </div>		<div>직인조각(폐기)보고서</div> <div> <div>직 인 명 :</div> <div> <div>신조</div> <div>년 월 일</div> <div>개각</div> <div>폐기</div> </div> <div> <div></div> <div></div> </div> <div> <div>(신)</div> <div>(구)</div> </div> </div> <div> <div>규격 : 세로 9cm</div> <div>가로 16cm</div> </div> <div>위와 같이 조각(폐기)하였음을 보고합니다.</div> <div> <div>관서의 장</div> <div>인</div> </div>		

개정 사항

1. 개정이유

회계직명을 현행화하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인의 글자와 규격을 개정하여 직인을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변경함(제2조, 제5조 및 별표)
- 나. 본청 각 과의 분임재무관 및 기금출납원 직인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일상경비출납원 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2항)
- 다. 직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도록 함(제4조)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제722호

공 포

인천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장 우 삼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제722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50,000원”을 “60,000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출장·휴가 기타”를 “출장·휴가 또는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당직의”를 “당직”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패용하여야”를 “달아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교내사택주거 당직근무자와 재택 당직근무자는 표찰을 달지 않는다.

제12조제1항 중 “교사”를 “교사 및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사(일반직공무원 포함)는”을 “교사 및 일반직공무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제1호 중 “전원차단 등 기타”를 “전원차단 및 그 밖의”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방법·방호·방화 기타”를 “방법·방호·방화 및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비원 기타”를 “경비원이나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지체”를 “자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직근무일자”를 “당직근무일지”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당직점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교육감(기타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징계요구 등 기타”를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밖에”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휴일”을 “토요일 및 공휴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1이상”을 각각 “1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당직수당) ①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 지급액은 1인 1회 <u>50,000원</u> 으로 한다.	제3조의2(당직수당) ①----- ----- ----- <u>60,000원</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생략)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u>출장·휴가 기타</u>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u>출장·휴가 또는 그 밖의</u> ----- ----- ----- -----.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u>당직의</u>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u>기타</u>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다만, 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	② ----- ----- <u>당직</u> ----- ----- <u>그 밖에</u> ----- ----- ----- -----.

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생 략)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의한 당직 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교내사택주거 당직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학교당직의 운영) ① 학교장은 평상시 교사의 당직을 면제 또는 경감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야간경비요원의 고용(인력경비용역의 사용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기계경비시설 등을 운용하는 학교의 당직에 있어서 교사(일반직공무원 포함)는 일직만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장은 당직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학교의 여건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방법 및 당직근무자 편성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 ⑥ (생 략)

--.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달아야 -----.
다만, 교내사택주거 당직근무자와 재택 당직근무자는 표찰을
달지 않는다.

제12조(학교당직의 운영) ① ----
----- 교사 및 일반직공무원
원-----
-----.

② -----

-----교
사 및 일반직공무원은-----
-----.

③ ----- 제2항에도 -----

-----.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5항의 경우 사택 주거 교
직원은 다음의 조치를 취함으로
써 당직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시설 창문·출입문 잠금,
전원차단 등 기타 보안상태
점검

2.·3. (생략)

제15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사
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법·방호·방화 기타 보안
상태의 순찰·점검

2.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의 점검

3. ~ 5. (생략)

②·③ (생략)

제16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
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지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
작업

⑦ -----

-----.

1. -----
전원차단 및 그 밖의 -----
--

2.·3. (현행과 같음)

제15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

1. 방법·방호·방화 및 그 밖
의 -----

2. 경비원이나 그 밖에 -----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

1.·2. (현행과 같음)

3. 자체 -----
--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타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책임자 및 당직점검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감(기타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적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발령 및 해제) ① 국가가 발령한 비상근무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다.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

-----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
-----.

② -----

--- 없으면 -----
----- 징계의 결요구 또는 그 밖에 -----
-----.

제22조(발령 및 해제) ①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

② -----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기타 각급기관의 장은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한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 (생 략)

제23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 그 밖의 -----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

----- 토요일 및 공휴일 -----

-----.

1. -----

----- 1 이상 -----
-----.
2. -----

----- 1 이상 -----
-----.
3. -----

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
근무를 하여야 한다.

- 4. (생 략)
- ② · ③ (생 략)

----- 1 이상-----
-----.

- 4.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개정 사항

1. 개정이유

당직수당 지급 기준액을 인상하고 학교당직 운영 시 교사 및 일반직공무원의 당직이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당직수당 인상(제3조의2)

: 5만원 → 6만원

나. 학교당직 운영 시 교사 및 일반직공무원의 당직이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제12조)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제723호

공 포

인천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장 우 삼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제723호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정의)”를 “(용어의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차량”이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관리 · 운행하는 모든 공용차량을 말한다.

제2조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차량정수”라 함은”을 ““차량 정수”란”으로,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배정 대상과 적정 대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전용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를 ““전용 차량”이란 배정 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이라 함은 배정대상기관”을 “이란 배정 대상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업무용차량”이라 함은”을 ““업무용 차량”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화물용차량”이라 함은”을 ““화물용 차량”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특수용차량”이라 함은 특수한”을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이란 차량 정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이륜자동차를”을 “이륜자동차는”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차량의 구분등)”을 “(차량의 구분 등)”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차량의 정수배정)”을 “(차량의 정수 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차량정수는 당해기관”을 “차량 정수는 해당 기관”으로, “관할행정구역”을 “관할 행정구역”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범위안에서 교육감”을 “범위에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차량구입비 및 인건비,”를 “차량구입비, 인건비 및”으로, “정수배정”을 “정수 배정”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정수의 배정절차)”를 “(정수의 배정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수배정 요청시 차량구입”을 “정수 배정 요청 시 차량 구입”으로, “해당 관련부서”를 “관련 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 결과”를 “협의 결과”로, “정수배정”을 “정수 배정”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임시차량의 정수 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6월이상 5년미만”을 “6월 이상 5년 미만”으로, “외국기관등”을 “외국기관 등”으로, “당해사업”을 “해당 사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차종변경승인)”을 “(차종 변경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당해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증감등”을 “증감 등”으로, “상호

간”을 “상호 간”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차형변경승인)”을 “(차형 변경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당해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변경등으로 동일 차종내”를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내”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차량교체승인)”을 “(차량 교체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규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따른 차형별”을 “따른”으로, “경우 .”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수리사용 불가 또는 수리비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에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의 시책상 이유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증빙서류(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차량파손 사고에 대한 관할경찰서장의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차량교환승인)”을 “(차량 교환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호간”을 “상호 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정수배정, 임시차량의 정수배정, 차종변경, 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를 “정수 배정, 임시차량의 정수 배정, 차종 변경, 차형 변경 또는 차량 교체”로 한다.

제13조 중 “정수배정 .”를 “정수 배정 .”로, “정수배정을 받거나 차종변경 . 차형변경 . 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을 “정수 배정을 받거나 차종변경 . 차형 변경 . 차량 교체 또는 차량 교환”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차량의 등록절차)”를 “(차량의 등록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차종변경 . 차형변경 . 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을 “차종 변경 . 차형 변경 . 차량 교체 또는 차량 교환”으로, “승인사실”을 “승인 사실”로, “관할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를 “관할 등록관청에 보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차량교환”을 “차량 교환”으로, “함에 있어서”를 “하는 경우”로, “관할등록관청”을 “관할 등록관청”으로, “등록말소신청”을 “등록말소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20일이내”를 “말소를 등록한 때에는 20일 이내”로, “차량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말소)등록보고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자동차검사증사본을, 차량등록말소의 경우에는 등록말소증사본”을 “자동차검사증사본을, 차량말소등록의 경우에는 말소등록증사본”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차량정수의 감축등)”을 “(차량 정수의 감축 등)”으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차량정수”를 “차량 정수”로, “당해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차량정수의 감축내용을 당해”를 “차량 정수의 감축 내용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에너지절약등”을 “에너지절약 등”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차량운영관리”를 “차량 운영관리”로, “복무관리”를 “복무 관리”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배차신청 등)”을 “(차량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특별한”을 “부득이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배차를”을 “배차 여부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유류구입 등)”을 “(유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후불정산”을 “수급 물량을 기준으로 유류 공급자와 후불 정산”으로 한다.

제19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배차 담당 공무원은 차량 급유 신청 시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량을 확인 후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각급 교육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량을 기록하고 급유 신청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 지급량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를 삭제하고,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20조 및 제21조로 한다.

제20조(중전의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차량관리”를 “차량 관

리”로, “관련서식”을 “관련 서식”으로, “개서하여”를 “고쳐서”로 한다.

제21조(중전의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3조 앞에 “제4장 운전원관리”를 삭제한다.

제22조 앞에 “제4장 운전원 관리”를 삽입한다.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운전원 과실에 대한 책임) ① 운전원이 차량 운행 중에 불법 주·정차 위반 또는 제한 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청구하는 자기부담금은 교육감이 부담한다. 다만, 고의·중과실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원이 부담한다.

제23조(중전의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무시”를 “근무 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근무중”을 “근무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운전중”을 “운전 중”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배차받은 차량을 대리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6.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7. 그 밖에 차량 운행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제24조(중전의 제25조)의 제목 “(사고보고)”를 “(사고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전중”을 “운전 중”으로, “차량담당자”를 “차량 담당자”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사고발생일시”를 “사고 발생 일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고발생시”를 “사고 발생 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안전교육) 차량 소속기관의 장은 운전원에게 안전운행, 예방정비, 일상점검, 준법정신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기준정수 및 차량 관리·운행 기준

차종	차형	배정대상	기준정수	차량 관라운행 기준
승용 (전용)	대형	◦ 교육감	1대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 적용
		◦ 부교육감	1대	
		◦ 교육지원청 교육장 (배기량 2,500cc미만)	1대	
승용 (의전용)	대형	◦ 본청	1대	
승 용 (업무용)	중형	◦ 본청	3대	
		◦ 3급(3급 상당) 기관장인 각급교육기관 (각급학교 제외)	각 기관 1대	
		◦ 4급(4급 상당) 기관장인 각급교육기관 (각급학교 제외)		
		◦ 교육감이 업무의 성격상 차량의 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급 교육기관 (각급학교 제외)		
	소형 경형	◦ 각급 교육기관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행정구역 등을 참작하여 필요한 최소대수
			다목적형	
승합용	대형	◦ 교육감이 업무의 성격상 차량의 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급 교육기관		
	중형			
	소형			
화물용	대형			
	중형			
	소형			
특수용	특수작업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제9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의 정수의 책정 · 배정 및 최단기준운행 연한 등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 ----- ----- ----- ----- -----.
제2조(용어의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 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차량”이라 함은 전용	제2조(용어의 정의) ----- ----- 뜻은 다음과 ----- -----. 1. “차량”이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관리 · 운행하는 모든 공용차량을 말한다. 2. “차량 정수”란 ----- ----- 배정 대상과 적정 대수----- -----. 3. “전용 차량”이란 배정 대상자----- -----. 4. -----이란 배정 대상기관----- -----. 5. “업무용 차량”이란 -----

제5조(차량의 정수 배정) ① ----

교육기관의 차량정수는 당해기
관의 기능 · 업무량 · 조직규
모 · 관할행정구역 · 업무처
리의 기동성, 필요성 등을 감안
하여 별표의 기관별 기준정수의
범위안에서 교육감이 배정한다.

② 단, 각급학교 운동부용 차량
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의
지원으로 차량구입비 및 인건
비, 운영비 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정수배정 할
수 있다.

제6조(정수의 배정절차)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정수배정 요청
시 차량구입 · 유지비 등 소요
예산과 운전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련부서와 협의하
여야 한다.

③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
에 따른 협의결과, 소요예산 및
운전원 확보방안이 마련된 후
정수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임시차량의 정수배정) ①
각급 교육기관이 6월이상 5년미
만의 한시적인 공사 · 조사 또
는 외국기관등과의 협력 기타의

----- 차량 정수는 해당 기
관-----

--- 관할 행정구역 -----

----- 고려

하여 -----

범위에서 인천광역시교육감(이
하 “교육감”이라 한다)-----.

② -----

----- 차량구입비, 인건비 및 -

----- 정수 배정 -----

---.

제6조(정수의 배정 절차) ① (현행
과 같음)

② ----- 정수 배정 요청

시 차량 구입 -----

--- 관련 부서-----

-----.

③ -----

----- 협의 결과-----

정수 배정 -----.

제7조(임시차량의 정수 배정) ①

----- 6월 이상 5년

미만-----

-- 외국기관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을 위한 업무용 승용차의 차형은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차종변경승인)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등으로 승합용 · 화물용 및 특수용차량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그 차종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조(차형변경승인)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등으로 동일 차종내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그 차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0조(차량교체승인)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

----- 해당 사업-----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차종 변경 승인) ① -----
----- 해당 기관-----

증감 등-----
----- 상호 간-----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차형 변경 승인) ① -----
----- 해당 기관-----
-----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내-----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차량 교체 승인) ① -----

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차량이 별표에 따른 차형별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동도서 대출용 차량과 도서지역 차량에 대해서는 최단주행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생략)

3.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4.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 신규 차량-----.

1. ----- 따른 -----

----- 경우. -----

-----.

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정부의 시책상 이유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삭 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
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
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
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
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수
리사용 불가 또는 수리비 확
인을 받아야 한다.

2.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
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
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에 2
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
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
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
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차량 교체승인신청서에 차량교체설명서 및 증빙서류(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차량과손사고에 대한 관할경찰서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2 (생 략)

제11조(차량교환승인)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2조(경유기관) ① 교육지원청 및 그 산하 교육기관이 교육감에게 차량의 정수배정, 임시차량의 정수배정, 차종변경, 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 승인의 신

2조제1항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의 시책상 이유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

-- 증빙서류-----

-----.

제10조의 2 (현행과 같음)

제11조(차량 교환 승인) ① -----

상호 간-----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경유기관) ① -----

----- 정수 배정, 임시차량의 정수 배정, 차종 변경, 차형 변경 또는 차량 교체 -----

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관할 교육장을 거쳐야 한다.

② (생 략)

제13조(차량의 사전취득 금지) 각 급교육기관은 교육감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 · 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받거나 차종변경 · 차형변경 · 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취득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14조(차량의 등록절차) ① 교육감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 · 차형변경 · 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그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 확인서를 「자동차등록령」에 의한 관할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승인 차량과 교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해당 승인 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차량의 사전취득 금지) --

--- 정수 배정 · ----- 정수 배정을 받거나 차종 변경 · 차형 변경 · 차량 교체 또는 차량 교환-----
-----.

제14조(차량의 등록 절차) ① --

---- 차종 변경 · 차형 변경 · 차량 교체 또는 차량 교환--

--- 승인 사실-----

----- 관할 등록관청에 보내야 -----.

-----.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의 등록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관할등록관청에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차량등록 또는 차량등록말소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등록의 경우에는 자동차검사증사본을, 차량등록말소의 경우에는 등록말소증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차량정수의 감축등)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의 기능이 축소 · 변경 기타 사유로 차량정수가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차량 정수를 감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차량정수의 감축내용을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급 교육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② -----
----- 차량 교환-----
----- 하는 경우 -----

- 관할 등록관청-----
----- 등록말소 신청-----
-----.

③ -----

말소를 등록한 때에는 20일 이
내-----
----- 차량(말소)등록보고서

-. -----
- 자동차검사증 사본을, 차량말소등록의 경우에는 말소등록증사본-----.

제15조(차량 정수의 감축 등) ① -----
----- 차량
정수-----
-- 해당 기관-----
-----.
차량 정수의 감축 내용을 해당
-----.

② -----

-- 해당 기관 -----

여 구입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20조(유류지급) ① 배차담당공
무원은 차량급유 신청시 전회지
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확
인 후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각급 교육기관의 차량 운전
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
하고 급유신청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량을 기록하여 배차 담
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
다.

제21조(기록관리) 각급 교육기관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
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
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의 서

-----.

② 배차 담당 공무원은 차량 급
유 신청 시 전회 지급 유류의 소
모량, 잔량을 확인 후 유류를 지
급하여야 한다.

③ 각급 교육기관의 차량 운전
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량을 기록하
고 급유 신청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 지급량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제20조(기록관리) -----

---. ---- 차량 관리-----

류를 비치하거나 관련서식 중 일부를 실정에 맞게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 5. (생 략)

제22조(지도 · 점검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도 · 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 2. (생 략)

3. 기타 차량관리 ·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장 운전원관리

<신 설>

제23조 (생 략)

제24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중 음주 행위

2. 운전중 흡연 · 식음 및 휴대전화 사용 행위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 관련 서식 -----
----- 고쳐서 -----
-----.

1. ~ 5. (현행과 같음)

제21조(지도 · 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각 호에 따른다.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삭 제>

제4장 운전원 관리

제22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제23조(금지사항) ----- 근무 시 -----
-----.

1. 근무 중 -----

2. 운전 중 -----

3. (현행과 같음)

4. 배차받은 차량을 대리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6.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신 설>

제25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담당자 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
2. (생 략)
3.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4. 5. (생 략)
6.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 필요사항 및 기타 조치 요구사항

<신 설>

7. 그 밖에 차량 운행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제24조(사고 보고) ----- 운전 중

----- 차량 담당자 ----

1. 사고 발생 일시 ----

2. (현행과 같음)

3. 사고 발생 시-----

4. 5. (현행과 같음)

6. -----

----- 그 밖의 -----

제25조(운전원 과실에 대한 책임)

① 운전원이 차량 운행 중에 불법 주·정차 위반 또는 제한 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청구하는 자기부담금은 교육감이 부담한다. 다만, 고의·중과실 또는

<신 설>

[별표]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기준점수 및 차량 관리·운행 기준

차종	차형	배 정 대 상	기준점수	차량 관리·운행 기준
승용 (전용)	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지원청 교육장 (배기량 2,500cc미만) 	1대 1대 1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최단주행거리: 12만km (단, 승합용 대형 및 특수용은 제외)
승용 (의전용)	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교육청 	1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단주행거리: 12만km (단, 승합용 대형 및 특수용은 제외)
승용 (업무용)	중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교육청 3급(3급 상당) 기관장인 각급교육기관 (각급 학교 제외) 4급(4급 상당) 기관장인 각급교육기관 (각급 학교 제외) 교육감이 업무의 성격상 차량의 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급 교육기관 (각급 학교 제외) 	2대 각 기관 1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단주행거리 : 12만km (단, 승합용 대형 및 특수용은 제외)
	소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급 교육기관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행정구역을 참	
	다목적승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여건이나 업무의 성격상 다목적승용차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각급 교육기관 	등을 참	
	소형		여 한 필요 최소대수	
승합용	대형			
	중형			
	소형			
화물용	대형			
	중형			
	소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급 교육기관 		
특수용	특수작업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원이 부담한다.

제26조(안전교육) 차량 소속기관의 장은 운전원에게 안전운행, 예방정비, 일상점검, 준법정신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별표]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기준점수 및 차량 관리·운행 기준

차종	차형	배정대상	기준점수	차량 관리·운행 기준
승용 (전용)	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지원청 교육장 (배기량 2,500cc미만) 	1대 1대 1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 적용
승용 (의전용)	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청 	1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단주행거리 : 12만km (단, 승합용 대형 및 특수용은 제외)
승용 (업무용)	중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청 3급(3급 상당) 기관장인 각급교육기관 (각급학교 제외) 4급(4급 상당) 기관장인 각급교육기관 (각급학교 제외) 교육감이 업무의 성격상 차량의 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급 교육기관 (각급학교 제외) 	3대 각 기관 1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단주행거리 : 12만km (단, 승합용 대형 및 특수용은 제외)
	소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급 교육기관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행정구역을 참	
	다목적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여건이나 업무의 성격상 승용차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을 참	
	소형		여 한 필요 최소대수	
승합용	대형			
	중형			
	소형			
화물용	대형			
	중형			
	소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감이 업무의 성격상 차량의 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급 교육기관 		
특수용	특수작업차			

개정 사항

1. 개정이유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반영하여 차량교체승인 규정을 정비하고 운전원 과실에 대한 책임 및 안전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공용차량 운행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량교체승인에 관한 사항(제10조)

나. 운전원 과실에 대한 책임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제23조~제24조, 제26조)

훈 령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훈령 제1239호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
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익신고의 접

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 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공익신고 책임관의 지정) 공무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책임관의 책무)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등이 활성화 되도록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추진시책의 수립)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이행 규정 등이 수립되면 이에 따른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책임관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익신고의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익제보 접수창구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업무 소관부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공익신고와 관련한 상담,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책임관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공익신고의 접수 절차) ① 책임관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과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공익신고자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0조(대표신고자 선정) 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이송한다. 이 경우 조례 제9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12조(공익신고기록) ①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하는 경우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 책임관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책임관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익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서를 붙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의 조사·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수사결과를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
유
 2. 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
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
요가 있는 사항
- ③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 ④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공익
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조
사·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
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책임관은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
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
까지를 준용한다.
- ⑥ 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
도록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보완의 요구) ① 책임관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공익신고자가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위반 조치) 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신변보호 안내) 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법 제13조의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의 감면) ① 공무원의 징계권자는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징계권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책임관은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행정처분권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처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책임관은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공익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21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책임관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 공익신고자에게 시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아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해 국가 또는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 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시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2. 국가 또는 시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2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9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3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시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

3.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24조(협조 등의 요청) 책임관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 익 신 고 접 수 관 리 대 장

[illegible]

[별지 제2호서식]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 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만의 일

인천광역시 공익제보 접수창구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 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이 후 이

인천광역시 공익제보 접수창구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신고제도안내>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별지 제4호서식]

《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공익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관련 행정기관·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주십시오.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만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또는 타 기관 신고 후 우리 기관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접수하실 때

- 허위신고, 금품·근로관계상 특혜 요구와 같은 부정한 목적 신고는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나 부정한 목적 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신 경우는 공익신고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협조사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 법상 보호조치 신청은 어렵습니다.
 - 그러나,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쟁송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임료)을 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공익신고나 보호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신분 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내부공익신고자에 한함)

-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국가·지자체 수입의 4~20%를 지급하지만, 감액·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부동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우리 기관에서 이송한 공익신고 사항 처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공익신고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2조 제1항)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조사·수사기관등은 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사·수사 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 제1항)

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나.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조사·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2. 공익신고 처리 시 유의사항

○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10조 제5항)

[별지 제8호서식]

20 년 월 일 접수
20 공익 제 호

접수자	공익신고 책임관

공 익 신 고 기 록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 당	
신고자 성명		피신고자성명	

처 리	조사· 수사종료일	20 년 월 일	내 용	
	이 송 일	20 년 월 일	이송기관	
	결과통보일	20 년 월 일	대상자 (대상기관)	

신분공개 동의여부	조사기관	수사기관	종결확인	담당	책임관
종 결 일	20 . . .				
보존기간	년 (20 . . . 까지)				

◇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2. 1. 1. 시행) 및 「인천광역시 공익 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21.11.8. 시행)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책임관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4조 신설)
- 나. 세부추진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5조 신설)
- 다. 공익신고의 조사·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13조)

인천광역시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훈령 제1240호

인천광역시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

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나.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2.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책임관의 지정)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책임관의 책무) ① 책임관은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교육·홍보 등 필요
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
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부패행위 신고의 상담) ①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상담은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익제보 접수창구에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등) ① 책임관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행위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과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신고자에게 부패행위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⑤ 익명으로 신고 된 부패행위는 공직감찰에 활용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는다.

⑥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한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이하 “신고내용”이라 한다)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조(신고의 이송 등) ①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9조(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책임관은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연락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말한다)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자와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6.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제10조(부패행위 신고 조사·처리 등) ① 책임관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감사·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감사·조사한 결과, 해당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수사의뢰, 고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감사·조사·수사과정에서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보완의 요구) 책임관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2조(처리결과 통보 등)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에 대해서 감사·조사·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되,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조사·수사 종류 후 처리 방향
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3조(신변보호조치 안내) ① 책임관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신고자와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에게 법 제64조의2의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① 공무원의 징계권자 또는 행정처분권자는 신고와 관

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징계권자 또는 행정처분권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책임관은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제16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위반 조치) 책임관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자
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협조자 보호)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 위반 조치에 관해서는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수사중지(피의자
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
료 등으로 시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
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9조(협조의 요청) 책임관은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신분보장등 조
치에 필요한 경우 권익위원회, 감사원, 조사·수사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5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고상담처리부

담당자	담당

상담자
(직·성명)

상담일자	20 . . .	상담유형	[] 전화 [] 방문 [] 인터넷 [] 출장
피상담자 (민원인)	성명	전화번호	
	주거	관련기관	

상담요지

상담결과

[별지 제2호서식]

부패행위신고접수관리대장

[illegible]

[별지 제3호서식]

접수증

접수번호 20 부패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 목
신고자

위와 같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증

접수번호 20 부패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 목
신고자

위와 같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부패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분보장등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는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가 위원회에 신청)
포상금	공공기관에 부패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공기관이 위원회에 추천)
구조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등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등이 위원회에 신청)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신고제도안내>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별지 제5호서식]

<<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부패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부패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해당 기관의 지도·감독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해주시시오.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만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또는 타 기관 신고 후 우리 기관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접수하실 때

- 허위신고를 하면 신고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신 경우는 신고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협조사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 법상 보호조치 신청은 어렵습니다.
 - 그러나,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소송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임료)을 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부패신고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신분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권익위 신고자에 한함)

-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공공기관 수입의 4~30%를 지급하지만, 감액·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부패행위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부동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소관부서	(전화번호)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직업(직위)			
	<input type="checkbox"/> 내부 신고자		<input type="checkbox"/> 외부 신고자	
	<input type="checkbox"/>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③ 추천사유				
④ 조사결과	신고 접수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 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없음		
	수령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금액 :) <input type="checkbox"/> 없음		
<p>「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p>				

◇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2. 7. 5. 시행) 및 「인천광역시 공익제보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21.11.8. 시행)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 나. 책임관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제5조 신설)
- 다. 신고의 이송 규정을 신설함.(제8조 신설)
- 라. 책임의 감면 규정을 신설함.(제14조 신설)
- 마. 신고자 보호 규정을 신설함.(제15조 신설)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훈령 제1241호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시장 및 시장으로부터”를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로, “소방서장, 소방학교장”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방본부, 소방서 및 소방학교를”을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소방기관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외근부서”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조제1호에 의한”을 ““외근부서”란 제4호에 의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3. “부서”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관서의 하부조직을 말한다.

4. “외근근무”란 화재, 재난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계 없이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는 교대제 근무 및 현장출동근무를 말한다.

제4조제3항 중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시기를 고려하여 전보시기를”을 “시기 및 횟수를 고려하여 전보시기 등을”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 중 “4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단서 중 “원거리 소방관서 및 소방본부”를 “소방본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고충심사위원회”를 “별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한다.”를 “하되, 휴직 및 파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고충심사위원회”를 “소방본부로의 전입자 및 별도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최초”를 “처음으로”로, “승진임용”을 “징계로 인한 승진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해당”을 “신설관서의 경우에는 전보기간의 100분의 50이 지나면 전보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고, 해당”으로 한다.

⑥ 보직별로 선호·비선호 관서간 순환전보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인사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근무희망 전보) 임용권자는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근무희망 소방관서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현장지휘관”을 “외근부서장 및 외근근무”로, “사람”을

“사람(다만, 해당 계급에서 외근부서가 없는 인천광역시 소방기관의 근무경력자는 해당기관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있다”를 “있고, 파견 및 소방관서 외 기관의 근무경력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임용권자는 소방경 및 소방령이 해당 계급에서 현장부서 근무를 1년 이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를 제12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소방본부에서 근무하는 소방령에게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기준 적용시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②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영종·강화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순환보직 기준 (제10조제3항 관련)

직 급	순 환 보 직 기 준
공통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령 및 소방경은 해당 계급에서 경험한 직무 외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방위 이하는 내근과 외근에서의 근무비율 및 업무전문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내근부서 인사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근부서 경험이 없는 사람을 우선 보직한다.
소방정	승진 임용된 사람은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본부에 우선 보직한다.
소방령	과장의 보직은 3회 이상 동일 직위에 연속하여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경	소방경으로 승진 임용된 사람 및 해당 계급에서 내근부서 경력만 있는 사람은 외근부서에 우선 보직할 수 있다.
소방위 이하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 제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계급(소방서 간 전보를 포함한다)에서 내근부서 3년 이상 근무자는 외근부서에 보직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및 질병·부상·임신 등으로 외근부서의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사는 임용일로부터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119 지역대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급분야 경력경쟁채용자는 배치할 수 있다.

◇개정이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통한 소방공무원 근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원거리 소방관서로 지정된 소방관서가 직원 선호관서로 변경되는 등 조직 및 인사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제2조)

나. 인사청탁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의무화 함.(제4조제3항)

다. 원거리 소방관서의 별도 전보기간을 삭제함.(제2조제4호 및 제6조제1항제1호라목)

라. 전보제한 기간 산정에서 휴직·파견기간을 제외하도록 함.(제6조제2항)

마. 보직별로 선호·비선호 관서 간 순환전보 근거를 신설함.(제6조제6항)

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고충심사에 관한 중복 조항을 정비함.
(제12조 삭제)

고 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06호

일반수도사업인가[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1단계)] 고시

옹진군 북도면 지역 일원에 지방상수도【사업명: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1단계)】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수도사업인가 고시합니다.

2022. 4. 20.

인 천 광 역 시 장**1. 사업의 명칭**

-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1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도화동) 상수도사업본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옹진군 북도면(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
- 사업개요
 - 해저관로(영종도~신도) : D150mm, L=2.3km
 - 연결관로 : D150mm, L=0.1km
 - 가압장 1개소 : 영종도 Q=1,200㎥/일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중구 운서동, 용진군 북도면 신도리 일원

○ 사업면적 : 영구 48.15㎡, 임시 2,484.72㎡

5. 급수구역 · 급수인구 및 급수량

○ 급수구역 : 용진군 북도면 일원

○ 급수인구 : 1,234명(1인당 1일 급수량 286 ℓ)

○ 급 수 량 : 389㎥/일 (생활용수 352㎥/일, 관광용수 37㎥/일)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22. 4. ~ 2022. 12.

○ 급수시작예정일 : 2023. 1.

7. 수용 · 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 · 지목 · 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해저추진 및 추진기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자			비고
					임시	영구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관계	

I. 중구

1	운서동	2508-67	임	11,165.4	564.3	-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서동 2172-1				추진기지
2	운서동	2508-101	임	3,221.9	935.7	-						추진기지
3	운서동	2508-101	임	-	6.7	-						추진구간
4	운서동	2508-98	도	101,537.0	3.4	3.1						추진구간
5	운서동	2508-66	임	9,368.0	-	9.2						추진구간

II. 용진군 신도리

1	신도리	523-61	잡	7205	754.7	-	용진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용현동)				추진기지
2	신도리	523-61	잡	7205	29.8	3.7						추진구간
3	신도리	523-58	잡	2242	66.86	8.36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추진구간
4	신도리	523-45	도	1454	42.25	5.2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추진구간
5	신도리	524-3	도	392	0.11	-	용진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용현동)				추진구간

○ 육상가압장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자			비고
					임시	영구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관계	
1	운서동	2818	도	55,902.5	80.9	18.5	인천광역시	-				

공 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1072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 등록사항

등록번호	제2022-0-인천광역시-7호		
단체명	글로리아상호문화센터		
대표자	최마리안나		
주사무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107번길 6, 301호(연수동)		
주된사업	○ 고려인 자녀 유아들의 보육 및 돌봄		
등록일자	2022. 4. 20.	등록구분	신규

2022년 4월 20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 - 1103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 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폐업 일자	폐업 사유
320280	(주)엘리비전 대표 안덕근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 230 , 3층(송도동)	2022.4.14.	자진 폐업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 - 111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 4. 20.

인천광역시장

☐ 변경등록 사항 : 대표자 변경

등록번호 (등록일)	단 체 명	변 경 사 항			주 관 과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019-0 -인천광역시- 16호 (2019.8.8.)	너머인천 고려인문화원	대 표 자	김진영	신은철	가족다문화과

입법예고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37호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개정(2022.2.24.시행)으로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규정이 조례에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참조: 정보화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박미선(☎ 032-440-2312, fax 032-440-8702, E-mail smart97@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

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38호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개정('22. 2. 24.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시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지능정보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5조)

다. 지능정보화 사업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인천데이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입법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정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참조: 정보화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 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박미선(☎ 032-440-2312, fax 032-440-8702, E-mail smart97@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인천광역시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에서 수행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1.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의 구매사업
2. 행정사무용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3.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드는 사업

제3조(지능정보화 사업계획) ①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보시스템을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서비스 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3. 현황평가를 통한 문제점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
4. 업무절차, 관련법령 및 규정 준수
5.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파악
6. 정보통신기술 및 가용자원 분석
7. 정보시스템간 연계방안 및 보안대책
8.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9. 다른 기관 또는 해외사례의 분석
10. 향후 발전방향 및 기대효과

제4조(지능정보화 사업 타당성 검토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계획 및 예산 검토 요구서를 예산편성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해야 한다.

1. 지능정보화사업의 타당성
2. 지능정보화사업 소요예산의 적정성
3.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가능여부
4. 지능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5. 조례 제2조에 따른 지능정보화 기본계획과의 연계 여부
6.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③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능정보화 사업계획 및 예산 검토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 및 예산업무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검토 결과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업무 부서의 장에게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⑤ 예산업무 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예산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우선하여 반영해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 사업계획의 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지능정보화 사업계획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천데이터센터 운영)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인천데이터센터에 정보시스템을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능정보화 사업계획 및 예산 검토 요구서

1. 사업개요

1-1. 사업주관부서		1-2. 담당자(연락처)	
1-3. 사업명		1-4. 사업기간(개월)	. . . ~ . . .
1-5. 총사업비(천원)		1-6. 계약방법	
1-7. 사업목적	<input type="checkbox"/> 주요 시책사업 <input type="checkbox"/> 전자정부2020 등 IT전략 사업 <input type="checkbox"/> 시민 체감형 사업 <input type="checkbox"/> 안정적 대민서비스 기반마련 <input type="checkbox"/> 법정업무 및 감사원등 지적, 지시사항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1-8. 사업추진 방향	<input type="checkbox"/> 지능정보기술 기반 구축 (AI, IoT,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등) <input type="checkbox"/> 정보화사업 구축 (<input type="checkbox"/> HW장비도입, <input type="checkbox"/> SW개발, <input type="checkbox"/> 솔루션 도입) <input type="checkbox"/> 정보화전략계획(ISP) <input type="checkbox"/> 콘텐츠개발 <input type="checkbox"/> DB구축 <input type="checkbox"/> 환경(정보통신등) 구축 <input type="checkbox"/> 유지보수 <input type="checkbox"/> 정보화교육 <input type="checkbox"/> 기타 ()		
1-9. 주요 사업내용			
1-10. 사업계획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조2(성과목표 설정)에 의거 <u>정보화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성과목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u>		
1-11. 향후 활용계획			

※ 1-6. 계약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등의 계약방법, 1-9. 주요 사업내용 : 사업의 세부내용을 작성

※ 1-10.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성과지표, 성과목표 설정 및 산출내역 반드시 포함) 별첨으로 첨부 제출

2.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추진실적	차년도 목표량					가중치 (%)	측정 단위
지표명	측정산식	당해연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성과지표는 사업 추진 목적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측정 산식, 목표량을 기재

3. 예산요구 내역

예산과목			당해연도 예산(A)			차년도 요구액(B)		증 감 (B-A)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내역	예산액	지출액	내역	예산액	내역	예산액

4. 전년도 지능정보화사업 자체 성과분석 및 진단

(계속사업이나 선행사업이 있는 경우)

☐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예산 (천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 지표명 • 지표명

※ 계획수립 시 성과목표 및 지표 기재

☐ 성과측정 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산식 및 착안점	분기별 추진계획(목표량)					가중치 (%)	측정 단위
		계	1/4	2/4	3/4	4/4		
종합 목표 진도(누계)								

☐ 사업추진 실적 및 상반기 결과 : 우수, 정상, 부진 중 선택

성과지표	전년도 추진실적					달성률 (%)	비고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		
				-	-		

※ 성과측정의 추진계획 목표 대비 추진실적 달성률로 결과 선택

- 우수 : 목표대비 10% 이상 초과, 정상 : 목표 달성, 미흡 : 목표대비 10% 미만

☐ 성과 및 문제점

○ 주요성과

-
-

○ 문제점

-
-

☐ 환류계획

○ 자체 성과분석 및 진단을 통한 사업계획 반영사항 기재

5. 공공앱 개발 필요성 검토서 (공공앱 사업만 해당)

1-1. 서비스 대상	<input type="checkbox"/> 대민서비스(명) <input type="checkbox"/> 기관내부직원(명) <input type="checkbox"/> 타기관직원(명)						
1-2. 앱개발 필요성	<p>※ 반응형웹으로 구현이 불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SMS 등 모바일 기기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 모바일 기기 내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 행정기관등의 장이 모바일 앱으로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p>* 근거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 18조</p> <p>※ 민간 유사앱이 있을 경우 민간앱으로 구현 불가능한 기능 기재</p>						
1-3. 연도별 사용자 확보 목표(명)	개발년도	개발 후 1년	개발 후 2년	개발 후 3년	개발 후 4년		
1-4. 앱 활성화 및 사용자 확보 계획	<p>※ 관련 기관(부서) 협의사항, 홍보방안, 홍보비용 확보방안, 홍보비용 등 연관 계획이 포함된 계획서 제출</p>						
1-5. 타기관 현황	기관명						
	앱 명						
	구 분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설치수						
	누 적 다운로드수						
	최종 업데이트일						
1-6. 민간 유사앱 현황	앱 명						
	구 분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설치수						
	누 적 다운로드수						
	최 중 업데이트일						
	유사기능						

[별지 제2호서식]

지능정보화 사업계획 및 예산 검토 결과

(단위 : 천원)

부서별	예 산 과 목			해당 연도 예산 (A)		다음년도 요구액 (B)		조 정 (C)		증 감 (C-A)		비고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 목	내역	예산 액	내역	예산 액	내역	예산 액	내역	예산 액	

<관계법령>

□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2조(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
2. 지능정보화 정책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4. 정보자원의 통합, 공동이용 및 효율적 관리 방안
5. 재원의 조달·운용 및 인력확보방안
6.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조(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능정보화의 추진)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 등을 제정한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 성 자

-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손혜정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39호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 개정('22.1.28. 시행)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22.3.18.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6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참조 : 납세협력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107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성훈(전화번호 032-440-2633, 팩스번호 032-440-8650, 전자메일 tp70150@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각각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52조의3”을 “시행규칙 제73조의8”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전문매각기관 선정절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u>법 제71조의2제1항</u> 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모집·선정하여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매각기관 선정절차) ① ----- ----- <u>법 제103조의3제1항</u> ----- ----- ----- ----- ----- ----- --.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u>법 제71조의2제1항</u>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1. ----- ----- <u>법 제103조의3제1항</u>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매각대행수수료의 청구 등) ①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u>시행규칙 제52조의3</u> 에 따른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매각대행수수료의 청구 등) ① ----- ----- ----- ----- ----- <u>시행규칙 제73조의8</u>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 「지방세징수법」(‘22.1.28. 시행, 법률 제18794호, 2022.1.28., 일부개정)

- 제103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1. 28.]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22.3.18. 시행, 행정안전부령 제323호, 2022.3.18., 일부개정)

- 제73조의8(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3제3항 및 영 제91조의1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3. 18.>

[본조신설 2018. 3. 27.]

[제52조의3에서 이동 <2022. 3. 18.>]

실 · 국별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등 심의 3. 조직과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 · 국별 의견			
협약개요	실 · 국별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48호

「인천광역시 119특수구조단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119특수구조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043호) 개정(2021.10.14.)·시행(2022.4.15)에 따라 기존 소방본부 소속 과단위인 119특수구조단이 시·도지사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으로 변경되어 관련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칭 변경

- 119특수구조단 → 119특수대응단(안 제1조, 제2조)
- 소방본부장 → 시장(안 제3조)

- 119특수구조단 → 특수대응단(안 제5조)
- 특수구조단 → 특수대응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
- 특수구조단장 → 특수대응단장(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특수구조단의 긴급기동대장 → 특수대응단의 직할구조대장(안 제6조)
- 소방항공대, 항공구조구급대 → 119항공대(안 제10조)

나. 편제 및 임무 개편(안 제3조)

- 특수대응단 내 운영지원과, 직할구조대, 119항공대 편성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참조:119 특수구조단, 주소: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1204번길 1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정민훈(전화번호 032-870-3406, 팩스번호 032-751-3119, 전자메일 jmhoon81@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119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119특수구조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119특수구조단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119특수구조단 운영 규칙”을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119특수구조단”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한다.

제2조 중 “119특수구조단(이하 “특수구조단”)”을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이하 “특수대응단”)”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특수구조단의 편성·운영)”을 “(특수대응단의 편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소방본부장”을 “시장”으로, “특수구조단”을 “특수대응단”으로 한다.

②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특수대응단 내에 운영지원과, 직할구조대, 119항공대를 두고 운영지원과와 각 대의 장은 특수대응단장을 보좌하고 소속대를 지휘·감독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구조단”을 “특수대응단”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119특수구조단장 직무)”를 “(119특수대응단장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119특수구조단장(이하“특수구조단장”)”을 “119특수대응단장(이하 “특수대응단장”)”으로, “특수구조단원”을 “특수대응단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구조단”을 “특수대응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수구조단의 긴급기동대장”을 “특수대응단의 직할구조대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및 제9조제1항 중 “특수구조단장”을 각각 “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수구조단장”을 각각 “특수대응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소속 119항공대의 운영은 「인천광역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11조 중 “특수구조단”을 “특수대응단”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인천광역시 119특수구조단 운영 규칙</u>	<u>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 운영 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제 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 시 <u>119특수구조단</u> 의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119특수대응단</u> ----- ----- -----.
제2조(적용범위) <u>119특수구조단</u> (이하 “특수구조단”이라 한다) 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규칙 에서 특별하게 정한 사항을 제 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u>인천광역시 119 특수대응단</u> (이하 “특수대응단” ----- ----- ----- -----.
제3조(<u>특수구조단의 편성 · 운영</u>) <u>소방본부장은</u> 「119구조 · 구급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 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직할 구조대 및 테러대응구조대를 <u>특 수구조단</u> 으로 편성 · 운영 한다.	제3조(<u>특수대응단의 편성 · 운영</u>) ① <u>시장</u> ----- ----- ----- ----- <u>특 수대응단</u> -----.

<신 설>

제4조(임무) 특수구조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제5조(119특수구조단장 직무) 119
특수구조단장(이하“특수구조단
장”이라 한다)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특수구조단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을 지휘·감독
한다.

제6조(현장출동) ① 특수구조단은
119종합상황실장의 출동지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동 할 수 있
다.

1. ~ 5.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행
사 지원에 따른 현장 근무 시에
는 특수구조단의 긴급기동대장
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출동상황 및 조치결과

②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특수대응
단 내에 운영지원과, 직할구조
대, 119항공대를 두고 운영지원
과와 각 대의 장은 특수대응단
장을 보좌하고 소속대를 지휘·
감독한다.

제4조(임무) 특수대응단-----
-----.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119특수대응단장 직무) 119
특수대응단장(이하“특수대응단
장”-----
-----특수대응단원-----

--.

제6조(현장출동) ① 특수대응단--

--.

1. ~ 5. (현행과 같음)

② -----

-- 특수대응단의 직할구조대장

를 119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

① 특수구조단장은 구조·구급
대원의 연간 종합교육·훈련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수구조단장은 소방본부장
의 승인을 받아 소속직원에 대
한 국내 교육기관 및 국외 해외
기술연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훈련의 종류) 특수

구조단장은 정기적으로 일상교
육훈련, 특별구조훈련, 항공구
조훈련 및 조종사·정비사에 대
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
다.

제9조(보유장비의 유지관리) ①

특수구조단장은 보유장비에 대
하여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운영) ① 특수구조단장은

소속 각 대의 업무량을 고려하
여 필요할 때 인력을 탄력적으
로 조정·운영 할 수 있다.

② 특수구조단장은 재난 등의

-----.

제7조(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

① 특수대응단장-----

-----.

② 특수대응단장-----

-----.

제8조(교육 및 훈련의 종류) 특수

대응단장-----

-----.

제9조(보유장비의 유지관리) ①

특수대응단장-----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 ① 특수대응단장--

-----.

② 특수대응단장-----

규모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비상소집 전파 및 점검·관리를 할 수 있다.

③ 소속 소방항공대의 운영은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11조(운영세칙) 특수구조단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소속 119항공대의 운영은 「인천광역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11조(운영세칙) 특수대응단 -----

-----.

붙임 2.

관련법령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4장 119특수대응단 등

제11조(설치 등) ① 시·도는 화재, 재난·재해,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도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제12조(단장) ① 119특수대응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단장은 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 119특수대응단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팀을 두며,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할구조대·테러대응구조대·119항공대 및 특수구조대를 둘 수 있다.

② 과장·팀장·직할구조대장·테러대응구조대장·119항공대장 및 특수구조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119특수대응단의 과·팀·직할구조대·테러대응구조대·119항공대 및 특수구조대와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업무 및 항공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항공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운영한다.

2. 특수구조대: 소방대상물, 지역 특성, 재난 발생 유형 및 빈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라목에 따른 고속국도구조대는 제3호에 따라 설치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가. 화학구조대: 화학공장이 밀집한 지역

나. 수난구조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지역

다. 산악구조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등 산악지역

라. 고속국도구조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이하 “고속국도”라 한다)

마. 지하철구조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사(驛舍) 및 역 시설

3. 직할구조대: 대형·특수 재난사고의 구조, 현장 지휘 및 테러현장 등의 지원 등을 위하여 소방청 또는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되,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테러대응구조대: 테러 및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각각 설치하며,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규칙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부서 명칭 등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인천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장 정기수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49호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043호) 개정(2021.10.14.)·시행(2022.4.15)에 따라 기존 소방본부 소속 과단위인 119특수구조단이 시·도지사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으로 변경되어 119특수대응단의 하부조직인 119항공대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칭 변경

- 항공구조구급대 → 119항공대(안 제1조, 제2조, 별표1)
- 소방본부장 → 시장(안 제2조)

-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안 제2조, 제3조)
-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장 → 119특수대응단장(안 제3조)

나. 편제 및 임무 개편(안 제3조)

-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항공팀(운항, 정비, 구조·구급)으로 운영하여 별표1에 따라 업무 각 팀장이 총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참조:119특수구조단, 주소: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1204번길 1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정민훈(전화번호 032-870-3406, 팩스번호 032-751-3119, 전자메일 jmhoon81@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을 “인천광역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119항공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119항공대의 설치) 시장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에 119항공대(이하 “119항공대”)를 설치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을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으로,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장”을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대”를 “119항공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119항공대에는 항공팀(운항, 정비, 구조·구급)”으로, “실장”을 “팀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119항공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인천광역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 및 제19조에 따라 <u>항공구 조구급대</u> 의 편성·운영과 항공 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119항공 대</u> ----- ----- ----- -----.
제2조(<u>항공구조구급대</u> 의 설치) <u>소 방본부장</u> 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 라 <u>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u> 에 인천광역시 <u>항공구조구급대</u> (이하 “ <u>항공대</u> ”)를 설치한다.	제2조(<u>119항공대</u> 의 설치) <u>시장</u> 은 ----- ----- ----- <u>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u> 에-- ----- <u>119항공대</u> (이하 “ <u>119항공대</u> ”)를 설치한다.
제3조(편성·운영) 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감독하기 위 하여 <u>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u> 에 운항통제관(이하 “통제관”이 라 한다)을 두며, 통제관은 <u>소방 본부 119특수구조단장</u> 으로 한	제3조(편성·운영) ① ----- ----- ----- <u>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u> ----- ----- ----- <u>119특수대응단장</u> -----

다.

② 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
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기 위
하여 항공 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항공대장을 둔다.

③ 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운영하고, 별
표 1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실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별표1]항공구조구급대 업무분장

-----.

② 119항공대-----

-----.

③ 119항공대에는 항공팀(운항,
정비, 구조·구급)-----

- 팀장-----.

[별표1]119항공대 업무분장

붙임 2.

관련법령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4장 119특수대응단 등

제11조(설치 등) ① 시·도는 화재, 재난·재해,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도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제12조(단장) ① 119특수대응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단장은 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 119특수대응단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팀을 두며,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할구조대·테러대응구조대·119항공대 및 특수구조대를 둘 수 있다.

② 과장·팀장·직할구조대장·테러대응구조대장·119항공대장 및 특수구조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119특수대응단의 과·팀·직할구조대·테러대응구조대·119항공대 및 특수구조대와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업무 및 항공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항공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소방청 훈령 제123호)」

제3조(적용 범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된 항공대의 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정비 및 품질관리, 교육훈련 등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항공대를 보유한 시·도의 경우는 제2장, 제3장, 제4장의 사항은 시·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 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에 운항통제관을 두며, 중앙119구조본부의 운항통제관은 권역별 119 특수구조대장으로 한다.

② 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기 위하여 항공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항공대장을 둔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규칙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부서 명칭 등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인천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장 정기수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50호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을 추가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또는 입법초안에 대한 시의회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와 의견제출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원발의 조례안·입법초안에 대한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나.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을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에 추가함.(안 제11조 제3항)

다. 자치법규안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시 소관부서 의견 제출 절차를 신설함.(안 제1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참조: 법무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정각로29, 인천시청 본관 307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양희숙(☎ 032-440-2282, fax 032-440-8634, 전자메일 icandox@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법무담당관

(2) 연락처 : 전화) 032-440-2282, FAX) 032-440-8634,

전자메일 icandox@korea.kr

라. 제출서식 :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개정안	찬·반 여부 및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계법령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2(제6조의2 및 제6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협조 등

제6조의2(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협조) ① 소관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의원·상임위원회가 발의하는 조례안(이하 “의원발의 조례안”이라 한다) 또는 그 입법초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입법 추진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의3(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① 소관부서의 장은 의원발의 조례안(입법초안에 대한 자료·의견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입법초안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관련 근거 등을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상호간의 체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2. 법령의 위임이 없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 등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3. 조직, 인사(정원을 포함한다), 예산편성 등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사전적·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4. 시의 기존 조례와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5. 시 소관사무가 아닌 사항이 포함된 경우
6. 그 밖에 위법·부당하거나 시행에 문제가 예상 되는 경우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관계부서의 장, 그 밖에 의원발의 조례안 또는 그 입법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의견을 붙여 제1항에 따른 의견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 중 “실·국장, 시민안전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소방본부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를 “시의회”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이송 조례안 대한 의견제출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이송된 조례안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송된 날부터 4일 이내에 해당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보고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보고 이후에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직

접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를 “법 제35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안문>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 ※ 제 정: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안
폐 지: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개 정: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

1. 의결주문 (* 훈령·예규는 의결주문을 작성하지 않음)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제정 또는 폐지)조례(규칙)
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이 조례(규칙)를 개정(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안 제○조)
나. -----.(안 제○조 신설)

4.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일부개정인 경우)
나.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또는○○○○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 .○.○.~○.○.)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별지 제10호서식]

1. 조례(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공포문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 조례 일부(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조례 일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가.	------(제○조)
나.	------(제○조)

2. 규칙(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공포문

인천광역시 ○○○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 규칙 일부(전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규칙 일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를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가. -----(제○조)

나. -----(제○조)

다. -----(제○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제2장의2 조례안에 대한 협조 등</u></p> <p><u>제6조의2(조례안에 대한 협조) ①</u></p> <p><u>소관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의</u> <u>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u> <u>장,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가 발</u> <u>의하는 조례안(이하 “의원발의</u> <u>조례안”이라 한다) 또는 그 입</u> <u>법초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입법</u> <u>추진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시</u> <u>의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u> <u>협조하여야 한다.</u></p> <p><u>제6조의3(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u> <u>의견제출 등) ① 소관부서의 장</u> <u>은 의원발의 조례안(입법초안에</u> <u>대한 자료·의견제출 요청을 받</u> <u>은 경우에는 입법초안을 말한</u> <u>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u>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u> <u>에는 시의회에 관련 근거 등을</u> <u>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u> <u>다.</u></p> <p><u>1. 법령 또는 조례 상호간의 체</u> <u>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u></p> <p><u>2. 법령의 위임이 없는 주민의</u> <u>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 등</u> <u>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u></p>

경우

3. 조직, 인사(정원을 포함한다), 예산편성 등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사전적·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4. 시의 기존 조례와 서로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5. 시 소관사무가 아닌 사항이 포함된 경우

6. 그 밖에 위법·부당하거나 시행에 문제가 예상 되는 경우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장, 그 밖에 의원발의 조례안 또는 그 입법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구성) ①·② (생략)

③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시장 및 균형발전정부시장이며, 위원은 본청실·국장, 시민안전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소방본부장, 감사관, 재정기획관 및 정책기획관(이하 “실·국장”이라 한다)이 된다.

제16조(조례안 처리절차)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회 심의·의결결과를 반영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출 조례안을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신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의견을 붙여 제1항에 따른 의견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실·국·본부장-----

-----.

제16조(조례안 처리절차) ① ----

----- 시의회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이송 조례안 대한 의견 제출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21조(군·구 자치법규의 보고 및 심사) ① 시장이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법무담당관이 접수한 후 이를 자치법규안 내용과 관련된 시 사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장에게 심사의뢰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6조제3항에 따라 이송된 조례안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송된 날부터 4일 이내에 해당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보고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보고 이후에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군·구 자치법규의 보고 및 심사) ① ---- 법 제35조-----

----.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5조(보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 예정일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조례·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출·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이 장에서 “조례·규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결산 등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② 조례·규칙심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부군수·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으로 한다.
- ③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등의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등이 작성하거나 의원등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

이고 의원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생략)

②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 의장, 의원과 위원회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시장과 교육감은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3.>

기 타

관 인 등 록 공 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 2022 - 119호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동 규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18.

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

○ 최초 사용 개시일 : 2022. 4. 18.

[관인]

인천광역시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광역시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